
일본 소상공인 증감 동향과 원인 분석

최종보고서

2016. 8.

기 업 경 제 연 구 소

제 출 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일본 소상공인 증감 동향과 원인 분석” 용역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8월

기업경제연구소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와 구성	6
II. 일본 소규모사업자 현황과 동향	9
1. 일본 소규모사업자 현황	9
2. 일본 소규모사업자의 특징	16
3. 일본 소규모사업자의 증감 동향	25
III. 일본 소규모사업자 감소의 원인 분석	35
1. 선행 연구 및 분석 사례	35
2. 일본 소규모사업자 감소 요인의 동향	43
3. 소규모사업자 감소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	67
IV. 시사점 및 정책방향	86
1. 한국 소상공인 동향과 경제·사회 동향	86
2. 일본 소규모사업자 동향의 시사점	102
3. 한국 소상공인 정책방향	109
V. 요약 및 결론	115
1. 요약	115
2. 결론과 향후 과제	118

표 목 차

<표 2-1> 소규모사업자의 정의	10
<표 2-2> 소규모사업자 관련 용어	11
<표 2-3> 기업 수와 종업원 수 (2014.7 기준)	12
<표 2-4> 2012년 대비 2014년 소규모사업자 변화	14
<표 2-5> 일본 소규모사업자의 유형	16
<표 2-6> 일본 소규모사업자의 상시 종업원 유무	17
<표 2-7> 유형별 일본 소규모사업자의 상시 종업원 유무	17
<표 2-8> 업종별 사업체 당 평균 종업원 수	19
<표 2-9> 상담 증가 및 해결 곤란 내용 (최근 3 년간)	22
<표 2-10> 일본 소규모사업자의 업종별 사업소 수 추이	29
<표 2-11> 연대별 매출액 경상이익률 비교	31
<표 2-12> 소규모기업 매출액 경상이익률 추이 (중간값)	32
<표 2-13> 연령대별 자영업주 수 추이	33
<표 2-14> 기업가 연령대별 구성비 추이	34
<표 3-1> 소규모사업자 감소 원인 분석 사례	37
<표 3-2> 주요국의 인구 추이	54
<표 3-3> 주요국의 고령화 비율 추이	55
<표 3-4> 연령대별 자영업주 수 변화 추이	57
<표 3-5> 지역이 안고 있는 과제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	58
<표 3-6> 소매업 연간 판매액 추이	59
<표 3-7> 매장 면적별로 본 소매업 사업소 수의 변화 추이	60
<표 3-8> 지역주민의 제품 구입처	61
<표 3-9> 기업규모별 경영이익 추이	65
<표 3-10> 기업규모별 급여액 추이	66
<표 3-11> 일본 중소기업기본법 개정과정의 배경과 동향	69
<표 3-12> 일본 중소기업정책의 변화	70
<표 3-13> 마치즈쿠리 (거리조성) 3법 개요 (1998)	72
<표 3-14> 일본 「중소기업기본법」 개정과 소규모기업.....	74
<표 3-15> 법률 개정 사례	75
<표 3-16> 분야별 일본 중소기업 관련 법률의 변천.....	79

<표 3-17> 소규모사업자 부문의 과제	85
<표 4-1> 한국 소상공인 수 및 비중 (전체, 중소기업 대비) 추이	91
<표 4-2> 한국 소상공인 수 증감 추이	91
<표 4-3> 한국 소상공인 종사자 수 비중(전체, 중소기업 대비) 추이	93
<표 4-4> 한국 소상공인 부문 종사자 수 추이	94
<표 4-5> 일본 소규모사업자의 감소 개요	103
<표 4-6> 일본 사례가 주는 시사점	107
<표 4-7> 한국 소상공인 문제에 대한 논의의 쟁점	109

그 립 목 차

<그림 1-1> 과업의 목적과 범위	4
<그림 2-1> 일본 소규모사업자 수와 비중	13
<그림 2-2> 일본 소규모사업자 매출액 및 비중	14
<그림 2-3> 일본 소규모사업자 수의 변동 ('12~'14)	14
<그림 2-4> 규모별 사업자 당 평균 종업원 수	18
<그림 2-5> 상권 구분 별 매출 구성 비율	20
<그림 2-6> 일본 소규모사업자의 매출 증가와 감소 원인	21
<그림 2-7> 일본 소규모사업자의 지역경제 애로사항	21
<그림 2-8> 일본 소규모사업자의 유형화	24
<그림 2-9> 소규모사업자 수의 변동	25
<그림 2-10> 일본의 사업자수 추이	26
<그림 2-11> 일본의 사업소 수 추이	27
<그림 2-12> 일본의 주요 업종별 소규모사업소 수 추이	28
<그림 2-13> 일본 소매업 업종별 소규모사업자 수 추이	29
<그림 2-14> 기업 규모별 매출액 경상이익률 비교	32
<그림 3-1> 일본의 실업률 추이	40
<그림 3-2> 인구 증감률과 사업소 증감률의 관계	42
<그림 3-3> 일본의 장기불황 전개 및 확산	44
<그림 3-4> 일본의 수출과 수입 추이	45
<그림 3-5> 소규모사업자 감소 전개과정	47
<그림 3-6> 일본의 경제성장률 추이	52
<그림 3-7> 일본 인구의 연령대별 구성비 추이 (1935~2010)	55
<그림 3-8> 자영업주의 이직 사유	58
<그림 3-9> 일본의 개업과 폐업 추이 (1966~1996)	63
<그림 3-10> 일본 개업률과 폐업률 추이 (1966~2014)	64
<그림 3-11> 일본 경제사회 구조변화와 소규모기업 활성화	68
<그림 3-12> 중소기업 진흥 4대 목표 및 10개 중점시책	80
<그림 3-13> 일본 소규모기업 관계법제의 체계도	81
<그림 3-14> 「소규모사업자지원법」의 체계도	83

<그림 4-1> 자영업자 비율 국제 비교	87
<그림 4-2> 한국 소상공인 수 추이	89
<그림 4-3> 한국 소상공인 종사자 수 추이	89
<그림 4-4> 한국 소상공인 사업체 및 종사자 비중 추이	90
<그림 4-5> 한국 소상공인 업종별 추이 (사업체수)	92
<그림 4-6> 한국 소상공인 사업체 당 종사자 수 추이	95
<그림 4-7> 한국 경제성장률 추이 (1954~2015)	97
<그림 4-8> 한국과 일본의 경제성장률 추이 비교	97
<그림 4-9> 소상공인 안정 성장과 지원정책	112
<그림 4-10> 소상공인 정책방향	112

I. 서론

- 1980년대 중반부터 30년 동안 계속 감소하고 있는 일본의 소규모 사업자와 중소기업 추세가 약 20년 시차를 두고 일본의 경제·산업 발전 경로를 쫓아가고 있는 한국에게 주는 의미에 주목하였음.
- 일본 소규모사업자의 지속적 감소는 경제사회의 구조적·장기적인 변화의 영향 때문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아 왔음.
-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도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인 경제·사회 변화가 소상공인 부문에 주는 영향에 대한 관심과 대응 노력이 매우 부족
- 본 연구는 일본 소규모사업자 동향 파악, 원인 분석 등을 바탕으로 한국 소상공인 부문에 주는 시사점과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함.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인 경제사회 변화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과 대응노력이 매우 부족함.

- 소상공인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존재이며, 순환적 경기변동에는 매우 민감하지만 구조적이고 중장기적 변화로 인한 영향에는 더욱 대응하기 어려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인 경제사회 변화가 소상공인에 어떠한 영향과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관심은 크게 결여되고, 그에 대한 사전 대응노력이 크게 미흡

□ 최근 한국 경제를 둘러싼 변화들이 주목을 끄는 이유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초래하였던 경제사회 현상들이 한국에서도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 한국은 과거 고성장 추세에서 이미 벗어나 잠재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음.

- 또한 최근 낮은 물가로 디플레 우려가 커지고 또 소비심리도 계속 떨어지는 등 유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음.
- 한국은 일본과 유사한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이 성장경로가 20년의 시차를 두고 유사하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됨.
- 한국은 고도성장 과정에서 일본의 기술과 성장 방식을 상당부분 채택하였기 때문에 주력산업의 선택 등 일본과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지게 되었음.
- 일본의 경우,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의 영향으로 악화된 경영환경 때문에 중소기업과 소규모사업자 수가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감소하여 지역경제 또한 쇠퇴하였다고 판단
- 일본 중소기업 어려움의 시발점이었던 국제화, 제조업 경쟁력 약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의 경제사회적 환경은 한국 경제와 기업들도 이미 직면하기 시작
 - 한국과 과거 일본의 유사성을 비교할 때 가장 많이 강조되는 점이 바로 인구고령화에 따르는 노동력 부족 현상
- 30년 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는 일본의 중소기업과 소규모사업자가 20년 시차를 두고 성장경로를 쫓아가고 있다고 지적되는 한국에 어떠한 함의를 줄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논의 과제
- 특히 소상공인 지속 감소를 초래한 과거 일본의 제반 여건과 요인들이 한국의 경우에는 어떠한지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요건과 여건들이 한국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

- 일본 소규모기업의 지속적인 감소가 지역경제의 쇠퇴와 상호 작용을 이루면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새롭게 조명되었으며, 이는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결코 적지 않음.
- 소상공인 부문이 경제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이유는 지역경제의 기반을 이루고 있기 때문임.
- 지역경제의 총합이 국가경제라는 점에서 지역경제는 매우 중요하고, 지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소상공인 부문은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과제임.

2) 연구 목적

- 장기불황,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과 같은 구조적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는 일본 경제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
- 산업, 노동, 기업, 소비자 등 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와 소비 행태 및 패턴까지 바꿈.
- 특히 구조적 변화에 의한 영향은 일시적 또는 순환적 변화에 의한 영향과는 방향이나 크기의 정도가 전혀 다른 차원임.
- 일본의 소규모사업자 수가 1980년대 후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3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의 결과임.
- 소규모사업자는 특히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업체 단위로서, 소규모사업자의 쇠락은 일본의 지역경제의 쇠퇴와 맞물리면서 새롭게 조명되었음.
- 일본의 성장경로와 20년 시차를 두고 있다는 한국 경제의 기반인 소상공인 부문은 여전히 그 수가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소상공인 부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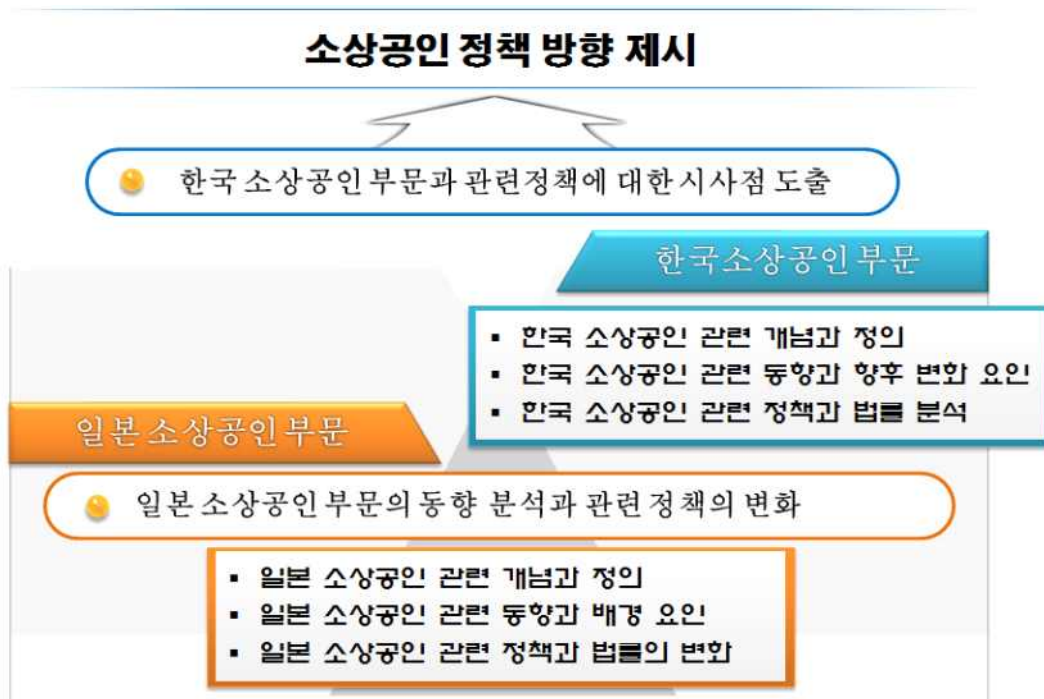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정책적 지원이 단기적인 문제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있고,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한계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경제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그 변화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미흡

□ 본 연구는 일본 소상공인 부문의 동향과 정책 분석을 통해 한국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음.

- 일본 소상공인 동향과 증감 현황, 그 원인 분석을 통해 한국 소상공인 부문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임.
- 경제사회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본 경제 및 일본의 소상공인 부문에 초래한 영향을 통해 한국의 소상공인 부문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임.

<그림 1-1> 과업의 목적과 범위



□ 장기불황, 인구 감소 및 고령화와 같은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한국보다 먼저 겪은 일본의 소상공인 경험을 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 장기불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한국의 경우,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이미 주요 과제로 등장하였고, 특히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어서 일본의 사례분석은 매우 의의가 깊기 때문임.

□ 특히 일본의 구조적인 문제가 소상공인 부문에 미친 영향, 정부의 대응 등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응에 초점을 두고자 함.

- 구조적인 문제 이외의 요인들을 파악하고, 정부 대응 방향과 구체적인 대응책 등 시기별로 파악하여 한국 소상공인 부문과 정부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 소상공인 부문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방향의 모색임.

- 경제사회의 저변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 부문의 안정적 성장이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소상공인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인들이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현실임.

□ 또한 본 연구가 한국 소상공인 부문과 경제사회 구조변화가 소상공인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과 대응 노력의 확산 계기가 될 것을 기대

- 수적으로 지속 증가 추세에 있는 한국의 소상공인이 향후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을 포함한 구조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활용
- 소상공인 분야 정책담당자는 관련 정책 입안에 기초자료로 활용
- 소상공인 관련 학계, 연구기관, 단체 등의 관심을 촉발하고, 이를 통해 향후 지속적인 소상공인 관련 연구 증진을 기대하고자 함.

2. 연구 범위와 구성

1) 연구 범위

☐ 연구는 다음의 주요 내용에 중점을 두었음.

- 일본 소규모사업자 증감 현황 및 원인 분석
- 일본 정부의 대응과 지원정책의 변화
- 한국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

☐ 일본의 소규모사업자 개념 및 범위 정의를 파악하고, 한국 소상공인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였음.

- 일본 소상공인(소규모 사업자) 범위 및 개념 정의
- 통계 분석을 위한 통계적 정의
- 한국 소상공인 범위 및 개념과의 비교

☐ 일본의 소규모사업자 현황과 특징, 동향 등을 사업자 및 종사자 추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과거 10 여년 간 사업자 및 종사자 수 추이
- 주요 거시지표와 연계한 추이 파악
- 사업체수, 종사자 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추이
- 업종별 추이 파악

☐ 일본 소규모사업자 증감에 영향을 미친 경제사회적 요인을 분석하였음.

- 장기불황, 인구 감소 및 고령화, 국제화, 정보기술 발달 등 소상공인 증감에 영향을 미친 사회·경제·문화 등의 요인 분석

□ 일본 소규모사업자 증감에 대한 정부의 대응 내용과 변화를 조사 및 분석하였음.

- 소상공인 증감에 따른 정부정책 변화
- 일본 소상공인 증감에 따른 관련 법률 변화

□ 이상의 내용들이 한국 소상공인 부문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한국 소상공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음.

- 한국 소상공인 부문, 소상공인 정책 등에 대한 시사점, 향후 한국 소상공인 정책방향 제시

2) 본문의 구성

□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일본 소상공인 현황과 동향을 파악하였음,

- 일본 소규모사업자의 정의와 범위, 관련 용어, 한국 소상공인과의 차이점 등을 기술하였음.
- 일본 소규모사업자의 일반적인 현황과 특징 등을 파악하였음.
- 일본 소규모사업자 수 증감 동향과 추이를 조사 자료와 문헌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음.

□ 제3장은 일본 소규모사업자 수를 감소케 한 요인들을 분석하였음.

- 관련 선행연구 자료 및 문헌을 검토하고, 주요 요인들을 파악하여 제시하였음.
- 주요 요인별 세부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그 관계를 도출하였음.

□ 제4장에서는 위의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도출하였음.

- 일본의 사례와 경험을 영향과 대응 관점에서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주요 요인별 한국의 사례를 제시하여 일본의 경험과 사례의 답습 가능성을 파악하였고, 한국의 소상공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음.

□ 마지막 제5장은 이상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하였음.

-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하였음.
- 특히 강조할 점으로서, 관련 내용에 대한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촉구되어야 하며, 후속 연구조사 등이 수반되어야 하고 그 분야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II. 일본 소규모사업자 현황과 동향

- 일본 소규모사업자는 상시 종사자 수에 의해 정의되며, 한국 소상공인 정의와 범위보다 그 폭이 넓음.
- 일본 소규모사업자는 한국 소상공인보다 법인 비중, 상시 종사자를 보유한 업체 비중이 높음.
- 일본 소규모사업자 역시 업체 수 비중이 매우 높은 (85.1%) 반면, 종사자 수 비중은 그보다 낮고 (23.5%), 매출액 비중은 더욱 낮은 (10.1%) 점은 한국 소상공인 부문의 경우와 유사함.
- 일본 소규모사업자 매출액의 약 60%가 해당 지역상권 내에서 발생되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최대 애로사항으로 조사됨.
- 198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던 일본 소규모사업자는 2014년까지 연평균 5.6만 속도로 약 30년 동안 152만 정도 감소하였고, 소규모사업소 수는 198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4년까지 총 108만 감소
- 이러한 일본의 사업소 수 감소는 거의 대부분 소규모사업소 감소의 영향 때문임.
- 일본의 소규모사업자 감소는 ‘소매업(음식점 포함)’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을(1980년대 중반) 뿐만 아니라, 절반 이상 감소(207만 개, 1981년 -> 102만 개, 2014년)하여 가장 많이 감소
- 소매업 중에는 ‘음식점’과 ‘음식료품 소매업’ 소규모사업자가 가장 많이 감소
- 60세 이상 소규모사업자 비중이 대폭 증가한 반면, 30세 미만 소규모사업자 비중은 대폭 감소

1. 일본 소규모사업자 현황

1) 일본 소규모사업자 정의와 범위

□ 일본의 소규모기업자는 한국의 소상공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상시 종업원 수에 의해 법률에 근거하여 정의됨.

- 일본의 소규모기업자는 한국의 소상공인과 유사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그 범위의 차이가 존재하며, 다양한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

되고 있음.

- 일본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하면, “소규모기업자는 대체로 상시 종업원 수가 20명 (상업 또는 서비스업은 5명) 이하의 사업자”로 규정되어, 한국의 소상공인보다 범위의 폭이 넓은 개념임.

<표 2-1> 소규모사업자의 정의

업종	중소기업기본법의 정의			소규모기업진흥기본법의 정의	
	중소기업자			소규모기업자	소기업자
	자본금 또는 상시 종업원	상시 종업원		상시 종업원	상시종업원
①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기타 업종 (②~ ④를 제외한)	3억엔 이하	300인 이하	20인 이하	20인 이하	5인 이하
② 도매업	1억엔 이하	100인 이하	5인 이하	5인 이하	5인 이하
③ 서비스업	5천만엔 이하	100인 이하	5인 이하	5인 이하	5인 이하
④ 소매업	5천만엔 이하	50인 이하	5인 이하	5인 이하	5인 이하
우측 업종은 중소기업 관련 입법의 정령에 따라 달리 규정 (정령 특례 업종)	[중소기업자] ① 제조업 중 고무제품 제조업 : 자본금 3억엔 이하 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900명 이하 ③ 서비스업 중 소프트웨어업, 정보처리서비스업 : 자본금 3억엔 이하 또는 상시 사용하는 직원 300명 이하, 여관업 : 자본금 5천만엔 이하 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200명 이하 [소규모기업자] ③ 서비스업 중 숙박업 및 오락업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20명 이하				

자료 : 2016년판 일본 중소기업백서

- 소규모기업자의 법적 위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5항 및

「중소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중소기업진흥기본법」에서는 “대체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5인 이하인 사업자를 소기업자”로 규정되어 있음.

* 아래 표에서 보듯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숙박업 및 오락업 등 업종의 경우, 한국의 소상공인 경우보다 범위가 넓음.

<표 2-2> 소규모사업자 관련 용어

구 분	정 의
소규모 기업가	■ 대체로 상시 종업원 수가 20명 (상업 또는 서비스업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사람의 경우 5명)이하의 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5항) - 각 법률이나 지원 제도에 있어서 정의가 다른 경우가 있으며, 중소기업청의 시책에 「소규모사업자」라고도 표기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소규모기업가에 포함되는 농림어업자, 의사는,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에 의한 소규모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하는 소규모사업자에게 포함되지 않음.
소규모 사업자	■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에 의한 소규모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하는 상공회·상공회의소의 지원대상이 되는 소규모인 상공업자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에 규정하는 녹색신고를 하는 부동산 소득 금액 및 사업소득 금액 합계액수가 300만 엔 이하의 사업자 등
자영업 주(자)	■ 개인경영을 하는 상점주·공장주인·농업주 등의 사업주나 개업변호사·저술가·행상 종사자 등 - 단, 법인조직(주식·합자·합명의 각 회사) 상점 경영자의 경우 ‘회사·단체 등의 임원’으로 봄. ※ 가족종업자는 농가나 개인상점 등에서 농업이나 가게의 일 등을 돕고 있는 가족을 말함.
개인 사업주	■ 주식회사 등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스스로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을 지칭하며, 자영업자와 같은 의미로 쓰임. - 사업주 개인이나 가족, 혹은 소수의 종업원으로 이루어진 소규모경영이 일반적이지만,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 기업체를 경영할 수 없는 것은 아님. - 고용된 사람은 개인사업주가 아니지만, 지속적인 하청이나 납입업자, 대리점 등 고용이 아닌 계약에 의해 다른 사람의 사업에 종속된 사람은 독립 경영으로, 그것이 법인이 아니면 개인사업주임. - 즉, 개인사업주란 회사경영자, 셀러리맨, 공무원, 아르바이트, 무직이 아닌 사람의 총칭

주 : 자영업자가 사회적인 통용되는 일반적 호칭인 것에 비해, 개인사업주는 법률(세법)상의 분류로서 사용되는 법적인 통칭

- 개인사업주는 자영업자에 포함되지만 자영업자라고 해서 개인사업주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 개인사업주가 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반면, 자영업자는 법인도 대상에 포함되며, 특히, 확정 신고 수속을 할 때 양자는 엄밀하게 구분됨.

□ ‘소규모기업백서’에서는 여기에 정의된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 중에는 ‘회사’(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포함

- 때문에 법적 용어로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소규모기업자’를 ‘소규모사업자’라 함.
- 또한 ‘중소기업백서’에서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중소기업 사업자를 지칭할 때 ‘중소사업자’라 함.
- 이처럼 일본에서는 소규모기업자와 관련한 다수의 용어가 실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

2) 일본 소규모사업자 일반현황

(1) 통계적 현황

□ 일본의 소규모사업자 수는 325.2만으로 전체 일본 기업 수의 85.1%를 차지하고 있음 (2014년 7월 기준).

- 한편 소규모사업자 종사자 수는 1,127만 명으로 전체 종사자 수 4,614만 명 중 약 23.5%를 차지
- 2014년 소규모사업자의 매상고(매출액)는 121.9조 엔으로 전체 기업 매상고(매출액)의 10.1%에 불과한 수준

<표 2-3> 기업 수와 종업원 수 (2014.7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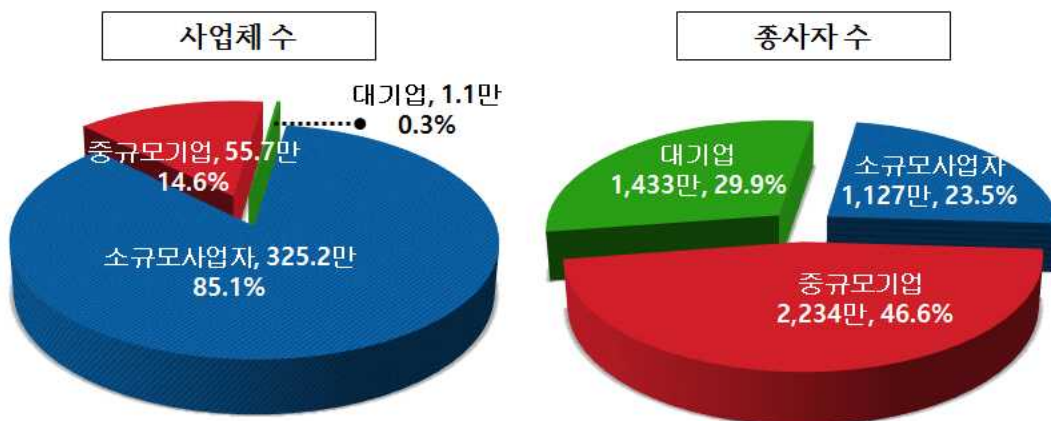
	기업 수	종업원 수	매출액 (조엔)
전체	382.0만 (100.0%)	4,794만 (100.0%)	1205.9 (100.0%)
대기업	1.1만 (0.3%)	1,433만 (29.9%)	682.5 (56.6%)
중소기업	380.9만 (99.7%)	3,361만 (70.1%)	523.4 (43.4%)
소규모사업자	325.2만 (85.1%)	1,127만 (23.5%)	121.9조 (10.1%)

자료 : 「헤세이 26년 경제센서스-기초조사」 재편·가공

□ 중소기업을 소규모사업자와 중규모기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소규모사업자의 수적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종사자 수 비중은 현저히 낮음.

- 기업체 수의 경우, 소규모사업자는 전체의 85.1%, 중규모기업은 14.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소규모사업자가 23.5%, 중규모기업이 46.6%로 약 2배 수준임.

<그림 2-1> 일본 소규모사업자 수와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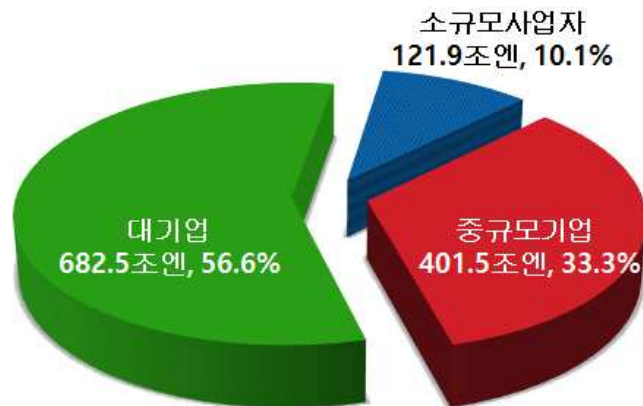
자료 : 일본 중소기업청, 「소규모기업백서」, 2016

□ 한편 소규모사업자의 매출액(매상고)은 중규모기업 매출액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중규모기업에 의한 매출액이 401.5조엔으로 전체 기업 매출액의

33.3%를 차지한 반면, 소규모사업자의 매출액은 121.9조엔으로 중 규모기업 매출액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수준임.

<그림 2-2> 일본 소규모사업자 매출액 및 비중



자료 : 일본 중소기업청, 「소규모기업백서」, 2016

(2) 2012년~2014년 변화

□ 최근 2012~2014년 기간 동안 소규모사업자의 수와 종사자 수는 감소하였고, 매출액은 거의 변화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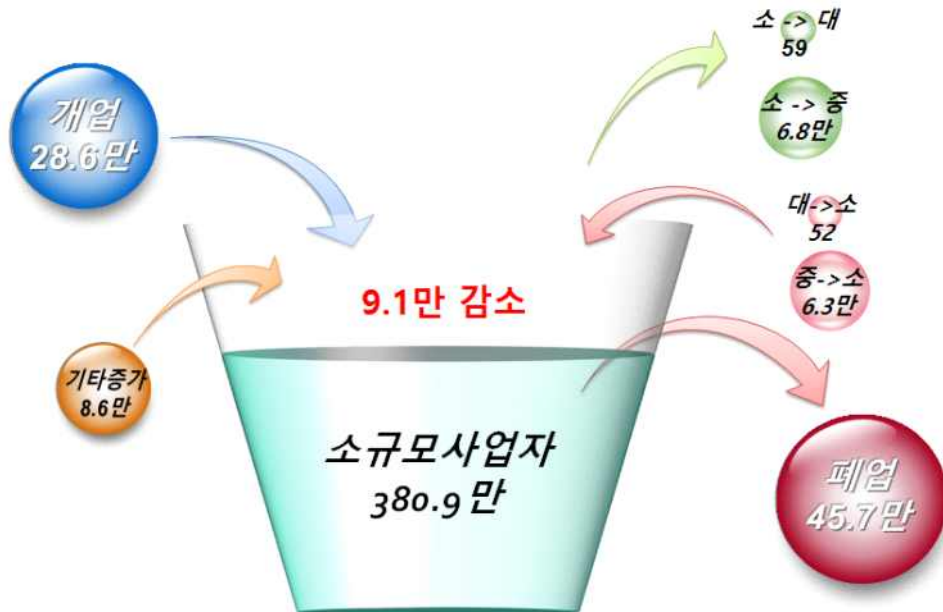
- 동 기간 동안 소규모사업자의 수는 9.1만, 종사자 수는 65만 각각 감소하였고, 매출액이 증가한 하였으나, 그 수준이 0.2조엔 증가하는 정도에 그침.

<표 2-4> 2012년 대비 2014년 소규모사업자 변화

	2012	2014	증감
기업 수	334.3만	325.2만	▲ 9.1만 (▲ 2.7%)
종사자 수	1,192만	1,127만	▲ 65만 (▲ 5.5%)
매상고 (엔)	121.7조	121.9조	0.2 증가 (0.16%)

자료 : 「헤세이 26년 경제센서스-기초조사」 재편·가공

<그림 2-3> 일본 소규모사업자 수의 변동 ('12~'14)



자료 : 일본 중소기업청, 「소규모기업백서」, 2016, 가공편집.

- 창업과 폐업 수가 소규모사업자 수의 변화를 주도했으며, 위 기간 동안에는 폐업 수가 창업 수를 크게 초과하였음.
 - 폐업 수(45.7만)가 개업 수(28.6만)보다 월등히 많았고,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음.
 - 소규모기업이 규모 확대로 인해 중규모기업이나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소규모기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있는 한편, 대기업이나 중규모기업이 규모가 축소되어 소규모기업으로 분류된 경우도 있음.
- 소규모사업자의 이러한 감소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부문의 변화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
 - 기업 수적인 면에서는 대기업은 거의 변화가 없고 (1.1만 -> 1.1만), 중소기업이 4.4만 감소한 것은 (385.3만 -> 380.9만), 소규모사업자가 9.1만 감소 (334.3만 -> 325.2만)한 것 때문임.
 - 종사자 수의 경우, 대기업은 증가 (1,397만 -> 1,433만)하였고, 중

소기업도 증가한 (3,217만 -> 3,361만) 반면, 소규모사업자는 감소 (1,192만 -> 1,127만) 하였음.

- 중소기업 매출고가 518.8조 엔에서 523.4조 엔으로 약4.6조 엔 증가 (0.9%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 중규모기업의 매출고가 397.1조 엔에서 401조 엔으로 약4.4조엔 증가 (1.1% 증가)
- 반면에 소규모사업자의 매출고는 121.7조 엔에서 121.9조 엔으로 약0.2조 엔 증가 (0.1%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증가

2. 일본 소규모사업자의 특징

1) 일반적 특징

□ 일본의 소규모사업자는 한국의 소상공인의 범위에 비해 그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음.

- 특히 제조업의 경우에 주목되는데, 종사자 수 기준으로 20명 이하이기 때문에 한국보다 그 범위가 2배 넓음.
- 서비스업 중 숙박업 및 오락업의 경우에도 특례업종으로 인정되어 상시 활용하는 종업원 수를 20명 이하로 규정

□ 법인의 비중이 한국의 경우에 비해 매우 높으며, 앞서 언급한 대로 소규모사업자를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구분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전체 중소기업 354만 중에서 개인기업이 305만으로 86.2%를 차지하고, 법인기업은 13.8%에 불과
- 일본의 경우에는 소규모기업 중 법인이 40% 수준임을 감안하면, 한국보다 월등히 높을 것으로 판단됨.

<표 2-5> 일본 소규모사업자의 유형

(단위 : 만명)

소규모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
325.2 (100.0%)	197.3만 (60.7%)	127.9만 (39.3%)

출처 : 총무성, 「헤세이 26년 경제 센서스-기초 조사」 재편·가공

□ 소규모사업자 중에서 상시 고용자를 보유한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소규모사업자 325.2만 중에서 상시 종업원을 보유한 소규모사업자가 55.8%에 해당되는 181.4만임.
- 소규모사업자를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구분하여 상시 종업원 유무를 파악한 결과, 법인의 3/4 정도가 상시 종업원을 두고 있는 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42.7%만 상시 종업원을 두고 있음.

<표 2-6> 일본 소규모사업자의 상시 종업원 유무

	소규모사업자 수 (만명)	구성비 (%)
상시 종업원 없음	143.9	44.2
상시 종업원 있음	181.4	55.8
합 계	325.2	100.0

출처 : 상동

<표 2-7> 유형별 일본 소규모사업자의 상시 종업원 유무

(단위 : 명)

	개인사업자	법인
상시 종업원 없음	113.1만 (57.3%)	30.8만 (24.1%)
상시 종업원 있음	84.3만 (42.7%)	97.1만 (75.9%)
합 계	197.3만 (100.0%)	127.9만 (100.0%)

출처 : 상동

□ 이상의 차이 때문에, 소규모사업자 당 평균 종사자 수 규모가 3.5명으로 한국 소상공인의 경우 (1.97명)에 비해 약 1.8배 큰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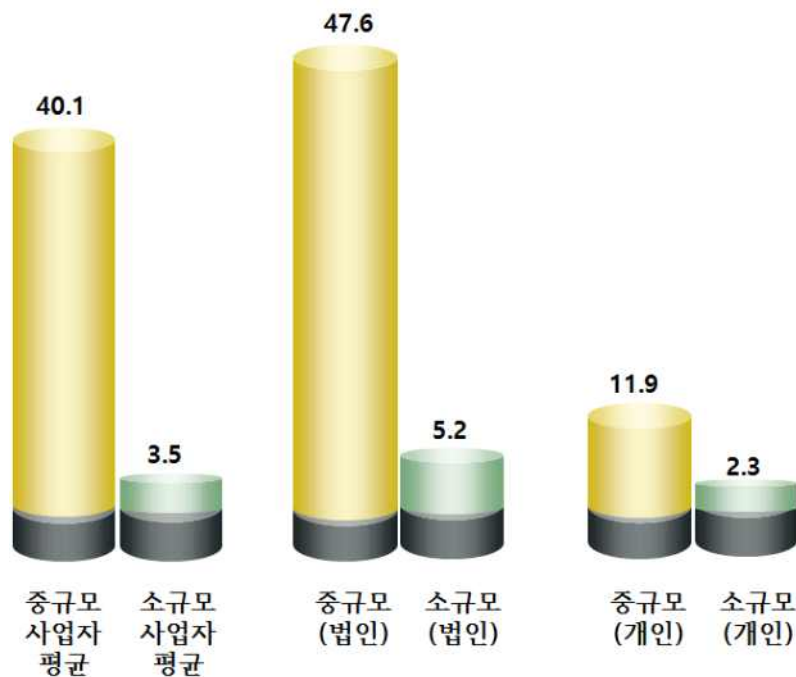
- 일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당 평균 종업원 수가 3.5명이며,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중소기업 (중규모기업) 당 평균 종업원 수는 40.1명 수준임.

- 한국의 경우 소상공인 사업자 당 평균 종업원 수는 1.97명이고, 이를 제외한 중소기업 당 평균 종업원 수는 16.7명으로 일본과는 큰 격차가 있음.

□ 한편 소규모사업자를 개인기업과 법인으로 구분한 사업자 당 평균 종업원 수는 법인의 경우가 개인기업의 2배 이상임.

- 법인 소규모사업자의 평균 종업원 수는 5.2명인데 비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3명
- 특이한 점은 소규모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의 사업체 당 종업원 수가 개인의 2배가 다소 넘는 정도인 반면, 중규모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이 개인의 4배 이상임.

<그림 2-4> 규모별 사업자 당 평균 종업원 수



출처 : 총무성 「헤세이 26년 경제센서스-기초 조사」 재편·가공

□ 한편 소규모사업자 사업체 당 평균 종사자 수를 업종별로 보면, 광업·채석업·자갈채취업 (7.3명), 운수업·우편업 (7.1명) 등의 업종이 가장 많음.

- 반면에 교육·학습지원업 (2.2명), 생활관련 서비스업·오락업 (2.3명), 부동산업, 물품임대업 (2.5명), 복합 서비스업 (2.6명) 등은 평균 종사자 수가 적은 종들임.

<표 2-8> 업종별 사업체 당 평균 종업원 수

업종	소규모사업자 당 평균 종업원 수 (명)
도매업, 소매업	2.8
숙박업, 음식업, 서비스업	3.0
건설업	5.1
제조업	5.6
생활관련 서비스업, 오락업	2.3
부동산업, 물품임대업	2.5
학술 연구, 전문·기술서비스업	2.7
의료, 복지	3.2
서비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것)	3.2
교육, 학습지원업	2.2
운수업, 우편업	7.1
정보통신업	3.8
금융업, 보험업	3.9
복합 서비스업	2.6
광업, 채석업, 자갈채취업	7.3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	6.5
전체 평균	3.5

출처 : 총무성 「헤세이 26년 경제센서스-기초 조사」 재편·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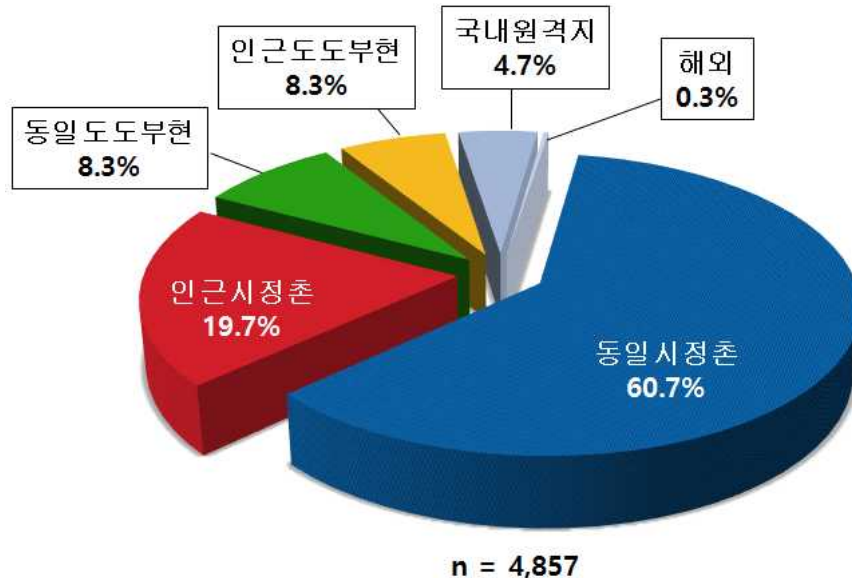
2) 사업 활동의 특징

□ 소규모사업자는 주로 지역 상권을 기반으로 사업 활동을 하는 존재임.

- 소규모사업자 매출의 약 60%가 ‘동일 지역권(시정촌)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 매출이 증가 추세에 있는 사람은 약 70%가 상권이 확대 추세에 있는 반면, 매출이 증가세로 상권이 감소 추세에 있는 사람은 1.8%에 불과해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상권의 확대가 필요함

을 지적함.

<그림 2-5> 상권 구분 별 매출 구성 비율



자료 : 중소기업청 위탁 '소규모사업자의 사업활동 실태파악 조사', 2016년 1 월, (주) 일본 어플라이드 리서치 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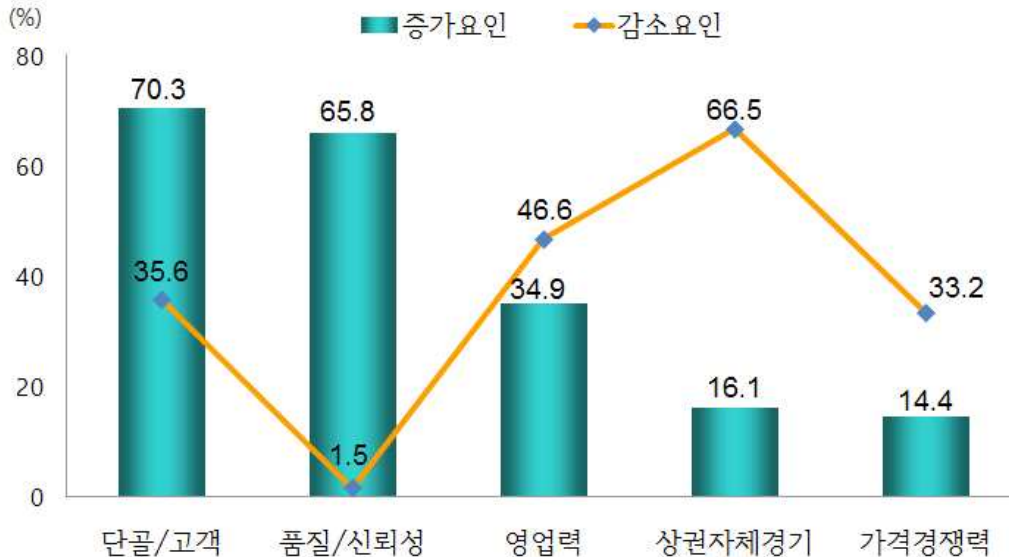
- 주 : 1. '인근 시정촌'은 주된 사업소 있는 '동일시정촌'의 행정구역과 접해있는 (동일 도시의) 시정촌 전부를 말함.
2. '인근도시'란 '동일도도부현'의 행정구역과 접해있는 도시 전체
3. 본 그림의 구성 비율은 4,857의 소규모 사업자마다의 상권 구분별 매출구성 비율을 단순 평균한 것임.

□ 소규모사업자의 매출 증감은 '고객' 과 '상권 자체 경기'에 의해 크게 좌우됨.

- 매출 증가세인 경우, '고객과 단골고객이 있다', '상품·서비스의 품질과 신뢰성' 등이 상위 요소에 들어있는 반면, 매출 감소인 경우, '상권 자체 (거래처 나 고객)의 경기가 나쁘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음.
- 매출 증가 소규모사업자 응답 (1,338명) 중에서 '단골 고객과 고객의 유무' (70.3%)와 '상품·서비스의 품질과 신뢰성' (65.8%)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음.
- 반면에, 감소 원인으로는 응답자 (1366명)의 66.5%가 '상권 자체

(거래처나 고객) 경기가 나빠서' 로 응답

<그림 2-6> 일본 소규모사업자의 매출 증가와 감소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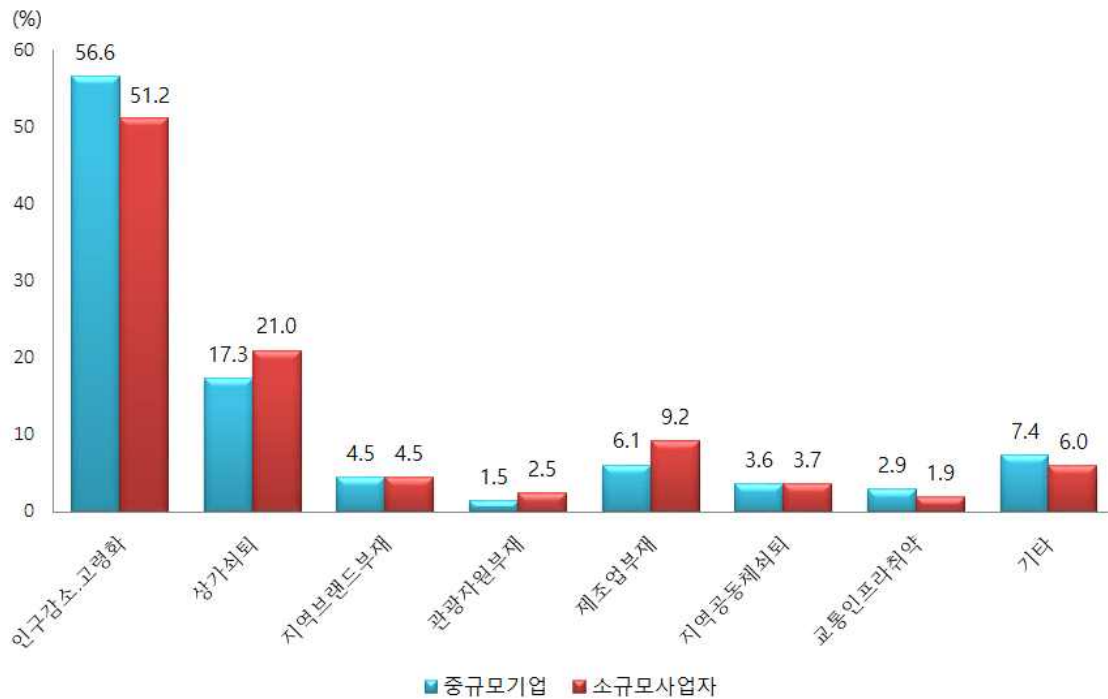


자료 : 일본 중소기업청, 「소규모기업백서」, 2016

□ 소규모사업자의 지역경제 최대 애로사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조사되었음.

- 일본 중소기업청이 위탁한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가장 큰 지역경제 애로사항으로는 ‘인구감소·고령화’의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이 ‘상가쇠퇴’, ‘제조업 부재’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구감소·고령화’의 응답비중이 중규모기업에 비해 다소 적은 한편, ‘상가쇠퇴’ 및 ‘제조업 부재’ 등의 응답비중은 높게 조사됨.

<그림 2-7> 일본 소규모사업자의 지역경제 애로사항



자료 : 일본 중소기업청 위탁조사, 2013.12.

□ 상담 및 지도 내용에 의하면, ‘폐업’이 가장 증가하고 있는 한편, ‘인재 확보 및 육성’이 가장 해결이 어려운 과제로 나타남.

- 경영지도원이 상담·지도 대응을 실시한 내용 중, 증가 추세에 있는 주요 상담내용은 ‘폐업’, ‘판로개척’, ‘시장조사·사업계획의 수립검토’ 등임.
- 한편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담내용은 ‘인재 확보·육성’,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판로개척’ 등임.
- 또한 상담 건수는 적지만 해결이 어려운 상담내용으로 ‘제2창업(업종 전환, 새로운 분야 진출)’을 들 수 있음.

<표 2-9> 상담 증가 및 해결 곤란 내용 (최근 3년간)

	‘상담 증가 추세’	‘해결 곤란 추세’
폐업 (n=4,510)	69.8	21.8
판로개척 (n=3,985)	54.9	50.1
시장조사, 사업계획의 수립·검토 (n=3,164)	46.1	41.6
신제품·서비스 개발 (n=3,252)	45.0	50.5
IT 활용 (n=3,618)	44.6	30.5
사업승계 (n=3,550)	43.4	42.5
인재 확보·육성 (n=2,880)	39.1	52.4
기존 제품·서비스 개선 (n=2,874)	37.1	42.1
起業 (n=3,622)	34.0	25.2
대출·신용보증 (n=4,480)	27.4	19.1
업무 효율화 (n=3,194)	24.2	27.2
세무·회계 (n=6,017)	23.4	25.2
제2창업 (업종전환, 신분야 진출) (n=1,831)	21.4	38.4
미수금 회수 (n=1,687)	12.5	28.9

자료 : 중소기업청 위탁 '경영 지원 활동에 관한 실태 파악 조사', 2016년 1월, (주) 일본 어플라이드 리서치 연구소

: 2016년 일본 「소규모사업자백서 개요」에서 재인용

주 : n 값은 최근 1년 간 상담 실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영지도원 수임.

□ 향후 목표 시장을 기준으로 소규모사업자를 분류한 유형화에 의하면, 대부분의 소규모사업자가 ‘지역 수요 지향형’인 것으로 나타남.¹⁾

- 소규모사업자를 ‘향후 목표 시장 (판매처 거래처)’, ‘향후의 조직 형태의 의향’에 따라 유형화한 결과에 따르면, 소규모사업자의 약 80%가 ‘지역 수요 지향형’인 것으로 파악됨.
- 또한 향후 조직 형태의 의향에 따른 유형화에서는 소규모사업자의 약 80 %가 ‘유지·충실형’인 것으로 나타난 결과, 대부분의 소규모사업자가 지역에 근거를 두고 지속적인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지역수요 지향형’은 향후 목표 시장을 같은 도시, 인접 도시, 동일

1) 전국상공회연합회가 2013년 10월 상공회 회원기업 18,078 개사에 대해 실시한 방문 설문 조사를 통해 소규모사업자의 유형화를 실시 (2014년 중소기업백서 참조)

한 도시 등으로 하는 기업을 말하며, ‘유지·충실형’은 기존의 조직 형태를 유지하면서 ‘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지향하는 기업을 말함.

<그림 2-8> 일본 소규모사업자의 유형화



출처 : 2014년 일본 중소기업백서, 2015년판 소규모기업백서 제4장.

□ 이와 같은 조사 및 분석은 지역과 소규모사업자가 표리일체의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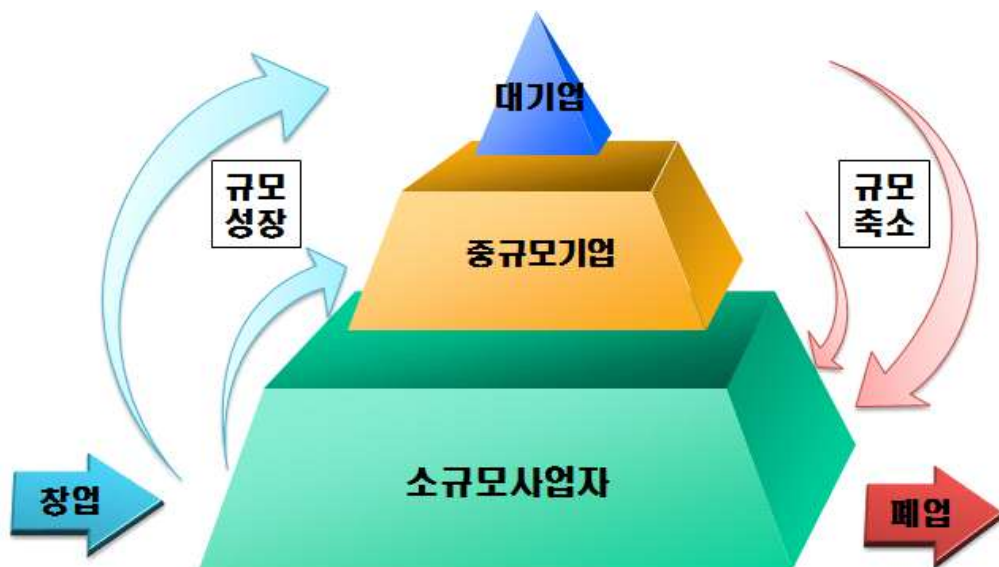
- 소규모사업자가 지역 경제의 담당자인 한편, 지역에서 소규모사업자가 역동적으로 생존해 가기 위해서는 지역에 일정한 수요가 유지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지역의 인구 감소는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폐업이 늘어나는 등 지역의 수요뿐만 아니라 소규모사업자의 사업 활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임.

3. 일본 소규모사업자의 증감 동향

1) 사업체 수의 변화

- 일정기간 동안의 사업체 수 변동은 창업기업 수와 폐업기업 수에 의해서 주로 결정되지만, 규모의 확대와 축소 등에 의해서도 달라짐.
- 소규모사업자 수가 일정기간 동안에 증가하는 경우는 신규 창업 수, 기존의 중규모기업 또는 대기업이 규모축소에 의해 소규모기업이 되는 경우에 발생
- 반면에 소규모사업자 수가 일정기간 동안에 감소하는 경우는 폐업이나 기존의 소규모기업이 규모가 커져서 중규모기업 또는 대기업이 되는 경우에 발생함.

<그림 2-9> 소규모사업자 수의 변동



- 한편 소규모사업체 종사자 수 변동은 이보다 많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음.
- 즉, 위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 이외에, 각각의 경우에 사업체

수 평균 종사자 수가 종사자 수 변동에 영향을 미침.

- 또한 일정기간 동안에 산업구조의 변화 정도도 종사자 수 변동에 영향을 미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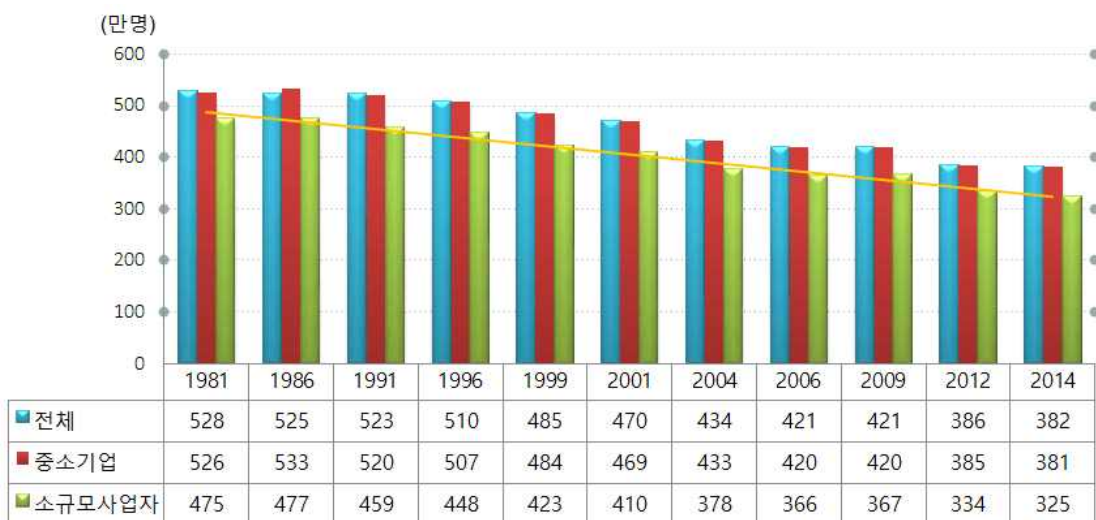
2) 일본 소규모사업자 증감 동향

(1) 일본 소상공인 증감 추세

□ 일본의 소규모사업자 (법인 + 개인사업자) 수는 1986년 약477만 명을 피크로 감소로 돌아섰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 2014년 약325만 명과 비교하면, 27년 동안 약 152만 명 감소하였음.
- 27년 동안 연간 평균 5.6만 명의 페이스로 감소한 셈이지만,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최근 4년 동안에는 약 42만 명이 감소하여 연평균 10.5만 명이 감소하여 최근 더욱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음.

<그림 2-10> 일본의 사업자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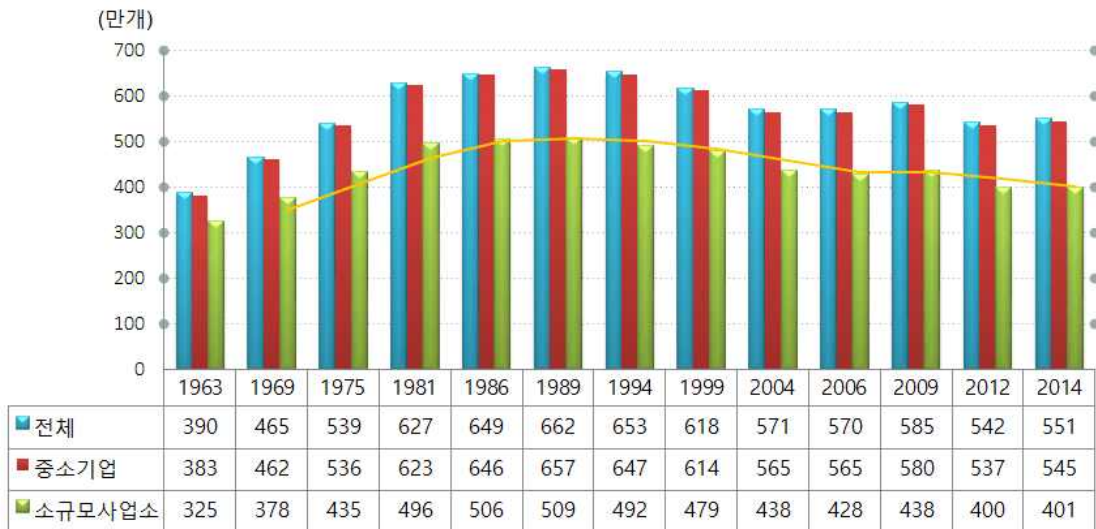
자료 : 일본 중소기업청, 「소규모기업백서」, 2016

□ 소규모사업소 수는 1980년대 말까지는 계속 증가하다가 1989

년에 약 509만사업소로 피크를 기록한 이후 지속 감소하였음.

- 1989년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14년에 401만 사업소를 기록, 24년 동안 약 108만사업소가 감소하여, 연간 4.5만 사업소가 감소한 셈임.

<그림 2-11> 일본의 사업소 수 추이



자료 : 일본 중소기업청, 「소규모기업백서」, 2016

출처 : 총무성, 「사업소·기업 통계조사」, 「헤세이 21년 경제센서스-기초조사, 총무성 경제산업성, 「헤세이 24년 경제센서스-활동조사」 재편·가공

- 주 : 1. 1991년까지는 「사업소통계조사」 (1989년은 '사업장 명단 정비'), 1994년은 '사업장 명단 정비조사'로 진행
 2. 사업소 기반이며, 사업소를 명기한 기업 기반이 아님..
 3. 2012년의 수치보다 중소기업 및 소규모사업자의 사업소에 정령 특례업종을 반영
 4. '소규모 사업장'은 1996년 이전에는 사업소 통계에서 '사업소의 종업원 총 19명 이하, 또는 4명 이하' 공표 값을 사용. 1999년 이후에는 사업소·기업 통계조사, 경제 센서스 개표 재편·가공하여 '사업장의 종업원 총 20명 이하 또는 5명 이하' 값을 이용.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기준 (상용 고용자 20명 이하 (일부 업종은 5인 이하))과는 차이가 있음.

□ 1989~2014년 동안의 소규모사업소 감소가 사실상 전체 사업소 감소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동 기간 동안 소규모사업소 감소 수(약 108만 개)는 전체 사업소 감소 수(약 111만 개)의 97.3%를 차지

- 전체 사업소 수가 662만 개에서 551만 개로 111만 개 감소 (16.8% 감소)
- 중소기업 사업소는 657만 개에서 545만 개로 112만 개 감소 (17.0% 감소)
- 소규모사업소 수는 509개에서 401만 개로 105만 개 감소 (20.6%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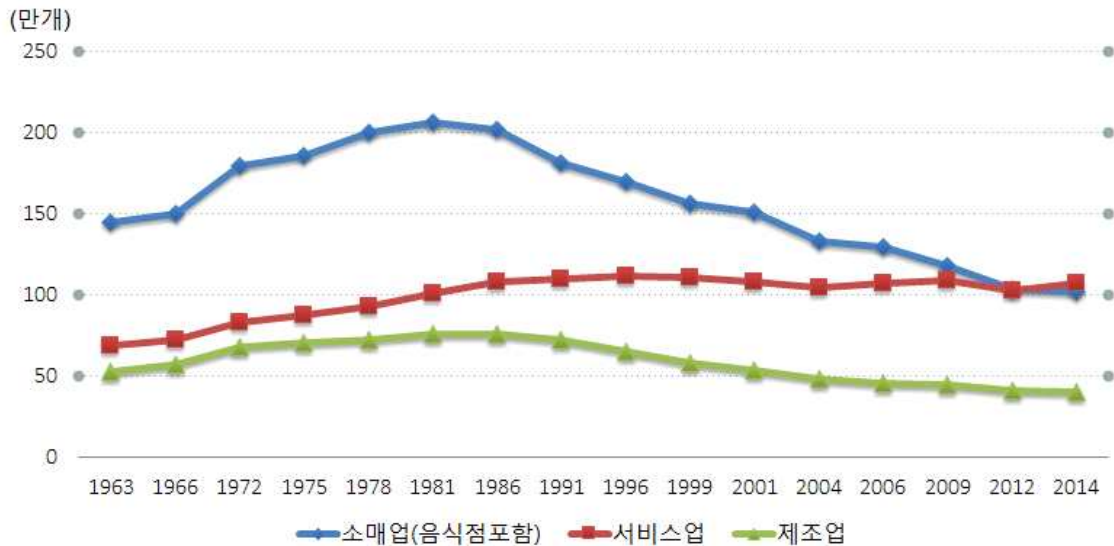
□ 이러한 소규모사업자 감소에 대해서 최근에도 일본 정부 부처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임.

- 내각부 「연차경제재정보고」(2011.7)에서 자영업자의 감소에 대해 언급
- 중소기업청 보고서 「개인사업주를 둘러싼 현황과 사업승계를 위한 과제에 대하여」(2014.4)에서 개인사업주 용어를 사용하여 감소에 대해 언급
- 중소기업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중소기업백서와 소규모기업백서(2015년부터 발행 시작)에서도 소규모기업의 감소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 업종별로 가장 수가 많은 소매업(음식점 포함) 소규모사업소의 경우, 다른 업종보다 먼저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감소하였음.

- 소매업은 1980년대 중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수가 207만 개('81)에서 102만 개(' 14)로 절반 이상 감소
- 한편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감소 시작하였고, 제조업의 경우에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감소 추세
-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운수·통신업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업종의 소규모사업소 수가 감소 추세

<그림 2-12> 일본의 주요 업종별 소규모사업소 수 추이



자료 : 일본 중소기업청, 「소규모기업백서」, 2016

<표 2-10> 일본 소규모사업자의 업종별 사업소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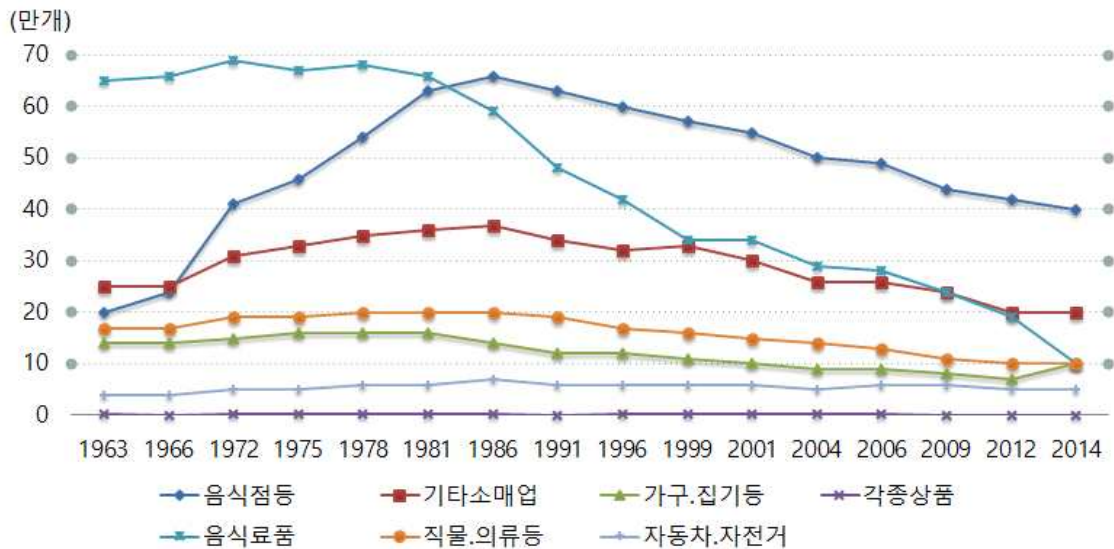
(단위 : 만개)

구 분	63	66	72	75	78	81	86	91	96	99	01	04	06	09	12	14
소매업 (음식점 포함)	145	150	180	186	200	207	202	182	170	157	151	133	130	118	104	102
서비스업	69	73	83	88	93	101	108	110	112	111	108	105	107	109	103	107
건설업	22	26	37	40	45	50	53	55	59	56	56	52	51	55	49	48
제조업	53	57	68	71	73	76	76	73	65	58	54	48	46	45	41	40
부동산업·금융 보험업	12	15	19	22	26	29	32	36	37	36	40	38	38	44	41	41
도매	16	16	17	19	20	22	23	22	20	20	18	18	17	20	18	19
운수·통신업	6	7	7	8	9	10	11	12	12	12	14	13	14	17	15	14
광업·전기·가스 ·열공급·수도	2	1	1	1	1	1	1	1	1	1	0.5	0.4	0.4	0.5	0.4	0.5

□ 가장 사업소 수가 많은 소매업 (음식점 포함) 중에서 1986년 이후 ‘음식점 등’ 을 비롯한 ‘음식료품 소매업’ 이 가장 많이 감소

-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가장 수가 많았던 ‘음식료품 소매업’ 사업소가 가장 빨리 감소를 시작하여 가장 많이 감소
- 한편 1980년 중반까지 급증하던 ‘음식점 등’ 은 이후 지속 감소

<그림 2-13> 일본 소매업 업종별 소규모사업자 수 추이



자료 : 일본 중소기업청, 「소규모기업백서」, 2016

(2) 일본 소규모기업의 경영성과 동향

□ 재무성과(매상고 대비 경상이익) 상위 25%에 해당하는 법인기업은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중규모기업, 소규모기업의 순임.

- 1980년대부터 2010년 이후까지의 성과를 보면, 대기업의 경우 1990년대가 1980년대보다 다소 낮아진 것을 제외하면 모두 재무성과가 향상되었음을 보여줌.
- 기업규모별 성과의 순위가 역전되는 경우가 없고 계속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음.

□ 하위 25%에 해당하는 기업 역시 소규모기업의 성과가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중규모기업, 대기업 순임.

- 주목되는 점은 소규모기업의 경우, 상위 25%에 해당하는 기업과 하위 25%에 해당하는 기업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다른 규모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커지고 있음.

<표 2-11> 연대별 매출액 경상이익률 비교

(단위 : %)

	소규모기업			중규모기업			대기업		
	상위 25%	하위 25%	격차	상위 25%	하위 25%	격차	상위 25%	하위 25%	격차
1980 년대	9.4	▲10.5	20.0	11.1	▲7.4	18.6	14.1	▲7.0	21.1
1990 년대	10.6	▲15.1	25.7	11.5	▲9.9	21.3	13.9	▲9.8	23.7
2000 년대	13.5	▲19.7	33.2	13.6	▲12.0	25.7	17.0	▲7.9	24.8
2010년 이후	16.5	▲18.6	35.1	16.4	▲12.8	29.2	19.7	▲7.1	26.8

주 : 1. 대기업은 자본금 1억엔 이상의 기업, 중견 기업은 자본금 1천만엔 이상~1억엔 미만의 기업, 소규모기업은 자본금 1천만엔 미만을 말함.

2. 각 계열은 HP (Hodrick-Prescott) 필터에 의해 평활화 한 값을 이용

3. 매출액 경상 이익률이 100% 이상 또는 -100% 미만의 값은 이상치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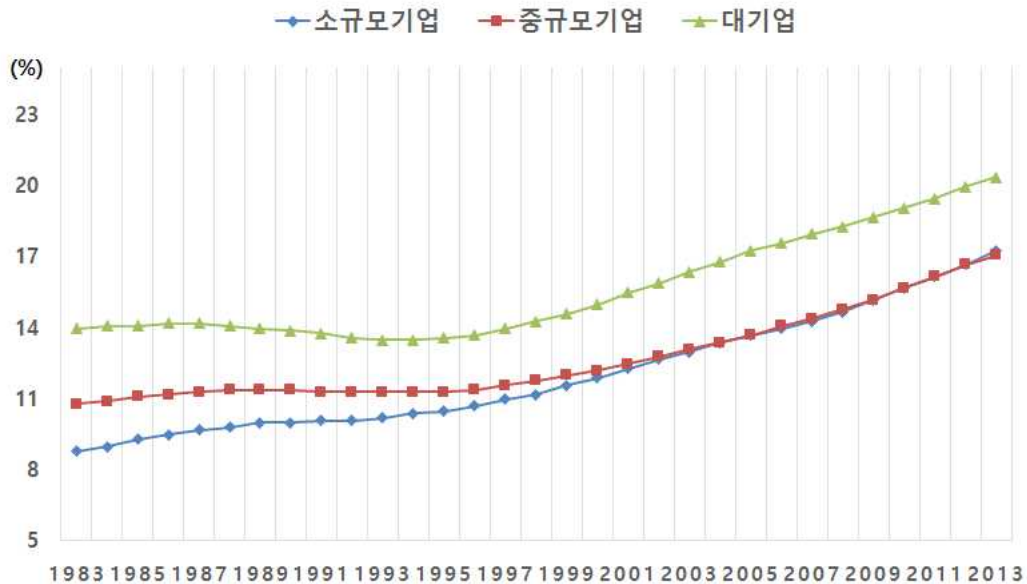
출처 : 일본 중소기업청, '2015년판 일본 소규모기업백서'

자료 : 재무부 '법인기업 통계조사 연보' 재편·가공

□ 상위 25%에 해당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연도별 재무성과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음.

- 기업규모를 막론하고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이 대체로 상승 추세이며, 1990년대 들어서 중반까지는 상승세가 다소 하락 또는 유지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음.
- 대기업의 재무성과는 큼 격차를 두고 항상 높으며, 대기업과 중규모기업 및 소규모기업의 격차가 1990년대 중반이후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중규모기업과 소규모기업의 격차는 축소되다가 2000년대 초반이후에는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특징들은 상위 25%만을 대상으로 한 성과의 비교이기 때문에, 앞서 지적한대로 각 규모별로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일 것임.
- 또한 개인기업은 제외한 법인기업의 경우이기 때문에 개인기업이 많고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에 비해 성과가 낮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소규모기업의 성과가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됨.

<그림 2-14> 기업 규모별 매출액 경상이익률 비교
(매출액 경상이익률 상위그룹 25%)



□ 소규모기업의 최근 매출액 경상이익률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높아지고 있으나, 업종별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서비스업의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 추세가 주목됨.
-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경상이익이 거의 없는 수준을 유지

<표 2-12> 소규모기업 매출액 경상이익률 추이 (중간값)

(단위 :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산업	0.8	0.6	0.3	0.2	0.6	1.0	1.3	1.5
제조업	0.8	0.6	0.1	▲0.9	0.0	0.5	0.7	0.9
도소매업	0.0	0.0	0.0	0.0	0.0	0.0	0.0	0.2
서비스업	0.2	0.0	0.0	0.0	0.6	1.2	1.5	1.3
건설업	0.7	0.5	0.3	0.2	0.3	0.4	0.8	1.1

출처 : 일본 중소기업청, '일본 중소기업백서' 각년도 부속통계자료
자료 : 재무부 '법인기업 통계조사 연보' 재편·가공

(3) 일본 소규모기업 경영자 동향

- 1982년에는 30~40대에 소규모기업 경영자가 두텁게 존재하였으나, 이들의 고령화로 최근에는 60대와 70대가 가장 많음.
 - 반면 차세대 20~40대가 적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자영업주의 수는 점점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자의 설립연도를 연령대별로 보면, 1984년 이전에 설립된 경우가 약 50% 정도를 차지하여 소규모사업자는 업력이 긴 사업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1984년 이전에 설립된 소규모사업자는 1984년 당시 30~40대의 경영자가 중심이었다는 (연령대별 자영업주 수의 추이에서 추정) 것을 알 수 있음.
 - 1984년 이전에 설립 된 소규모 사업자의 경영자는 약 30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현재 60~70세 연령대로 추측됨.
 - 1984년 이전에 설립한 소규모사업자는 첫 번째 세대교체, 전후 직후에 설립된 사업자의 경우는 두 번째 세대교체의 시기가 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음.

- 또한 1985년~1994년에 설립한 소규모사업자에 대해서는 절반이 창업당시 30대까지의 젊은 경영자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2014년판 중소기업 백서, 기업가 연령 구성의 추이 참조).
 - 당시를 기점으로 20년~30년이 지난 현재는 40~60세의 경영자가 주축을 이룬다고 짐작할 수 있음.

<표 2-13> 연령대별 자영업주 수 추이

(단위 : 만명)

구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세 이상
1982	1	10	30	91	98	106	107	84	63	46	35	32
1992	2	12	19	36	60	104	93	93	85	69	45	44
2002	1	5	17	31	37	45	58	92	74	71	55	54
2012	1	3	9	21	36	44	41	46	51	75	54	75

자료 : 2015년판 일본 소규모기업백서

□ 기업가 연령대별 비중 추이를 보면, 60세 이상의 비중이 대폭 증가한 점과 30세 미만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이 주목됨.

- 1980년대 이후 30년 동안 60세 이상 기업가 비중이 4배 이상 증가한 반면, 30세 미만은 절반으로 감소
- 50대 이상 기업가 비중은 증가하였고, 50세 미만 기업가 비중은 감소

<표 2-14> 기업가 연령대별 구성비 추이

(단위 : %)

	30세 미만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합계
1979	23.7	37.1	20.2	12.3	6.6	100.0
1982	22.1	35.1	19.9	14.9	8.1	100.0
1987	22.4	27.4	20.7	16.0	13.5	100.0
1992	28.1	25.2	20.5	11.9	14.2	100.0
1997	22.3	22.2	20.2	14.2	21.1	100.0
2002	16.4	24.8	16.7	17.6	24.6	100.0
2007	14.8	26.7	16.5	15.2	26.9	100.0
2012	11.9	23.9	17.4	14.3	32.4	100.0

자료 : 2015년판 일본 소규모기업백서

Ⅲ. 일본 소규모사업자 감소의 원인 분석

- 일본 소규모사업자의 지속적인 감소는 장기불황, 저출산,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농촌지역과 지방의 과소화 및 대도시 집중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폐, 대기업의 국내거점 폐쇄·재편 및 해외진출 확대 등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1990년대 초 버블 붕괴가 장기불황의 직접적인 계기였으나, 정부의 초기 금융정책 실패, 구조혁신 지연 등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극도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디플레이션에 빠진 것이 더욱 가중시킴.
- 경기침체 장기화, 디플레이션, 엔고의 악순환이 진행되면서 수출 및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난 가중이 특히 지방의 중·소도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심한 타격을 줌.
- 저출산, 인구 고령화로 2000년대 이후 지방의 명목 경제성장률이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특히 자영업비율이 대폭 낮아짐.
- 유통대기업의 시장지배력 증대, 소비행태 변화와 대응 부족, 창업률 보다 높은 폐업률, 실질임금 하락 등도 소규모사업자 감소에 영향
- 일본 정부는 장기적 경제부흥을 위해 소규모사업자 감소 추세를 극복하여 경기활성화로 연결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규모기업의 도전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일본은 「중소기업기본법」을 비롯한 다수의 법률을 개정·제정하였으며, 2014년 제정된 「중소기업진흥기본법」에 소규모기업 진흥을 위한 4대 목표와 10개 중점시책을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으로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창업률 제고, 후계자 육성, 폐업대책, 해외 진출 확대, IT활용을 통한 외부자원 활용 등도 강조되고 있음.

1. 선행 연구 및 분석 사례

- ☐ 일시적인 경기변동보다는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인 변화요인이 주는 소규모사업자 또는 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
 -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국제화 진전에 따른 경쟁의 격화, 제조업 경쟁력 약화 등의 요인에 의해 어려워진 사업 환경 때문인 것으로 분석한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지역에 따라 또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그 영향과 요인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

- 변화요인들이 대도시보다 지방에, 중규모기업보다 소규모기업에 보다 큰 영향을 미쳤으며, 각 요인별로도 다소 차이가 있음을 지적

1) 오사카부립산업개발연구소

□ 소규모사업소 증감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시도

- 오사카부, 동경부, 아이치현의 1981년부터 2006년까지의 소규모사업소 및 중대규모사업소의 증감추이를 제시하며 특히 오사카부의 소규모사업소 감소가 두드러지는 이유에 대해 고찰
- 사업소의 증감이나 개업 요인을 지역의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살펴보는 실증 분석에서는, 수요요인, 노동수급·인적자본요인, 산업집적·산업구조요인, 비용요인, 기타요인으로 나누어 설명
- 또한 사업소 증감의 수요요인에 주목하여, 소규모사업소의 증감에 영향을 끼치는 수요요인으로 소규모사업소 제조품 출하액수, 중대규모사업소 제조품 출하액수, 중대규모사업소 원재료 사용비율, 그리고 노동생산성 성장률을 채용

□ 조사 및 분석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소규모사업소 및 중·대규모사업소의 제조품 출하액수 성장률은 소규모사업소의 증가율에 플러스 영향을 줌.
- 중·대규모사업소의 원재료사용비율은 소규모사업소 증가율에 플러스 영향을 미침.
- 노동생산성 증가률은 소규모사업소 증감율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끼침.
- 수요요인 이외의 요인을 보면, 노동력인구성장률과 전 산업의 사

업소 밀도가 (+)의 효과를 가지고, 완전실업률, 제조사업소특화계수는 (-)의 효과를 가짐.

- 결과적으로 풍부한 노동력, 이(異)업종 집적의 효과만 소규모사업소의 증가에 기여할 뿐, 실업률, 제조업의 비율, 제조업의 평균 임금의 증가는 소규모사업소의 감소에 기여함을 의미

<표 3-1> 소규모사업자 감소 원인 분석 사례

구분	연도	내용
오사카부립산업 개발연구소	2008	○ 특정 지역의 소규모사업소 증감 결정요인의 계량분석 ○ 사업소 증감의 주요요인에 주목 (출하액, 원재료 사용비율, 노동생산성증가율 등) ○ 노동생산성 증가, 대규모사업소의 원재료 사용비율 저하, 제조업 집적환경, 노동인구 성장침체 등 때문에 감소
일본은행	2008	○ 개인사업자 감소에 대해 고령화의 영향에 주목 ○ 시장 참여와 은퇴라는 두 개의 관점에서 개인기업의 활발한 노동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
연차경제재정보 고 (내각부)	2011	○ 자영업률 감소에 대해 고령화 요인에 주목하여 분석 ○ 1990년 대비 20년 만에 절반으로 감소 ○ 고령 자영업자비율이 높은 것이 다른 선진국 대비 일본의 특징 ○ 낮은 수입, 농림수산업의 높은 자영업 비율, 경기침체 ○ 노동시장의 제도적 요인, 고용자 임금과의 관계 등 다수의 요인
경제산업성	2013	○ 일본경제의 구조변화의 영향으로 분석 ○ 출생률 감소, 고령화, 도시집중 등 ○ 대기업의 국내거점 폐쇄·재편, 해외진출로 인한 산업 및 고용 영향
중소기업청	2016	○ 전국 1,74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구증감률과 사업소증감률의 관계를 분석 ○ 정(+)의 상관관계를 도출 ○ 상사업소 증감률이 인구 증감률보다 높게 나타남. ○ 소규모사업소가 중·대규모사업소보다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됨.

- 소규모사업소의 증감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은 노동생산성 증가율, 중·대규모사업소의 제조품 출하액수 성장률, 소규모사업소의

제조품 출하액수 성장률, 제조사업소 특화계수, 노동력인구성장률 등임.

□ 오사카부의 소규모사업소 감소가 두드러지는 이유에 대한 결론을 도출

- 노동생산성 증가, 대규모사업소의 원재료 사용비율의 저하, 제조업이 집적하고 있는 환경, 노동력 인구 성장 침체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

2) 일본은행

□ 고령화의 영향에 주목하여 개인사업의 감소 이유에 대해 리뷰

- 자영업주·가족종업자의 연령구성 변화로 고령화가 두드러지게 진행되고 있음.
 - 연령 계층별의 참여·은퇴 흐름을 보면 자영업주·가족종업자의 신규참여 규모는 퇴출과 비교해서 매우 적음.
 - 법인기업에 근무하는 고용자와 비교하면, 자영업자·가족종업자에 20대 젊은 층의 참여가 특히 적는데 이것이 전체의 고령화와 연관
 - 퇴직은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치우쳐 있는데, 정년퇴임제가 없는 경우도 있어 법인기업에 근무하는 고용자보다 은퇴 시기가 늦음을 시사
 - 이상의 이유를 통해 자영업자·가족종업자는 고령인 채로 활동을 이어가면서, 병·부상과 같은 이유로 자연퇴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
 - 즉, 참여와 은퇴 두 관점에서 개인기업은 활발한 노동이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파악
- * ‘일본은행 리뷰’ (2008년 11월)

3) 내각부 (20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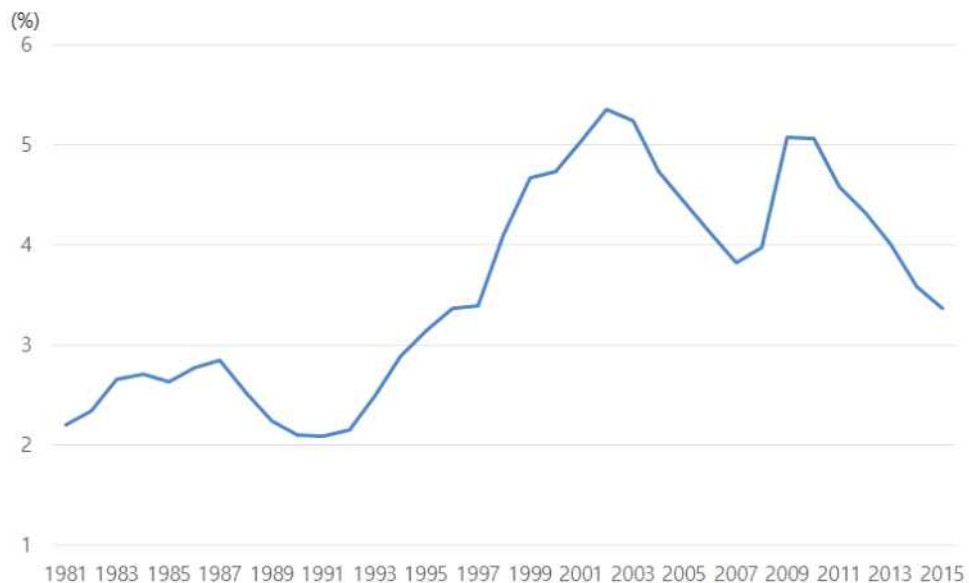
□ 자영업률의 급속한 하락을 고령화 요인에 특히 주목하여 분석

- 2011년 2월 기준 일본 자영업자 수는 541만 명, 가족종사자를 포함하면 711만 명, 취업자 수가 6,211만 명으로, 가족종업자를 포함한 자영업자가 11.4%를 차지
- 가족종업자를 포함하는 자영업자 수가 해마다 감소
 - 1990년 1,395만 명에서 20년 만에 절반으로 감소
 - 자영업률이 1990년 22.3%에서 2010년 12.3%로 급격하게 하락
- 주요 선진국에서도 자영업률이 저하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결코 일본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인식
- 일본 자영업률의 두 가지 특징
 - 일본의 자영업률이 G5 중에서 높다는 점
 - 일본의 자영업률의 감소 속도가 빨라 타 국가와의 격차도 감소
- 고령자일수록 자영업률이 높아지는데, 이는 일본 이외의 주요선진국에서도 일반적인 현상
 - 2005년 기준으로 자영업자 중에 31.7%가 65세 이상, 25.9%가 55~64세
 - 연령별 자영업률에서도 고령자일수록 높았는데, 65세 이상이 54.6%, 55~64세는 20.4%
 -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자영업률이 완만하게 높아지다가 65세 이상부터 대폭 높아지는데, 이는 정년 등에 의해 고용자가 급감하는 동시에 자영업자의 은퇴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반영한 것
- 한편, 자영업자 중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일본의 특징
 - 이는 일본에서 인구의 고령화가 특히 진전되고 있는 것을 나타냄과 동시에 고령자의 노동력 비율이 높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

□ 상대적으로 낮은 자영업 수입, 농·림·수산업에서 자영업 비중이 높은 점, 경기침체, 노동시장의 요인 등도 자영업률 감소에 영향

- 자영업의 수입이 고용자의 보수와 비교했을 때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음.
- 그러나 미국과 같이 수입 면에서 자영업이 유리한 나라에서도 그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에 있는 것을 보면, 적어도 국제적인 자영업률 감소 추이를 수입의 차이로 설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일본에서는 생산성이 낮은 ‘생업’적인 농가의 존재가 자영업의 상대수입을 저하시키고 있을 가능성

<그림 3-1> 일본의 실업률 추이



출처 : IMF-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 (2016)

- 자영업률 관점에서 경기변동이 자영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을 때, 기업의 노동수요 양이 상대적으로 중요
 - 일반적으로 실업률이 높을 때는 기업의 노동 수요가 적기 때문에 고용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
 - 반면, 자영업은 법인기업과 비교해서 경기변동에 취약하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 실업률이 높을 때에는 자금 조달 등의 이유로 자영업을 선택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
 - 실제로 1989년에서 2008년까지의 데이터를 살펴 본 결과, 자영업률과 실업률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실업률이 높아

지는 시기에는 자영업률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실업률 이외의 요인으로서는 노동시장의 여러 가지 제도적 요인을 생각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자와 비교해서 포착하기 어렵고, ‘세금·사회보험료의 빼기’가 큰 나라에서는 고용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노동조합 조직률이나 고용보호 지표가 높을 경우, 고용자가 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자영업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 ‘연차경제재정보고’(2011년 7월)

4) 경제산업성 (2013.9)

□ 최근 일본 경제의 구조변화에 의해 소규모사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

- 출생률 감소, 고령화, 과소화, 대도시 집중에 의해 지역경제가 폐쇄한 것이 감소 요인으로 작용
 - 일본의 인구감소, 고령화는 최근 10년간 더욱 진전하였고, 특히 지방권의 경우 인구감소, 고령화 등이 모두 심각하여 이에 따른 지방권의 GDP가 감소
- 대기업의 국내거점의 폐쇄·재편, 해외진출에 의해 일본 국내의 산업과 고용에 영향
 - 일본의 대기업들은 동일본 대지진, 엔고의 지속 등의 이유로 생존을 위해 구조개혁이나 해외 진출을 촉진, 이에 따른 고용의 감소, 하청 기업에의 영향 우려
- * ‘소규모사업자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2013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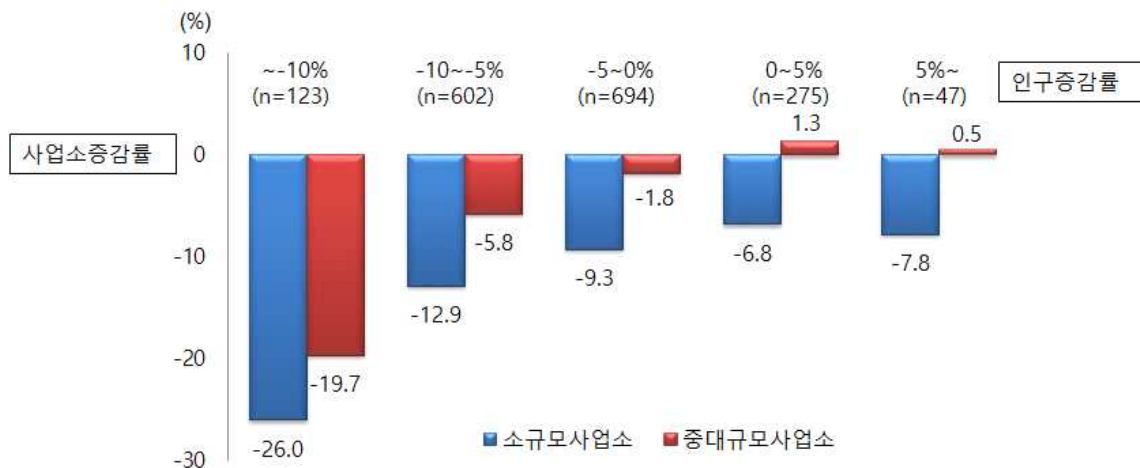
5) 중소기업청 (2016)

□ 인구 증감률은 사업소 증감률과 정(+)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규모가 작은 사업소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됨.

- 1,741개 일본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의 인구 증감과 사업소 증감의 관계를 분석
- 분석 결과, 두 변수 간에 아래 그림과 같은 밀접한 정(+)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줌.
 -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인구가 10% 이상 감소, 123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소규모사업소 수가 26.0% 감소, 중·대규모 사업장은 19.7% 감소 등 대폭 감소
- 특히, 사업소 증감률이 각각의 인구 감소율보다 높게 나타남.
- 또한 이러한 인구 증감의 영향은 소규모사업소가 중·대규모사업소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

<그림 3-2> 인구 증감률과 사업소 증감률의 관계



자료 : 일본 중소기업청, 「소규모기업백서」, 2016

출처 : 총무성, 「헤세이 21년 경제 센서스 - 기초 조사」(2009년), 총무성 경제 산업성, 「헤세이 26년 경제 센서스 - 기초 조사」(2014년), 총무성, 「주민 기본 대장」(2010년, 2015년)

- 주 :
1. 인구 증감률은 2010년~2015년, 사업소 증감률은 2009년~2014년
 2. 사업소 기반이며, 사업소를 명기한 기업 기반이 아님.
 3. 통계에서 "사업소의 종업원 총 19 명 이하 또는 4 명 이하" 공표 값을 사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해진 소규모기업의 표준 (상용 고용자 20 명 이하 (일부 업종은 5 인 이하))가 아님.
 4. 농·림·어업 제외하여 집계

2. 일본의 소규모사업자 감소 요인의 동향

1) 구조적 요인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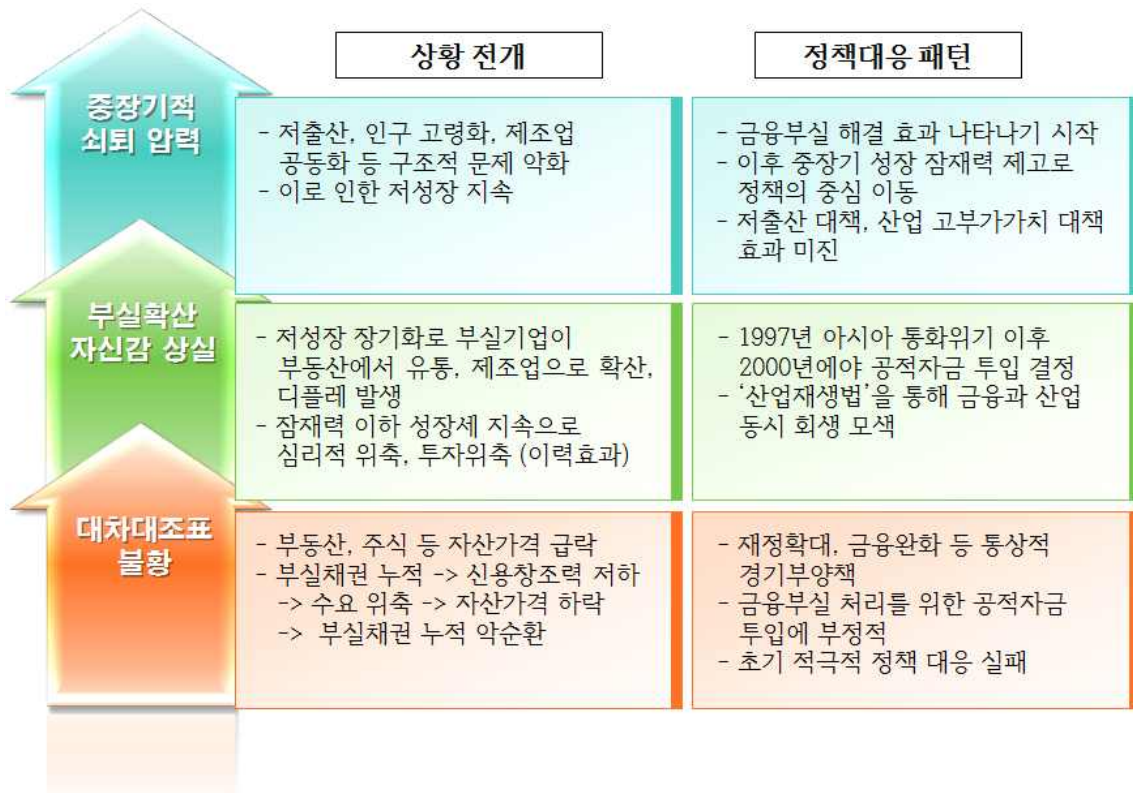
(1) 장기불황

- 일본 경제의 장기불황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지속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1980년대 후반에 발생했던 거품이 1990년대 초에 붕괴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
 -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20년은 버블 붕괴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사실상 버블 붕괴의 후유증이 1990년대 이후 일본 경제의 성장을 제약한 것임.
- 일본의 장기불황은 버블 붕괴 초기부터 거론되었던 기본적인 대응책들을 계속 미루면서 스스로 무너진 것으로 비판받고 있음.
 - 1980년대 후반에 일본은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미국 채권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등 해외투자를 늘려 세계 최대의 순채권 국가로 도약
 - 일본의 불황 초기에는 극심한 사회불안을 야기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으나 바로 이 때문에 구조혁신이 지연되어 결국 불황이 더욱 더 장기화
- 한편 불황 초기에는 버블 붕괴, 금융정책의 실패 등 영향이 컸지만, 경기 침체가 20년 이상 지속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인과 양상이 변화
 - 일본은행들은 버블 붕괴 초기에 예상했던 부실채권 규모가 경기 악화로 계속해서 확대되는 악순환을 겪었으며, 이러한 악순환 과정에서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심리적 위축 현상이 뚜렷

해짐.

- 심리적 위축에 따른 이력효과(hysteresis effect)와 함께,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격차 장기화 등도 겹쳐 1999년 이후 소비자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에 빠짐.

<그림 3-3> 일본의 장기불황 전개 및 확산



자료 : 이지평 외 (2016), '우리는 일본을 닮아가는가', 가공·편집

- 경제성장 정체가 장기화되고, 디플레이션과 엔고의 악순환이 진행되면서 1980년대 말에 세계 최강이라고 찬사를 받던 제조업도 어려움을 겪기 시작
- 급격하게 진행된 엔고로 인한 임금과 생산성의 변동으로 일본 산업의 수출경쟁력이 하락하자 기업의 투자심리도 낙화되어 설비투자가 위축
 - 설비투자 위축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일본 경제의 성장세 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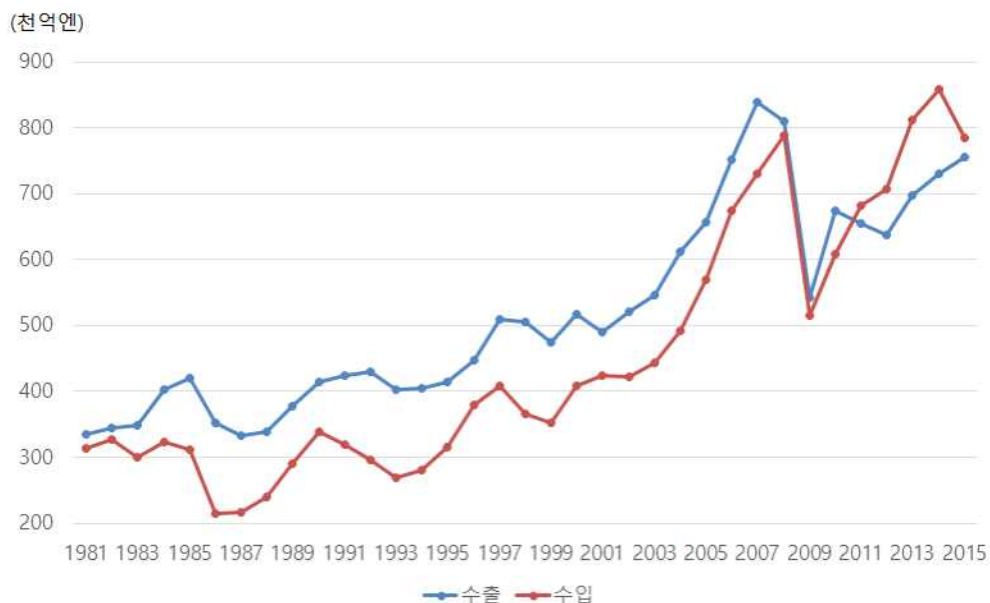
효과로 인해 일본 제조업은 더욱 악순환에 빠져 생산과 수출이 위축

- 일본 기업들이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했고 일본 내 제조업 생산 기반은 급속히 약화

□ 일본 수출산업의 활력도 경기불황과 함께 급속히 저하

- 일본 제조업의 수출경쟁력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는 제조업의 글로벌한 트렌드 변화도 작용
 - 신흥시장의 부상이라는 세계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지연된 것도 일본 수출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
 - 일본 각지에 기술적 강점을 가진 중견 및 중소기업이 많지만 이들은 거대한 일본 내수시장에 안주해, 적응하기가 어려운 신흥국 등의 수출시장 개척에 상대적으로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기에 점차 경쟁력을 상실
- 최근 큰 폭의 엔화 절하에도 불구하고 일본 수출 물량이 거의 증가하지 못한 것은 경기침체 기간에 일본 제조업의 기반이 쇠약해졌기 때문임.

<그림 3-4> 일본의 수출과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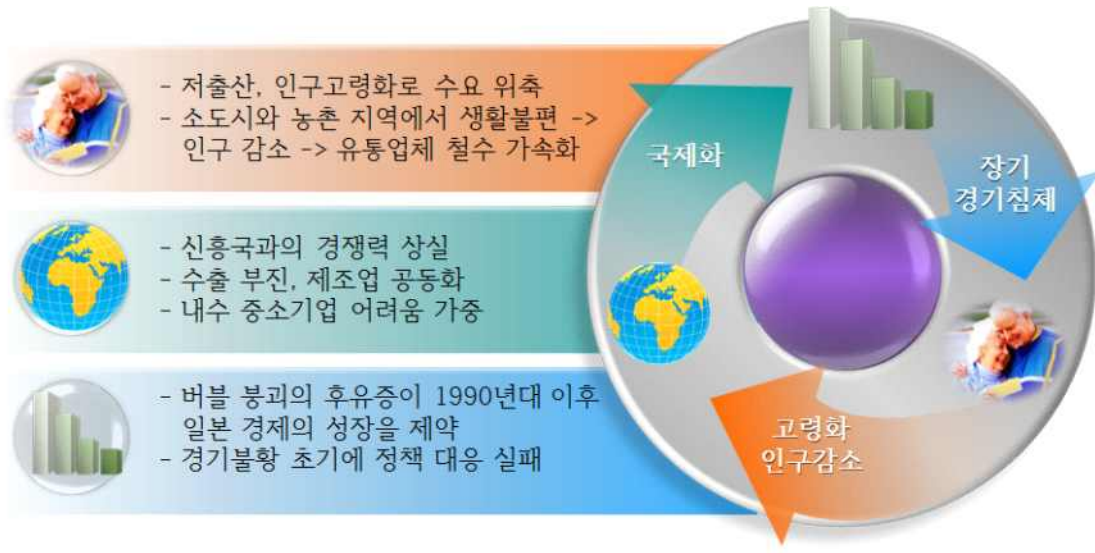
출처 : Ministry of Finance, 'Trade Statistics of Japan'

- 장기불황과 함께 일본 중소기업의 부도가 증가하는 한편, 창업이 부진을 보이면서 각 제조거점에서 산업 공동화가 심화
 - 일본의 중소기업 수는 1990년대 말에서 2012년 사이에 99만 개, 즉 20% 이상 감소
 - 앞서 살펴본 바대로 중소기업 수 감소의 대부분이 소규모기업의 감소에 의한 것임.

- 일본 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지면서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은 「성장세 둔화, 저물가 -> 대기업의 주문 감소, 단가 하락 ->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라는 충격을 겪은 것임.
 - 수출형 중소기업도 물가 하락과 함께 엔고 현상이 장기화되어 어려움
 - 엔고는 내수형 중소기업에도 충격을 주었는데, 엔고와 함께 신흥국 제조업이 부상하면서 일본 내수시장에 신흥국 제품이 대거 유입되어 내수형 중소기업의 경영을 압박
 - 특히 전통적으로 한 지역에 밀집해 특산지형 제조업으로 성장해 온 경공업 분야가 큰 타격을 받고 산업기반이 약화
 - 1990년대 버블 붕괴의 영향으로 은행부실채권 문제가 악화되어 중소기업 대출이 부진을 보인 것도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

-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지방 중소도시의 경제적·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켜 지역에 있는 서비스 중소기업의 경영도 압박
 - 지방 도시의 중심가에는 각종 상점의 영업부진으로 폐업한 후 신규 점포가 들어서지 않아 주야로 점포가 빈 건물들이 즐비한 ‘서터 마을’ 현상이 확산
 - 중소기업청의 위탁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 전국 상가의 빈 점포 비율이 2000년 8.5%에서 2012년에는 14.6%로 증가

<그림 3-5> 소규모사업자 감소 전개과정



(2) 인구 감소와 고령화

□ 과거 20년간 추이를 보면, 인구 고령화는 일본 재정적자의 결정적인 요인

- 일본의 재정적자는 1990년대에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고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빠르게 누적
 - 인구고령화와 함께 사회보장 지출이 늘어나는 한편 세입이 부진을 보이면서 재정적자가 쌓인 것

□ 1990년대 이후 인구 고령화로 인해 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한 것이 부담으로 작용

- 유럽 복지국가에 비하면 복지 수준이 낮고 GDP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으나, 1990년대 이후 인구고령화로 인해 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한 것이 부담으로 작용
- 또한 인구고령화는 일본의 세입에도 부정적인 영향

□ 지역경제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예 도시나 농촌 마을 전체가 사라져 없어지는 지역공동화 우려까지 나오기 시작

- 일본 1,800개의 도시나 농촌 마을 중 896개가 2040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망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그룹, 일본창성회의)
- 전국의 60%에 달하는 지역의 인구가 2050년에 절반 이하로 줄어 들고, 20%의 지역에서는 아예 거주자가 한 명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 (일본 국토교통성) : 현재와 비슷한 도시로의 지방인구 유출이 지속될 것을 전제로 함.

□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로 취업자 증가세가 더욱 부진을 보여 일본의 각 지방은 2000년대 이후 명목 경제성장률이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

- 지방의 경우, 고령자 인구마저 크게 늘어나지 않는 단계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어 각종 소비재의 위축, 전통산업 쇠퇴가 가속되면서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

□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은 한국과 과거 일본의 유사성을 비교할 때 가장 많이 강조되는 점

-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일본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감소도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임.
- 한국은 과거 일본보다 근로시간이 더 줄어들 여지가 크며 감소 추세가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큼.

2) 요인별 구체적 동향

(1) 엔고와 초기 정부대응

□ 1971년까지 1달러=360엔 이었던 환율이 1988년에 128엔 수준

으로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

- 미달러-엔 환율은 1971년까지는 1달러=360엔, 1973년의 변동환율제 이행 후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 초중반까지는 250엔대였던 것이, 1987년도 138엔, 1988년도 128엔 수준으로 급상승

□ 1985년 9월의 플라자합의 이후, 엔화 가치의 큰 폭 상승이 진행된 결과임.

- 1988년도 평균으로는 엔화의 외환시세는 1달러=128엔이며, 1985년 9월 시점에 비해 엔은 2배 가까운 상승을 나타낸 것
- 이 사이의 추이를 보면, 엔고는 당초 대폭으로 진행되었지만 그 속도를 점차 늦춰 1988년도에는 120엔에서 130엔대 후반 사이를 움직이고 있는 진정된 상태였음.

□ 1980년대 말의 일본 정부는 이러한 엔고의 진행 속에서 일본 경제가 크게 전환해 온 것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평가²⁾

- 첫째, 기존의 일본경제 발전성과가 구체적으로 통화의 강세가 되어 나타났다는 것임.
 - 즉, 제1차, 제2차 석유위기를 극복하고, 합리화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비가격 경쟁력의 강화와 더불어, 대폭적인 무역흑자를 초래해 온 결과라는 것
 - 그 결과, 대외 순자산이 축적되었으며, 그 배경으로는 에너지 절약, 합리화 진전이 있었으며, 산업구조 면에서는 가공형 제조업이 신장
- 둘째, 엔고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발전이 생겼다는 것
 - 산업의 고도화가 한층 진행되는 동시에, 소비생활에서의 고급화, 다양화가 진행
 - 제품수입의 급증으로 지금까지의 수출 면에서의 영향뿐만 아니라, 수입대국으로서의 역할도 향상되었고, 또한, 자본거래 면에서

2) 1989년 경제백서(연차경제보고)

도 세계최대의 채권국이 됨.

- 일본경제가 양과 질 면에서 모두 세계경제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
- 셋째, 일본경제의 장기적인 발전 과정에서, 질적 전환이 보이는 분야가 있다는 것
- 예를 들면, 자산의 축적이 진행되어 실물경제에의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등 기술혁신의 새로운 물결이 보이고, 비제조업이 견실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

□ 실제 1980년대 후반 5%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대응을 강조³⁾

- 주가나 땅값 등 자산가격의 변동이 경제에 주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금융정책의 적절한 운영 및 금융기관 스스로의 적절한 리스크 관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체제정비가 필요하다는 것
- 또한, 일본경제를 장기적으로 전망해보면 생산연령인구의 성장저하나 저축률의 저하 등 향후의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도 있어 적절한 대응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

(2) 버블경제의 붕괴

□ 일본은 1980년대 금융완화정책 등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감.

- 1985년의 플라자 합의로 인한 엔고현상으로 1986년 들어 성장세가 둔화되기도 했으나 활발한 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증가에 힘입어 호황기를 지속
- 이러한 장기적인 경제호황이 일본의 자국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킴.

3) 1991년 경제백서(연차경제보고)

□ 1990년까지 높은 상승세를 보이던 일본의 부동산가격이 1991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하락

- 일본은 1983년경부터 동경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해 80년대 후반기에는 폭발적으로 급등
 - 1986~1990년 사이의 급격한 부동산가격 상승은 ‘버블’ 이었던 것으로 밝혀짐.
- 일본은행은 1980년대 중후반 저금리 등 금융완화정책을 펴는데, 이는 버블형성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버블이 심각하게 형성된 후에 성급히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 버블 붕괴에 일조한 결과를 초래
 - 일본은행은 부동산 버블이 심각해진 1989년에 들어서야 금리를 인상하는데, 1989년 5월부터 1990년 8월까지 15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공정금리를 인상하는 등 급속한 금융긴축정책을 추진하여 경제에 큰 충격을 초래함.
 - 1989년 5월 2.5%에서 1990년 8월 6.0%로 15개월 만에 3.5%p 인상

□ 이러한 일본의 부동산 거품경제의 붕괴가 소위 ‘잃어버린 10년’ 이라 불리는 장기 경기침체를 초래

- 내수위축 → 기업도산, 금융기관 부실화, 실업증가 → 내수위축, 경기침체의 악순환의 결과를 낳게 됨.

□ 이러한 통화정책의 실패는 엔고와 유가하락이라는 국제적 요인과 일본은행의 버블 위험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는 국내적 요소에서 기인했다고 판단

- 수출기업들은 엔고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저금리를 주장하였고, 대장성도 대미협조 기조 하에서 최대 채권국인 일본이 국제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금융정책을 완화하고 저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

- 국내적으로는 소비자물가가 안정되어 있는 등 장기 경제호황의 지속과 부동산 불패신화 등으로 자국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안일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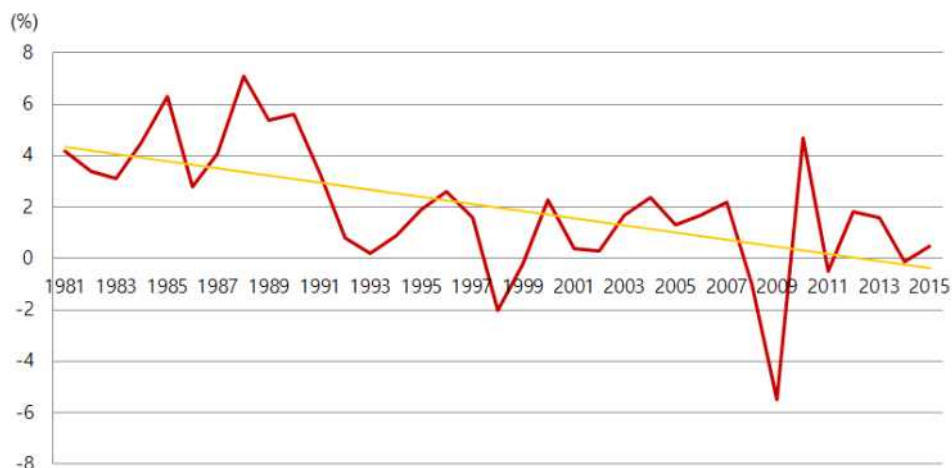
□ 결국 버블 초기의 미흡한 대응과 버블 후반기 들어 급히 시행한 강력한 억제대책이 버블붕괴에 일조한 결과

- 후반기 들어 급히 시행한 강력한 억제대책이 버블붕괴에 일조하였는데, 이미 버블 붕괴가 진행되는 중인 1992년에 지가세를 도입하고, 상속세를 강화하는 등 세제정책이 뒤늦게 실시되었지만, 오히려 버블붕괴에 기여함.

□ 1980년대 이후 일본의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면 보다 명확해짐.

- 1980년대 초반에만 해도 3~4%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일본경제가 중반 및 후반에 6%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 그러나 1990년대부터 급격히 하락하여 본격적인 저성장 및 장기불황에 돌입

<그림 3-6> 일본의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 일본 중앙은행

(3) 인구 감소

- 일본은 2011년부터 본격적인 인구 감소 사회에 돌입하였으며,⁴⁾ 앞으로 인구 감소가 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
 - 주요국의 인구 추이 (실적·예측)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는 인구가 증가하는 한편, 일본과 독일은 인구 감소가 예측되고 있음.
- 일본과 독일은 2005년 또는 2010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남.
 - 일본의 경우,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합계 출산율은 1.34로 낮아 향후 인구 감소가 예측되고 있음.
-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사업자에게는 인구 감소 및 인구의 대도시 집중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짐.
 -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인구 증감률을 보면, 3대 도시권 및 그 주변 도시, 후쿠오카 현, 오키나와 현 이외는 인구 감소 (오키나와는 자연 증가율만 상승)
- 2015년 조사에서 인구 감소가 공식적으로 처음 확인됨.⁵⁾
 - 2015.10.1 기준 1억2711만 명으로 2010년에 비해 0.7% (94만7305명) 감소
 - 1920년부터 5년 단위로 인구조사를 해온 이래 인구 감소가 확인된 것은 처음으로, 본격적인 인구 감소 사회에 돌입
 -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한 반면, 지방에서는 감소해 양극화 현상이 뚜렷

4) 2014년판 일본 중소기업백서 대해 (본문)

5) 일본 총무청. '국세조사 (인구조사)', 2016.2

<표 3-2> 주요국의 인구 추이

(단위 : 천만명)

연도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1950	4.2	7.0	8.2	5.1	15.8
1955	4.3	7.2	8.8	5.1	17.1
1960	4.6	7.3	9.3	5.3	18.6
1965	4.9	7.7	9.7	5.4	20.0
1970	5.1	7.9	10.4	5.6	21.0
1975	5.3	8.0	11.1	5.6	21.9
1980	5.4	7.9	11.6	5.6	23.0
1985	5.5	7.9	12.0	5.7	24.2
1990	5.7	8.0	12.2	5.7	25.5
1995	5.8	8.3	12.4	5.8	26.8
2000	5.9	8.4	12.6	5.9	28.5
2005	6.1	8.4	12.7	6.0	29.8
2010	6.3	8.3	12.7	6.2	31.2
2015	6.5	8.2	12.6	6.4	32.6
2020	6.7	8.1	12.5	6.6	34.0
2025	6.8	8.0	12.2	6.7	35.3
2030	6.9	7.8	11.8	6.8	36.6
2035	7.0	7.6	11.4	7.0	37.8
2040	7.1	7.4	11.0	7.1	38.8
2045	7.2	7.2	10.6	7.2	39.9
2050	7.3	6.9	10.2	7.3	40.9
2055	7.4	6.6	9.7	7.3	41.9
2060	7.4	6.3	9.3	7.4	42.9
2065	7.5	6.0	8.8	7.4	43.9
2070	7.5	5.8	8.3	7.5	44.9
2075	7.6	5.5	7.9	7.5	45.8
2080	7.7	5.3	7.4	7.5	46.6
2085	7.7	5.0	7.0	7.6	47.3
2090	7.7	4.8	6.7	7.5	48.0
2095	7.8	4.6	6.3	7.5	48.6
2100	7.8	4.3	6.0	7.5	49.2

자료 : 2014년 일본 중소기업백서 제2부

출처 :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주 : 1. 2010년 이전은 실적, 2015년 이후는 전망치 (정상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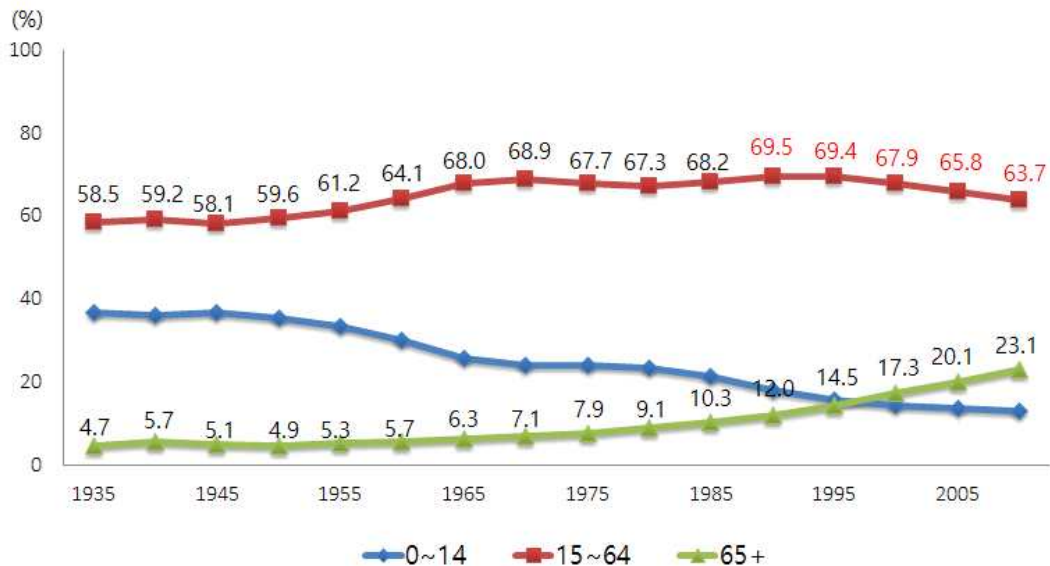
2. 정상 예측 : 2005~2010년 합계 출산율이 앞으로도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예측임.

(4) 인구 고령화

-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빠른 추세로 증가하여, 60년 만에 고령인구 비중이 약 5배 증가

- 65세 이상 인구비중 : 4.9% (1950) -> 23.1% (2010)
- 15~84세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1990년 69.5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

<그림 3-7> 일본 인구의 연령대별 구성비 추이 (1935~2010)



□ 주요국의 노인비율 추이 (실적·예측)를 보면, 일본은 1990년 이전에 가장 노인 비율이 낮았으나 현재는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임.

- 또한, 2010년 시점에서 고령자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일본 (23.0%), 독일 (20.8%), 이탈리아 (20.3%)의 3개 국가뿐이며, 일본은 세계 최초로 인류가 아직까지 경험하지 않은 '초고령 사회'에 돌입을 목전에 둠.
- 또한 구미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도 고령화는 큰 사회 문제가 되어가고 있으며, 일본은 노인비율의 수준, 고령화 속도의 정도, 평균 수명의 길이 등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표 3-3> 주요국의 고령화 비율 추이

(단위 : %)

연도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1950	11.4	9.6	4.9	10.8	8.3
1955	11.6	10.5	5.3	11.3	8.8
1960	11.6	11.4	5.7	11.7	9.1
1965	12.1	12.4	6.3	12.2	9.5
1970	12.9	13.6	7.0	13.0	9.8
1975	13.4	14.8	7.9	14.0	10.5
1980	14.0	15.6	9.0	14.9	11.3
1985	12.9	14.4	10.2	15.1	11.9
1990	14.1	15.0	11.9	15.7	12.5
1995	15.2	15.4	14.4	15.8	12.6
2000	16.0	16.3	17.2	15.8	12.4
2005	16.4	18.9	19.8	16.0	12.3
2010	16.8	20.8	23.0	16.6	13.1
2015	18.7	21.5	26.5	18.1	14.6
2020	20.4	23.2	28.8	18.9	16.5
2025	21.8	25.3	30.0	20.1	18.4
2030	23.2	28.7	31.3	21.8	20.0
2035	24.5	31.7	33.1	23.3	20.7
2040	25.5	32.8	35.8	24.1	20.9
2045	25.3	33.4	37.6	24.3	20.9
2050	25.6	34.4	39.0	24.8	21.0
2055	25.9	35.4	40.1	25.5	21.3
2060	26.1	35.9	40.8	25.9	21.8
2065	26.4	36.4	41.5	26.1	22.2
2070	26.9	36.9	42.0	26.2	22.5
2075	27.4	37.4	42.6	26.9	22.9
2080	28.0	38.1	43.3	27.6	23.4
2085	28.6	38.9	43.9	28.2	24.0
2090	29.2	39.7	44.4	28.9	24.6
2095	29.7	40.5	45.0	29.5	25.2
2100	30.3	41.3	45.7	30.2	25.8

자료 : 2014년 일본 중소기업백서 제2부

출처 :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주 : 1. 2010년 이전은 실적, 2015년 이후는 전망치 (정상 예측)

2. 정상 예측 : 2005~2010년 합계 출산율이 앞으로도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예측

□ 고령화는 보건·의료비 부담 증가로 개인 및 기업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게 됨을 의미

- GDP의 11.2%가 의료비로 지출되는 일본은 10년 동안 14단계 올라 세계 3위를 기록하여 스웨덴 등 복지국가보다 높아짐.
-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본의 201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건의료·개호 비용 비율이 55조 9354

억엔 (약 624조 6500억원)으로 GDP 대비 11.2%로 미국, 스위스에 이어 3위 기록

- GDP 대비 8.1%로 세계 17위였던 2005년에 비해 10년 새 14위나 상승

- 특히 기업의 경우, 경영자의 고령화로 기업승계 또는 건강 등의 이유로 폐업을 초래하여 기업 수의 감소를 야기

<표 3-4> 연령대별 자영업주 수 변화 추이

연령대 구분		연도별 자영업자 수 (만명)				
		1982	1992	2002	2012	2014
20대 이하	15~19	1	2	1	1	1
	20~24	10	12	5	3	4
	25~29	30	19	17	9	9
30대~40대	30~34	91	36	31	21	21
	35~39	98	60	37	36	36
	40~44	106	104	45	44	45
	45~49	107	93	58	41	47
50대~60대	50~54	84	93	58	41	47
	55~59	63	85	74	51	48
	60~64	46	69	71	75	64
	65~69	35	45	55	54	62
70대 이상		32	44	54	75	80

자료 : 총무성, '노동력 조사'

주 : 1. 비 농림업에 대해 집계

2. 자영업주 : 개인 경영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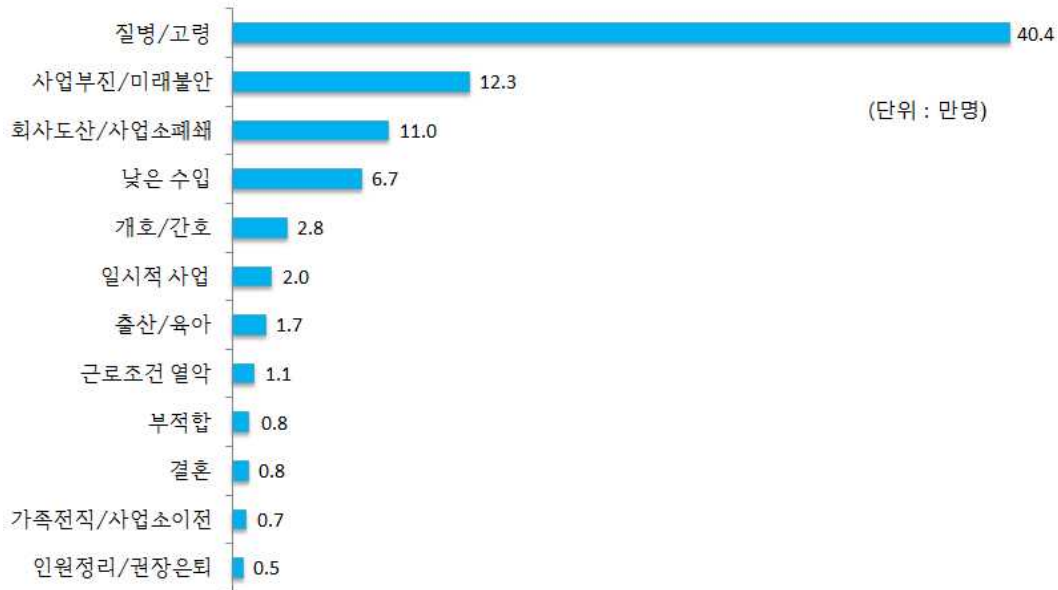
□ 소규모사업자 수 감소의 배경으로 최근에서 자영업주의 고령화가 한층 가속된 것으로 파악됨.

- 연령대별로는 70대가 최다 (약 80만 명)

□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영업주의 이직 이유 1순위가 '질병·고령'인 점은 고령화가 감소의 가장 큰 원인임을 반영한 것임.

- 그 다음으로 '사업 부진이나 장래 불안', '회사 도산·사업장 폐쇄' 등으로 이어짐.

<그림 3-8> 자영업주의 이직 사유



자료 : 일본 중소기업청, 「소규모기업백서」, 2016

출처 : 총무성, 「헤세이 24년 취업구상 기본조사」

주 : 일을 그만 둔 이유에 대해 중요한 것은 하나 선택

<표 3-5> 지역이 안고 있는 과제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

(단위 :%)

	중규모기업 (n=1,618)	소규모기업 (n=1,391)
인구감소	29.2	25.4
고령화	27.4	25.8
상점가·변화가의 쇠퇴	17.3	21.0
지역 브랜드의 부재	4.5	4.5
관광자원의 부재	1.5	2.5
대규모공장등 제조업의 부재	6.1	9.2
지역 사회의 쇠퇴	3.6	3.7
취약한 교통 인프라	2.9	1.9
기타	7.4	6.0

자료 : 2014년 일본 중소기업백서

출처 : 중소기업청 위탁, '중소기업자·소규모기업의 경영실태 및 사업승계에 관한 설문조사' [2013년 12월 (주) 테이코쿠 데이터뱅크]

주 : 1. 지역이 안고 있는 과제에 대해 1순위에서 3순위까지의 답변 중 1순위 답변을 집계

2. 중소기업청의 의뢰를 받아 (주) 테이 코쿠 데이터뱅크가 2013년 12월 중소기업 13,000개 (소규모 사업자 9,100개 포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회수율 27.3%.

(5)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 증대 및 소비자 행태 변화

① 소형 점포의 감소와 중·대형 점포의 증가

□ 경제성장, 인구 증가를 배경으로 현저한 증가세를 보이던 소매업의 연간 상품 판매액이 1997년 이후 감소

- 1997년을 피크로 소매업 연간 판매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표 3-6> 소매업 연간 판매액 추이

연도	판매액 (조엔)
1985	101.7
1988	114.8
1991	142.3
1994	143.3
1997	147.7
1999	143.8
2002	135.1
2004	133.3
2007	134.7
2012	110.5

자료 : 2015년판 소규모기업백서 제4장

출처 : 경제산업성 '상업통계', 총무성 경제산업성, 「헤세이 24년 경제센서스-활동 조사」

- 주 : 1. 연간 상품 판매액은 2007년까지는 「상업통계」, 2012년 「헤세이 24년 경제 센서스-활동조사」를 사용하고 있음.
2. 「헤세이 24년 경제센서스-활동조사」의 명단은 「헤세이 21년 경제 센서스-기초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상업통계」란 이름, 전화 번호부 조사 방법 등이 다르다는 것을 주의가 필요

□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한 소규모 점포수는 감소하는 반면, 중대형 점포수는 증가

- 그 배경에는 상가에 위치한 같은 소규모 점포가 인구 감소에 따른 수요 감소와 후계자 문제 등의 이유로 폐점하는 한편, 소비자 요구의 다양화에 따라 할인점과 교외형 대형 점포의 출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점포는 지난 10여년 동안(2002~2007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특히 최근 5년(2007~2012년) 동안은 더욱 감소
- 반면에 중대형 점포의 경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 증가하였으나, 최근 5년 동안 증가세가 둔화

<표 3-7> 매장 면적별로 본 소매업 사업소 수의 변화 추이

매장면적 구분	사업소 수 증감률 (%)	
	2002년 ~ 2007년	2007년 ~ 2012년
10m ² 미만	▲ 18.9	▲ 32.0
10m ² ~ 20m ² 미만	▲ 21.6	▲ 34.8
20m ² ~ 30m ² 미만	▲ 19.2	▲ 34.0
30m ² ~ 50m ² 미만	▲ 18.8	▲ 36.8
50m ² ~ 100m ² 미만	▲ 13.7	▲ 36.8
100m ² ~ 500m ² 미만	▲ 2.5	▲ 26.7
500m ² ~ 1000m ² 미만	30.1	▲ 5.8
1000m ² ~ 1500m ² 미만	25.7	0.7
1500m ² ~ 3000m ² 미만	28.3	6.4
3000m ² 이상	19.6	4.8
전 체	▲ 13.7	▲ 32.2

출처 : 상동

자료 : 2015년판 소규모기업백서

② 소비자 행태 변화와 대기업 프랜차이즈

□ 전국적인 소매사업소 수의 감소 추세 속에서 대기업프랜차이즈 체인점이 지방에 진출

- 전국적인 소매사업소 수의 감소 추세 속에서 대기업프랜차이즈 체인점이 지방에 진출하거나 혹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는 등 지역주민을 둘러싼 구매 환경이 크게 변

화하고 있음.

□ 소비자 및 지역에 관한 조사결과, 대형마트·할인점에서 구매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각각 과반수를 초과

- 소규모사업자로부터 구입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일용품 13.8 %, 의류 3.4 %, 가정용 내구재 4.7 %로 나타남

□ 상품구입 전체를 보면 대형마트·할인점에서 구매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은 식료품이나 잡화 등 일상적이고 구매빈도가 높은 제품은, 의류 및 가정용 내구재 등 보통 구매 빈도가 낮은 제품보다 소규모사업자에게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상품구입 전체를 보면 대형마트·할인점에서 구매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표 3-8> 지역주민의 제품 구입처

(단위 : %)

	지역의 소규모 사업자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편의점, 유명 체인점 등에서 구입)	대형 마트·양판 점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	택배 (생협 등에서 구입)	이동 판매 (이동 판매 차량 등의 구입)
가정용 내구재 (가전 · 가구 등)	4.7	13.0	60.2	1.9	19.2	0.8	0.8
의류	3.4	13.6	50.6	8.4	22.5	0.9	0.7
일용품 (식품, 일용 잡화 등)	13.8	11.1	66.1	1.2	3.0	3.9	0.8

자료 : 2015년판 소규모기업백서 제4장 제1절의 2

출처 : 중소기업청 위탁 '당신과 지역의 관계에 관한 앙케이트' (2015년 1월 랜드 브레인 (주))

□ 소규모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만족도에 대해 불

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족하고 있는 사람보다 많음.

- ‘어느 쪽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모르겠다’ 라는 응답이 많았지만, 이를 제외하면 가격, 상품, 서비스의 종류에 충실, 제공하는 상품·서비스의 질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족하고 있는 사람보다 많음.
- 반면에 점원·직원의 대응, 인간관계, 편리성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많음.

□ 대형 프랜차이즈가맹점과 대형마트의 선택은 낮은 가격과 다양한 상품 때문

- 소규모사업자는 경영환경에서 대형 프랜차이즈가맹점과 대형마트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하고 다양한 상품으로 상품·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점이 지역 주민의 인식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소규모사업자는 신뢰에 바탕으로 한 대면 사업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정중한 응대 및 유연히 대응하는 점 등에 대해 지역 주민으로부터도 일정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소비자 행태의 변화를 소규모사업자는 기회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정적으로 작용

- 휴대 전화의 가구 보유율은 이미 90% 이상이 되고,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 PC도 지난 3 년간 급속히 보급되어 매장 판매에서 인터넷 판매로 변화하고 있으며, 개인 EC 시장도 확대 추세
- 소규모사업자의 절반 이상이 자사의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자사 사이트에서의 제품 판매 예약 접수는 10% 정도, 인터넷 쇼핑몰 등의 출점·출품은 10%에 못 미치는 수준

(6) 창업률과 폐업률 : 기업 동학 (Firm Dynam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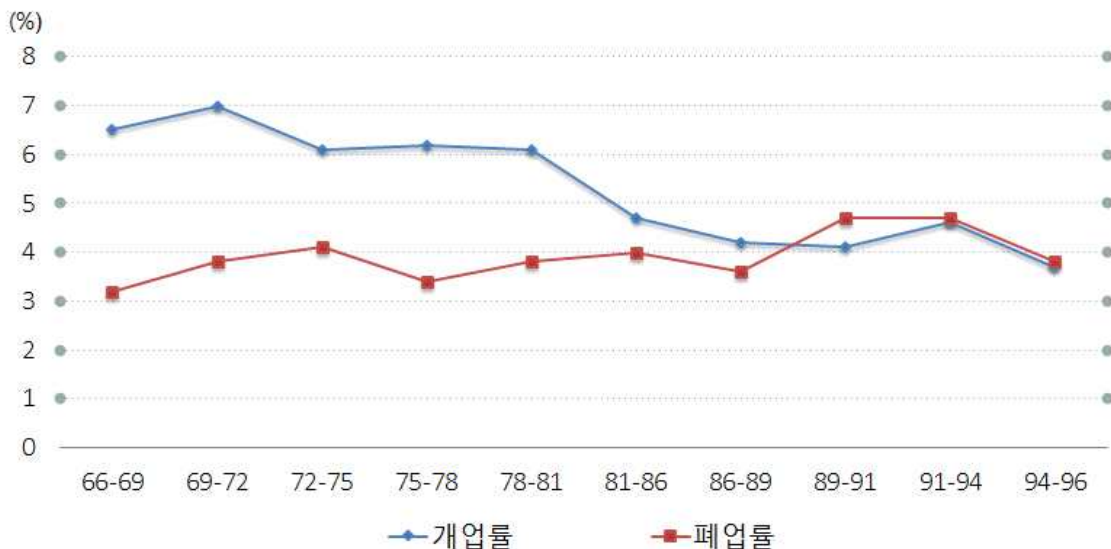
□ 일본의 창업률은 폐업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그 격차가 좁아지다가 1980년 후반 이후 폐업률이 창업률을 추월

- 창업과 폐업의 수가 사업체 수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며, 사업체 수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창업이 폐업보다 많아야 함.
-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폐업률보다 높던 창업률이 그 격차가 계속 줄어들어 그 이후 폐업률이 창업률을 추월

□ 일본 중소기업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몇 가지 근거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창업률과 폐업률 추이임.

- 90년대 후반 들어 농·임·수산업 제외 산업과 규모를 막론하고 사업체 창업률과 폐업률이 하락 추세이며, 폐업률이 89년~91년 동안에 창업률을 초과
- 그 결과 이전 30년 동안 지속적인 증가한 것과 대조적으로 1990년대에는 중소기업 수가 계속 감소
 - 특히 ‘제조업’ 과 ‘도·소매·음식업’ 부문의 사업체 수 감소가 중소기업 감소에 크게 기여하였음.

<그림 3-9> 일본의 개업과 폐업 추이 (1966~1996)



자료 : JSBRI (1999), p.94

: Hori, Kiyoshi (2004),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Japan in

1990s: Recent trends of SMEs, entrepreneurship, and industrial clusters'
에서 재인용

□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도, 일본의 창업률은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창업률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

- The European Observatory for SMEs, Fifth Annual Report (1997)에 의하면, 1988~94 기간 동안 일본의 창업률이 4%대에 불과한 반면, 미국 및 대부분 유럽 주요 국가들의 창업률은 8% 이상을 기록

□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폐업률이 급증하여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한편 창업률은 폐업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매우 변동성이 심해지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그림 3-10> 일본 개업률과 폐업률 추이 (1966~2014)



자료 : 총무성 '사업소·기업통계조사'(2006), '경제기초조사'(2009), '경제활동조사'(2012), '경제기초조사'(2014)

주 : 사업소 기준 (비1차산업)

(7) 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

□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경영이익 격차의 지속 확대

- 1991년 기준 중소기업의 경영이익은 대기업의 60% 수준이었으나, 2014년에는 40% 수준으로 하락
- 1991년~2014년의 23년 동안 중소기업 부문의 경영이익은 52.4% 증가에 그쳤으나, 대기업 부문의 경영이익은 130.8% 증가

<표 3-8> 기업규모별 경영이익 추이

(단위 : 억엔)

년도	중소기업	대기업
1991	9,853,865	16,210,449
1992	8,543,947	12,335,900
1993	7,122,857	10,293,814
1994	7,424,020	11,517,906
1995	8,744,733	13,904,962
1996	7,477,959	15,780,342
1997	8,479,822	15,111,113
1998	5,743,679	12,448,093
1999	7,716,452	15,344,516
2000	10,967,832	19,394,514
2001	8,454,568	15,333,722
2002	8,370,633	18,348,043
2003	8,751,494	20,991,858
2004	11,194,515	25,785,333
2005	14,466,671	29,432,581
2006	12,714,242	32,834,154
2007	12,648,753	32,278,973
2008	10,075,284	19,430,168
2009	9,133,500	17,897,902
2010	10,278,515	25,934,471
2011	11,516,223	23,982,469
2012	12,773,755	25,970,867
2013	14,470,019	34,818,291
2014	15,012,731	37,420,368

출처 : 2015년판 일본 중소기업백서

□ 정규직 근로자의 급여액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간 급여액의 격차도 확대

- 1994~2014년 20년 동안 대기업 근로자의 급여액이 12.4% 증가, 중소기업 근로자는 8.0% 증가하여 실질적으로는 감소한 셈.

- 1994년에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급여액이 대기업 근로자의 81.4% 수준이었으나, 2014년에는 78.2%에 그침.

<표 3-10> 기업규모별 급여액 추이

(단위 : 만엔)

년도	대기업 (정사원)	중소기업 (정사원)
1994	33.8	27.5
1995	34.4	27.9
1996	35.0	28.2
1997	35.7	28.6
1998	35.6	28.3
1999	35.6	28.4
2000	36.1	28.6
2001	36.6	28.7
2002	36.3	28.2
2003	36.4	28.3
2004	36.3	28.7
2005	38.4	29.6
2006	38.4	29.7
2007	38.3	29.8
2008	37.8	29.8
2009	36.8	28.6
2010	37.3	29.0
2011	37.5	28.9
2012	37.8	29.3
2013	37.7	29.4
2014	38.0	29.7

출처 : 2015년판 일본 중소기업백서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산업 간에도 급여 소득자 수 및 급여액의 격차가 존재⁶⁾

- 지난 10년간 제조업의 급여 소득자 수는 감소 (265만 명 감소)에 반해, 서비스업의 급여 소득자 수는 증가 (285만 명 증가)
- 한편, 평균 급여는 제조업은 소폭 증가 (2만 엔 증가)에 비해, 서비스업은 큰 폭으로 감소 (46만 엔 감소)

6) 2014년 중소기업백서 대해

3. 소규모사업자 감소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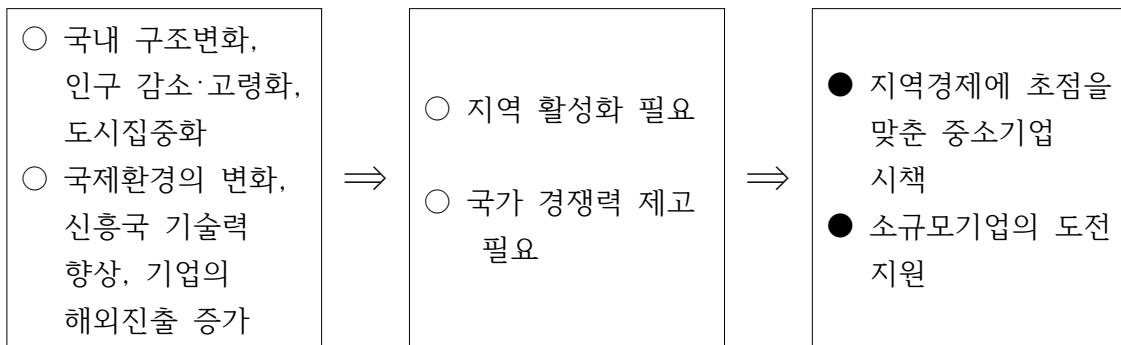
1) 소상공인 감소에 대한 인식

- ☐ 소규모사업자 감소에 대해 우려와 동시에 부정적이며, 장기적 경제 부흥을 위해서는 감소 추세를 극복하여 경기활성화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 소규모사업자는 고용 면 등에 있어 지방 경제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국내 경제에서 갖는 의미가 매우 큼
 - 특히, 3대 도시권을 제외할 경우,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는데, 이는 지방으로 갈수록 소규모사업자에 의존한 경제구조가 두드러진다는 의미임.
- ☐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에 초점을 맞춘 소규모기업 정책이 필요하고, 소규모사업자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임.
 - 구조적 변화로 인해 경제면에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지역경제가 피폐해지는 상황을 겪고 있음.
- ☐ 자영업자의 감소가 일본 비정규직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음.
 - 비정규노동자가 늘어난 것은 감소한 농가나 개인 상점 등의 자영업자와 가족종업자의 받침접시(受け皿: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된 것이 큰 원인
 - 후생노동성은 2015년 1월 30일 공표한 「노동 시장분석 리포트」에 1984년부터 30년간의 정규·비정규 노동자의 동향에 대한 관련 분석 결과를 발표
 - 총무성의 2014년 12월 노동력 조사에서는 비정규직 인원 수가 1984년(604만 명)의 3배 이상인 2,016만 명으로 증가했고, 임원을

제외한 고용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8% (1984년은 15.3%)로 확대되었다고 발표

- 정규직 근로자가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년간 60%에서 52.3%로 저하, 인원수도 3,333만 명에서 3,294만 명으로 감소
- 한편, 산업구조의 전환으로 자영업자·가족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폭 감소
 - 취업자 전체 인원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감소한 자영업자·가족종업자 대신에 비정규직 인원수·비율이 확대

<그림 3-11> 일본 경제사회 구조변화와 소규모기업 활성화



2) 소상공인 감소 전후의 정부 대응

- 1985년 플라자 합의에 따른 엔화 강세가 시작되자, 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금리, 금융규제완화 정책을 실시
 - 주가와 토지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금리를 인상하자 자산시장이 붕괴되고 장기 경기침체를 맞게 됨.
 - 1980년대 중반 버블경제와 함께 장기간의 불황이 찾아오면서, 일본의 소규모사업자는 1986년, 소규모사업소는 1989년을 피크로 감소 추세로 돌아섬.
- 급격한 기업환경 변화로, 기존의 정책에서의 방향전환 모색의 일환으로 1999년에 「중소기업기본법」을 전면 개정

- 일본의 중소기업 정책은 1999년 「중소기업기본법」의 전면 개정을 전후하여 급격히 변함.
- 1999년 이전 중소기업정책의 주된 목표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격차 시정이었다면, 1999년 이후에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기업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

<표 3-11> 일본 중소기업기본법 개정과정의 배경과 동향

시 기	배 경	내 용
60년대 후반	격차 해소와 노동 사정을 배경으로 하는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대응	대기업과의 격차 인식 중소기업의 이른바 '근대화의 지연'이 국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하에 63년에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되어 현대화 장비의 도입 경영의 합리화, 사업의 공동화 등의 대응 방향이 제시
70년대	격차 축소와 중소기업 문제의 변질	경제가 성장하는 가운데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과의 격차는 축소하고 중소기업이 경제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에 대한 기대가 확대 제품의 고부가 가치화, 새로운 분야로의 사업 전개, 공해 문제에 대한 대응에 초점
80년대 초반	변혁의 시대에 새로운 대응 ①	아시아와의 경쟁 관계 심화에 따른 일본 경제의 구조 전환의 실현에 중소기업이 큰 역할 주목되는 환경 변화로는 마이크로 전자 기술의 진전과 그 성과로서, 제조·사무관리 부문에 대한 중소기업의 급속한 확산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	변혁의 시대에 새로운 대응 ②	엔고 정착을 계기로 크게 변한 하청·분업 체제와 해외진출에 따른 중소제조업에 대한 관심 고조 개방적 하청·분업 체제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하청기업이나 서비스 경제화에 대응 한 서비스업의 전개가 주목
90년대 후반	경제 활력 상실의 우려 대응	중소기업의 개업율의 저하 경향이 현저 버블 붕괴 후 어려운 경제 상황에 따라 중소기업의 활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고조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와 일본 경제 부흥의 기반으로 도시형 산업 집적의 기능에 주목
99년 이후	다양한 경영 과제에 대한 대응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새로운 정책 이념 "다양하고 활력있는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혁신 및 금융환경이 핵심 과제로 분석 또한 경영과제 다양화 속에서 다양한 경영과제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현황과 대응이 규명

자료 : 일본 중소기업청, '2013년 중소기업백서' 가공·편집

- 개정 「중소기업기본법」의 기본이념은 독립된 중소기업의 다양하고 활력 있는 성장발전의 도모로, 의지와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음.
- 새로운 기본법에는 중소기업을 경제의 활력소로 보고 넓은 범위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주력
- 중소기업정책 방향전환에 따른 법제도의 정비가 수반됨.
- 중소기업정책의 기본방향이 크게 변화하게 됨에 따라, 각종 중소기업 지원 시책들이 정비되고 통합됨.
- 창업활성화방안, 자금 및 기술혁신지원과 함께 안전망 구축정책 등을 추진

<표 3-12> 일본 중소기업정책의 변화

구 분	안정성장기 (70~1984)	전환기(제1기) (85년~1999년)	전환기(제2기) (00년~2004년)	현재 (2005년~)
주 요 내 용	지식집약화	중소기업창조활동 임시촉진법	신중소기업기본 법	-중소기업신사업활동촉진법 제정 -중소기업모노즈쿠리기반기술 고도화법
세 부 내 용	-소프트자원 충실(인프라기술 , 인재, 정보 등) -중소기업대학설 립 -중소기업정보센 터 설치	-구조전환 -산업집적정책 -신규창업 및 벤처지원정책	-경영혁신.창업 지원 -경영기반강화	-신사업창출촉진법 -중소기업의창조적사업활동촉 진 관계 임시조치법 -중소기업경영혁신지원법 통합 -중소기업의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연구개발 강력 지원

자료 : 이윤보 (2013), '소상공인 정책 및 제도개선 연구'

(1) 「특정중소기업집적의활성화에관한임시조치법」 제정 (1992년)

□ 불황대책이 아니라 구조변화 대책으로서 제정된 것으로, 특정 분야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에게 정부관계 중소기업 금융기관이 저리융자 등으로 지원

- 1985년 엔화 강세에 의해 특정 업종과 그 업종이 집적한 특정지역

이 경쟁력을 잃어 큰 타격을 입기 시작함.

- 엔화 강세에 의한 불황의 영향이 컸던 지역을 지정하여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특정지역중소기업대책임시조치법」(특정지역법)이 1986년 제정
- 1980년대 제조업 분야는 지역장치산업진흥센터의 설치 등에 의해 지역장치산업대책과 엔고 등으로 불황에 빠진 기업과 수출형 산지의 중소기업의 신분야진출을 지원하는 「특정지역법」이 강화됨.
 - 「특정지역법」의 후속법으로 1992년 「특정중소기업집적의활성화에관한감시조치법」(중소기업집적활성화법)이 제정됨.
- 1990년대 들어 시장에서의 소비자 요구 변화, 제품 수입의 증대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사업활동이 정체되고, 중소기업 집적의 붕괴가 염려되자 「특정중소기업집적의활성화에관한임시조치법」(중소기업집적활성화법)이 제정됨.

(2) 「신사업창출촉진법」 제정 (1998년)

□ 이 법은 「중소기업창조활동촉진법」에 비해서 개인과 창업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

- 1989년 신기술에 의한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생산방식의 고도화를 위한 법률로서 제정되었던 「특정신규사업실시원활화임시조치법」에 창업신사업지원책이 추가되어 1998년 「신사업창출촉진법」이 제정됨.
- 이 법은 「중소기업창조활동촉진법」에 비해서 개인과 창업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조되었으며, 법률의 3가지 주체를 언급하고 있음.
 - 첫 번째는 개인과 창업 5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성금, 저리융자, 신용보증 특례 등의 지원을 실시함.
 - 두 번째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제도(일본판 SBIR)로서, 계획은 각 성(및 특수법인)이 기술개발과제를 다양한 전문 분야에 제시하고, 중소기업은 이 과제에 응모해서 심사를 받음.
 - 세 번째는 지역 플랫폼의 정비로, 도도부현이 신사업창출을 백업

하는 기관의 네트워크 정비를 지원하는 것임.

(3) 중심시가지활성화법, 개정도시계획법, 대점입지법 (1998년)

□ 대형점포 규제를 위한 기존 법률의 문제점 노출로 인해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로 대체

- 1973년 대형점포의 출점 규제를 통해 중소소매업의 사업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소매점포 사업활동의 조정에 관한 법률」(대점법)을 제정

<표 3-13> 마치즈쿠리 (거리조성) 3법 개요 (1998)

	중심시가지활성화법	개정도시계획법	대점입지법
공표	1998년 6월	1998년 5월	1998년 6월
시행	1998년 7월	1998년 11월	2000년 6월
목적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심시가지의 활성화	지역실정에 맞는 마치즈쿠리를 진전시키고, 도시계획상의 지방분권을 추진	대규모 소매점포에 의한 주변지역 생활환경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적 규제 실시
개요	시가지 정비, 상업 활성화를 축으로 종합대책을 추진	종류/목적에 따라 특별 용도지구를 지역이 설정 가능	조정대상은 점포면적 1,000m ² 이상의 소매점포
	지역이 기본계획을 작성, 그에 기초한 TMO의 사업계획을 정부가 인정, 지원		
운용주체	시정촌	시정촌	도도부현, 시정촌

- 그러나, 대점법의 엄격한 시행에도 불구하고, 영세소매상은 급격히 쇠퇴하였고,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영세소매상이 아니라 중규모 및 대규모 소매상이 된 결과
- 확장 억제로 인해 대규모 소매점은 소매상이 밀집되지 않은 대도시의 교외지역,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는 문제점이 노출
- 이에 따라 1998년부터 대점법이 폐지되고 신3법 (대점입지법, 중심시가지활성화법, 개정도시계획법)으로 대체

(4) 「소규모기업자등설비도입자금조성법」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 (1999년)

□ 1963년에 제정된 「중소기업근대화자금조성법」이 발전된 법

-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와 설비근대화를 금융 면에서 촉진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1963년에 「중소기업근대화자금조성법」이 제정됨.
- 이 법은 사업의 공동화로써 공장·점포 등의 집단화 등을 종합사업의 형태로 실시하여 조성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꾀하고자 함.
- 이 법이 1999년 「소규모기업자등설비도입자금조성법」(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으로 발전
- 소규모기업자 및 창업자가 경영기반 강화를 위해 설비를 도입하려는 경우, 설비자금의 대출, 설비 대여를 실시

(5) 「중소기업종합사업단법」 (1999년)

□ 중소기업사업단법 (1980년)이 「중소기업종합사업단법」으로 발전

- 1980년 중소기업사업단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전액을 출자한 중소기업사업단이 설립
-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촉진을 위한 지도, 자금대출 및 출자 등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경영관리 합리화 및 기술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연수 및 지도 등의 사업과 공제제도의 운영 등을 시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진흥, 소규모기업가의 복지증진 및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일을 수행
- 이후 관련법은 1999년 「중소기업종합사업단법」으로 발전하였으며,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역할을 담당

(6) 「중소기업기본법」의 전면 개정 (1999년)

□ 중소기업을 둘러싼 기업환경이 급격히 변하여, 종래의 정책에
서의 방향전환을 모색해야 했음.

<표 3-14> 일본 「중소기업기본법」 개정과 소규모기업

구 분	내 용
목적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 시책에 대한 기본 이념·기본 방침 등을 정함 동시에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기본 이념	동법에서는 중소기업을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특색 있는 사업 활동을 하고,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존재"라고 평가 특히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창의력을 살려 경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활동을 통해 (a) 새로운 산업의 창출, (b) 취업 기회 증대, (c) 시장에서 경쟁 촉진, (d)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일본 경제의 활력의 유지 및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기대 따라서 국가는 "다양하고 활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독립적 중소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전제로 하면서 (a) 경영 혁신 및 창업의 촉진, (b) 경영기반의 강화 (c) 경제적 사회적 환경 변화에 적응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책정하고 실시할 책무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 또한 중소기업은 (a) "지역의 특색을 살린 사업 활동을 실시하여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등 지역경제 안정,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 및 교류 촉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b) "창조적인 사업 활동을 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등 미래의 국가 경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의의를 가짐.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다양하고 활력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기업의 활력이 최대한 발휘 될 수 있어야 함.
기본 방침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시책에 특히 중점 지원을 하고 시책 대상 및 사업 활동의 지원을 다음과 같은 기본방침으로 규정 1) 경영 혁신 및 창업의 촉진을 도모 2)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의 강화를 도모 3) 경제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적응의 원활화를 도모
소규모 기업에 대한 시책 방침	기본 이념에 규정되어있는 소규모기업의 중요한 의의를 바탕으로 소규모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시책의 방침을 다음과 같이 규정 1) 소규모기업의 지속적인 사업 활동과 지역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사업 활동 활성화를 도모 2) 소규모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정비를 도모 3) 중소기업 경영의 발전·개선과 경영상황 대응에 필요한 고려와 조치

출처 : 일본 중소기업청, '일본 중소기업시책총람', 2015 pp.3~4.

- 1980년대 중반 버블경제 붕괴와 함께 장기간의 불황이 찾아오면서, 일본의 소규모사업자는 1986년, 소규모사업소는 1989년을 피

크로 감소추세로 돌아서는 등 중소기업을 둘러싼 기업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였고, 기존의 정책에서 방향전환을 모색해야 했음.

- 그 일환이 1999년의 「중소기업기본법」 전면 개정임.
- 신중소기업기본법의 기본이념은 독립된 중소기업의 다양하고 활력 있는 성장발전의 도모로, 의지와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음.
- 새로운 기본법에는 중소기업을 경제의 활력소로 보고 넓은 범위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 데 주력.

(7) 「중소기업신사업활동촉진법」 (2005년)

□ 1995년 제정된 「중소기업의창조적사업활동의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중소기업창조활동촉진법)이 「중소기업신사업활동촉진법」으로 발전

- 일본경제는 버블경제 붕괴 이후 경직화되어 개업률 저하와 폐업률 상승을 초래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의 창업과 신규사업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1995년 「중소기업의창조적사업활동의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중소기업창조활동촉진법)을 제정
 - 동법은 특정업종을 정하지 않고 개별 중소기업과 개인의 창업 및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자리매김
 - 중소기업자와 개인이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사업화에 관한 연구개발 등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도도부현지사의 인정을 받으면, 보조금, 저리융자, 신용보증 특례, 세제 특례 등의 혜택을 받게 됨.
- 이후 2005년 「중소기업신사업활동촉진법」으로 발전

<표 3-15> 법률 개정 사례

구 분	내 용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소규모기업의 사업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기본이념」과 「시책의 방침」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해외홍보를 추진 등 중소기업시책으로서 현재 중요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
소규모기업공제법,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에 의한 소규모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소규모기업의 다양성에 착안하여 특정 업종에 대해 소규모기업자 범위의 변경을 정령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
중소기업신용보험법 개정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신용보증대상에 전자기록채권을 활용한 자금조달(전자기록 채권의 할인 등)을 추가
중소기업지원법 개정	IT를 활용하고, 전문가나 비즈니스 파트너 소개 등을 하는 사람의 국가인정, (독)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의 협력 등의 지원 조치를 강구
하청 중소기업진흥법 개정	하청 중소기업이 제휴하여 자립적으로 거래처를 개척하는 계획을 나라가 인정하며 중소기업신용보험법의 특례 등의 지원 조치를 강구
주식회사 일본 정책금융공고법 및 오키나와 진흥개발금융공고법 개정	사업재생 촉진을 위해 (주)일본정책금융공고 및 오키나와 진흥개발금융공고의 업무에 채무의 주식화업무(DES)을 추가
소규모기업자 등 설비도입자금조성법 폐지	소규모기업에 대한 금융조치의 발본강화에 따라 소규모기업자 등 설비도입자금조성제도를 폐지 (※ 시행기일은 충분한 주지기간·준비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2015년 3월 31일로 함)

주 : 2013년 9월 20일 「소규모기업의 사업활동의 활성화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등의 법률(소규모기업활성화법)」 시행

출처 : 일본 중소기업청 사업환경부 기획과

(8) 「소규모기업 사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등의 법률(소규모기업활성화법)」 시행 (2013)

□ 소규모기업의 사업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

- 법률에서는 소규모기업의 사업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의 기본이념에 소규모기업의 의의 등을 규정하는 동시에, 소규모기업에 정보제공의 충실, 소규모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와 관련된 지원 등의 조치를 강구

(9) 자영업 후계자에 세금우대방안 검토 추진 (2016년)

□ 소매업, 숙박업, 축산업 등 자영업자의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우대조치 확대

-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기계, 차 등 설비의 평가를 통상보다도 감액하거나 납세시기를 연기하는 것을 검토
- 2015년 1월의 상속 증세가 사업승계에 장벽이 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2016년도 세제개정으로 논의할 방침으로, 이는 지방경제를 유지하려는 목적도 있음
- 세금 우대는 법인의 형태가 아닌 개인이 사업을 경영하는 자영업자가 대상
- 후계자가 없어 폐업하는 사업자가 많고, 경영자가 사망할 경우 후계자가 사업을 물려받는데 드는 상속세 부담이 자영업자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10) 건물임대차계약의 갱신에 따른 임차인 보호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적정임대료를 산정

◎ 일본의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⁷⁾에 의한 임차인 보호

- 일본의 경우 차지차가법에 의해 건물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사전통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불이행할 시 법정갱신의 효과가 발생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 정당성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게 되어 있음. 즉 임차인을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임.
- 정당한 사유란, 구차지법, 차가법 상에 있어서도 ‘자신이 사용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新 차지차가법에서도 쌍방의 사정을 비교 고려하는 것 이외에, ‘재산상의 급부’도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토지소유자의 사정뿐만 아니라, 차주(借主)의 사정으로서 투하자본의 회수, 차주의 적극손실(이전 비용, 영업손실 등) 혹은 공익, 사회상의 제반 사정도 포함시켜서 종합 판단하는 것임.
- 또한 대법원 판례도 종래부터 ‘퇴거료의 제공은 정당사유의 유력한 사정’이라고 하여 적정한 퇴거료의 지불이 그 판단 요소로 되어 있음.

(출처: 일본 오카모토 법률사무소

<http://www.okamoto-law-office.com/modules/d3blog/details.php?bid=2>)

-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퇴거료인데, 즉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충분한 퇴거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게 되어있음.
- 또한 일본의 임대료 인상 규정에 대해서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적정임대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7) <http://law.e-gov.go.jp/htmldata/H03/H03HO090.html>

<표 3-16> 분야별 일본 중소기업 관련 법률의 변천

구분	중소기업 관련법률
기본원칙	□ 중소기업청 설립 (1948) □ 반독점법 (1947) □ 중소기업기본법 제정 (1963)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1999)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2013)
금융정책	□ Shoko Chukin 은행 설립 (1936) □ 국민생명금융공사 (1949) □ 중소기업신용보험법 (1950) □ 신용보증연합법 (1953) □ 중소기업 일본금융공사 설립 (1953) □ 중소기업투자회사 (1963) □ MARUKEI (1973) □ 일본금융공사법 (2007) □ Shoko Chukin 은행 제한법 (2007) □ 신용보험시스템 확대 (2007) □ 중소기업도산방지 상호구조시스템법 개정 (2010) □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2012)
지원정책	□ 중소기업상담센터 설치 (1948) □ Blue return system (1949) □ 중소기업 상담등록시스템 (1953) □ 하도급법 (1956) □ 특정산업 진흥 (기계산업 진흥을 위한 임시조치법) (1956) □ 중소기업근대화촉진법 (1963) □ 소기업상호구제법 (1965) □ 중소기업의 정부 및 공공기관 주문확인법 (1966) □ 근대화 중소기업을 위한 용자 (1966) □ 소기업진흥공가설립 (1967) □ 중소기업전환법 (1976) □ 중소기업대학 (1980) □ 중소기업과 지역혁신 기구 설립 (2004) □ New Partnerships 지원 (2005) □ 중소기업 신사업활동촉진법 (2005) □ 중소제조업강화법 (2006) □ 지역자원 활용 중소기업경영활동 진흥법 (2007) □ 중소기업과 농·림·수산업 사업 협력법 (2008) □ 소기업상호구제법 개정 (2009) □ 산업재활을 위한 특별조치법 (2009) □ 지역상가재건법 (2009) □ 산업재활법 개정 (2011) □ 경영개선지원공급자 인증 (2012)
조직정책	□ 중소기업조합법 (1949) □ 상공회의소법 (1953) □ 중소기업연합조직법 (1957) □ 상공연합회법 (1960) □ 상가진흥연합법 (1962)

자료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Agency,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Japan's Policy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and Micro Enterprises', September 2013.

3) 최근 일본 정부의 인식과 대응

□ 소규모사업자는 지역 경제의 안정과 지역 주민의 삶의 향상 촉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존재라는 인식

- 전국 중소기업의 약 85%를 차지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사업 활동을 실시하여 취업 기회를 제공
- 또한 현지 수요에 부응하고 고용을 담당하는 등 지역 경제의 안정과 지역 주민의 삶의 향상·교류 촉진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존재라는 문제 인식을 가짐.

<그림 3-12> 중소기업 진흥 4대 목표 및 10개 중점시책

소규모기업진흥기본법	소규모기업진흥기본계획	
	4대 목표	10개 중점시책
【기본계획 제13조】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 【기본방침 제6조】 ① 수요에 따라 상품의 판매, 새로운 사업 전개의 추진 ② 경영 자원의 유효 활용, 인재 육성·확보 ③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사업 활동의 추진 ④ 적절한 지원 체제 정비	1. 수요를 고려한 경영의 촉진 얼굴이 보이는 신뢰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한 수요의 창출·발굴	① 사업 계획 등에 근거 경영의 촉진 ② 수요 개척을 위한 지원 ③ 새로운 사업 전개와 고부가가치화 지원
	2. 신진 대사 촉진 다양한 인재·새로운 인재의 활용에 의한 사업 전개·창출	④ 기업·창업 지원 ⑤ 사업승계·원활한 사업 폐지 ⑥ 인재 확보·육성
	3.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사업 활동의 추진 지역의 브랜드화· 성황의 창출	⑦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있는 사업의 추진 ⑧ 지역 커뮤니티 지원사업 추진
	4. 지역 전체가 총력을 지원 체제의 정비 사업자의 과제를 스스로의 과제로 파악한 섬세한 대응	⑨ 지원 체제의 정비 ⑩ 절차 간소화·시책 정보 제공

출처 : 2016 일본 소규모기업백서 요약

□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일본 정부의 지원은 소규모기업 진흥·지원에 관한 법률과 조직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짐.

- 전자의 중심에는 「소규모기업진흥기본법 (소규모기본법)」과 「소규모기업공제법」 등이 있으며, 후자는 「상공회법」과 「상공회의소법」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그림 3-13> 일본 소규모기업 관계법제의 체계도



※ 상공회 및 상공 회의소에 의한 소규모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자료 : 일본 중소기업청 (2015), '중소기업시책총람', p. 210.

□ 2014년 중소기업 진흥의 4대 목표와 10개 중점시책

- 2014년 6월 20일에 제정된 「중소기업진흥기본법」에서는 소규모사업자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초에 따라,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때 4개의 기본방침을 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기본계획 (2014년 10월 3일 각의 결정)」에서 4개의 목표와 10개의 중점시책을 설정

□ 「중소기업진흥기본법 (소규모기본법)」은 지금까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되어 있던 ‘성장 발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본 원칙으로 함.

- 2014년 6월에 「중소기업진흥기본법 (소규모기본법)」 및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에 의한 소규모사업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소규모 지원법)」이 성립
 - 「소규모기본법」은 지금까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되어 있던 ‘성장 발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지역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중소기업진흥기본계획」에서 4개의 목표를 설정하여 시책을 수립 및 집행
 - ① 수요를 고려한 경영의 촉진
 - ② 신진 대차 촉진
 - ③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사업 활동의 추진
 - ④ 지역 차원에서 충력을 기울여 지원 체제의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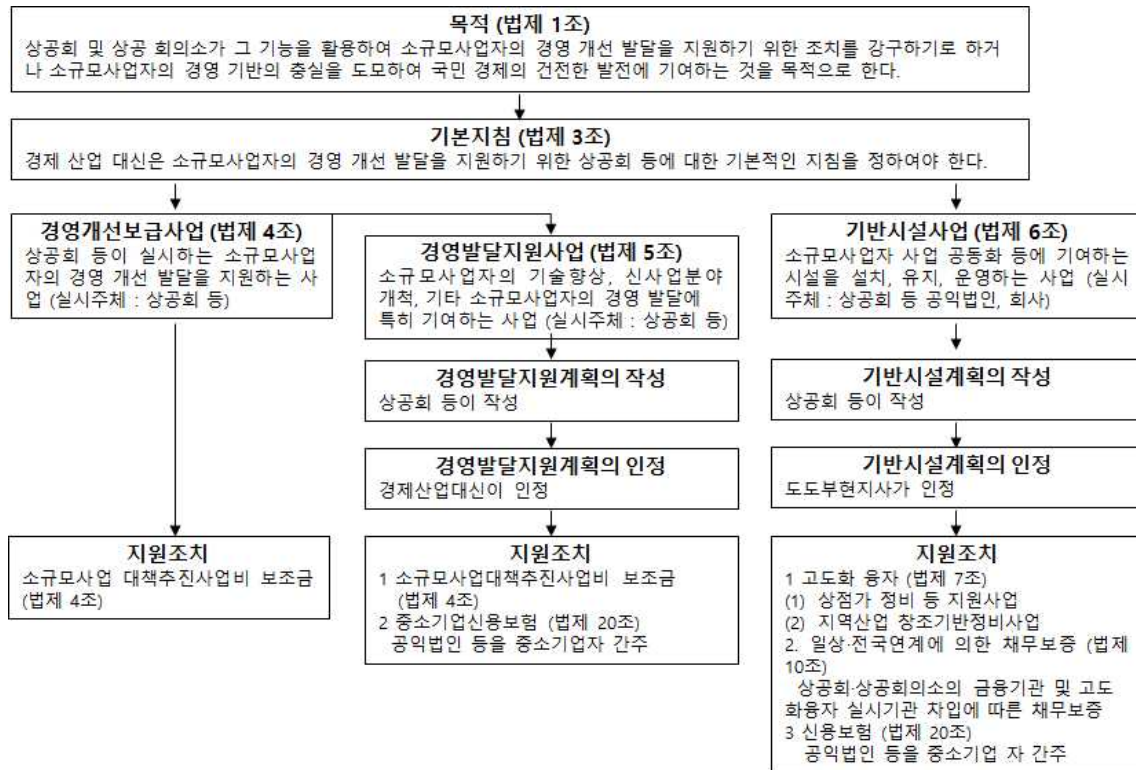
□ 소규모사업자를 둘러싼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의 지원 요구도 다양화·고도화

- 최근 기술 혁신과 정보화의 진전 등을 배경으로 한 경영 자원의 고도화, 소비자 요구변화, 세계 개혁, 환경 문제 등 소규모 사업자를 둘러싼 사회 경제 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의 지원 요구도 창업, 경영 혁신, IT 등 다양화, 고도화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사업자지원법」이 개정 됨.

-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 이러한 다양화·고도화하는 요구에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제186회 정기국회에서 「소규모기업진흥기본법」의 성립과 함께 「상공회 및 상공 회의소에 의한 소규모 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소규모사업자지원법)」이 개정되었음.

<그림 3-14> 「소규모사업자지원법」의 체계도



자료 : 일본 중소기업청 (2015), '중소기업시책총람', p. 213.

□ 일본 중소기업청에 의한 중소기업 및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몇 가지 현실적인 대책이 주목됨.⁸⁾

- 지역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 낮은 창업률 제고를 위한 대책
 - 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 창업 이후 생활 및 소득 안정을 위한 보증제도 및 소규모기업공제 등 사회안전망
 - 기업 활동 관련된 비용 및 절차의 감소, 상담
- 후계자 육성 및 사업승계를 위한 정보제공, 인재확보, 매칭, 의식 전환
- 폐업대책
 - 폐업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

8) 2014년판 일본 중소기업백서 대해

- 익명성을 배려 한 전문가 지원 (전화 상담)
- 소규모 기획사업 공제제도의 새로운 보급·확대를 도모
- 소규모사업자의 해외진출 수요 충족
 - 현지에서 지원하는 민관의 지원 기관 네트워크를 구축
 - 법무·회계·노무, 자금 조달, 인력 확보, 파트너 발굴 등을 지원하는 ‘해외 진출 현지 지원 플랫폼’의 강화·확충을 도모
 - 다양화하는 해외 전개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민간의 해외전개 지원 기업(해외진출 지원 민간기업 최소 10,000개, 그 중 종합적 지원 기업은 2,000개가 있음)과의 제휴도 추진
 - Web 플랫폼을 활용하여 세계의 동료와 협력하여 일본 중소기업의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을 하는 기업사례도 있음.
- IT를 활용하여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클라우드 소싱’
 - 필요할 때 수요 인력을 조달하거나 경영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규모사업자가 오랜 경영 과제를 극복 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
 - IT를 활용한 자금조달 (이른바 ‘클라우드 펀딩’)은 개인이 기업에 직접 투자할 가능성이 존재
 - 기능이 다양한 이유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의 자금조달의 가능성이 확대
- 사회 가치와 기업 가치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CRSV (Creating and Realizing Shared Value)
 -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의 사업을 통한 지역 과제의 해결은 지역 활성화라는 ‘사회 가치’를 창조함과 동시에 그 혜택을 받은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등을 초래
 - 또한 그 지역에서 새로운 고객 창출이나 수요 창출을 이끌어 내고, 기업 이익의 증대는 ‘기업 가치’의 창조로 이어질 선순환을 만들어 냄.
- * 미국 경영학자 마이클 포터는 2011년에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CSV (Creating Shared Value)라고 지칭

<표 3-17> 소규모사업자 부문의 과제

구 분	내 용
소규모기업자	□ 인재/노동 - 인력부족, 노동생산성 격차 □ 금융 - 순자산 적고, 고정부채 많음, 자기자본비율 낮음 - 매출 하락 시 자금사정 악화 □ 판로개척 - 매출 정체 및 감소로 도산요인으로 작용 - 규모가 작을수록 심함 □ 상점가 - 연간 매출 1997~2007년 10년 동안 80% 축소 - 고령화 진전으로 후계자 대책 불충분 □ 기술 - 연구개발기업 비율 매우 낮음 - 규모가 작을수록 특허, 실용신안 등 보유기업 적음 □ 개업률 - 1988년 이후 감소. 지난 10년간 폐업률보다 낮음 □ 사업승계 - 소규모기업의 50% 이상이 사업연속을 기대하지만, 후계자 문제로 폐업하는 경우가 약54% - 특히 제조업체의 경우, 문제가 심각 □ 개인사업자 - 사업에 소극적, 경영다각화 검토 경우 거의 없음
소규모기업 지원기관	■ 소규모사업자 경영지원의 다양화 - 경영여건 변화로 소규모사업자의 경영과제, 지원요구가 다양 및 복잡 - 특히 ‘영업력 및 판매력 강화’ 부문 ■ 중소기업 및 소규모사업자 경영상담 - 정기적인 경영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별로 없음 - 회계·재무·회계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이 정착 - 그러나 시장판로 및 상품·서비스 개발에 대한 상담은 가족 등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한편, 전문가와의 상담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

자료 : 2015년판 일본 소규모기업백서

IV. 시사점 및 정책방향

- 한국 소상공인은 일본 소규모사업자의 지속적인 감소와는 대조적으로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다만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
- 소상공인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인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업’의 소상공인 비중도 같은 기간 동안 감소하였음.
- 일본의 장기불황을 초래했던 경제사회 요인들 중 상당 부분이 한국에도 이미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 한국의 경제여건과 기업역량이 일본의 당시 여건보다 열악하고 역량도 취약하다는 것이 문제임.
- 일본의 소규모사업자는 20년 이상 지속된 장기 경기침체를 겪어 왔으며, 그 이전인 30년 전부터 감소하여 지역경제가 피폐하고 기업 및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었음.
- 일본 소규모사업자 감소와 침체 원인과 그에 대한 정부 및 기업의 대응은 경제발전 경로 및 산업구조가 유사한 한국의 소상공인 부문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 i) 일시적인 경기부양책보다 근본적 성장역량 확충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
 - ii) 정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
 - iii) 지역경제 활성화, 내수확대,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기존 제조업의 첨단화 등의 경제·산업정책을 포괄적으로 추진해야 것
 - iv) 소상공인은 강점 분야에 집중,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 판로개척, 인재 확보·육성, 시장 세분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
 - v) 특히 기존에 유효했던 기업 간 상호의존 관계가 약화됨에 따라 자체적 경영활동 강화에 주력해야 함.
- 한국이 처한 상황과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소상공인정책은
 - i) 지역산업 진흥, ii) 생산성 향상, iii) 수요 개척, iv) 인재 확보 및 신진대사, v) 사회 안전망 확보 등이 강조되어야 함.

1. 한국 소상공인 동향과 경제·사회 동향

1) 한국 소상공인 동향

- ☐ 퇴직자 및 은퇴자 증가, 취업 및 재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한국 소상공인 분야의 창업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

- 퇴직 및 은퇴자들의 소득창출 필요성 증대, 청년층 취업난, 장년층의 재취업 어려움 등이 창업을 돌파구로 선택하기를 유도
- 베이비부머(1955~63년생)의 본격적인 은퇴와 함께 최근 직장을 그만 두고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30~40대가 늘고 있음.
- 2014년 신규 사업자 연령대가 40대(32.0%), 30대(25.3%), 50대(24.2%)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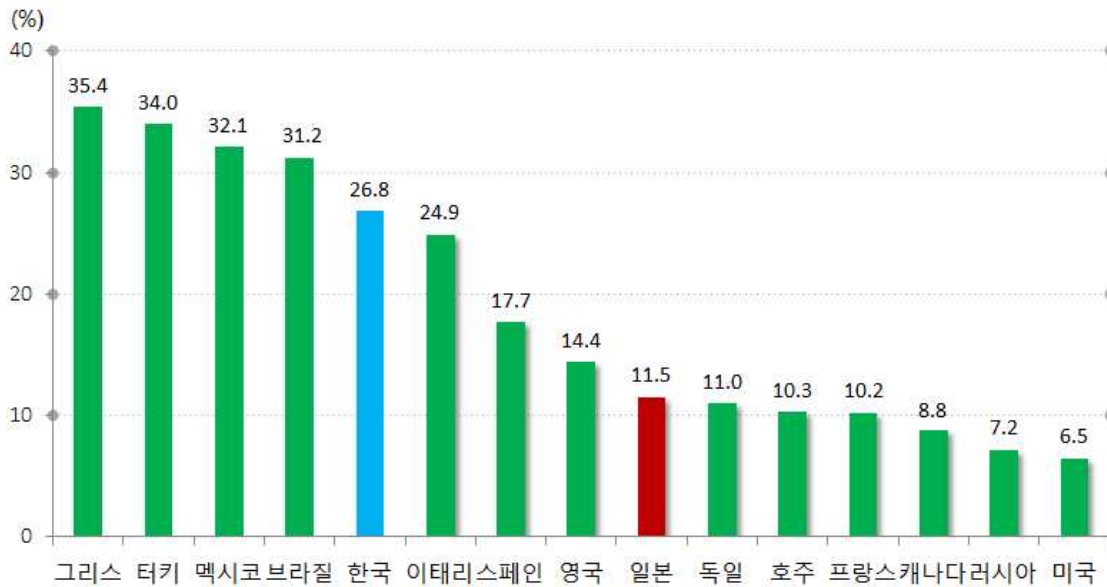
□ 따라서 기술 및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창업보다는 창업이 용이한 일부 업종에 치중·밀집되어 출혈경쟁을 야기

-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식점업에 몰리면서 외식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
- 2014년 신규사업자 업종이 소매업(17.0%), 음식점업(16.8%), 부동산업(16.7%), 운송 및 건설업(10.7%), 도매 및 상품중개업(9.9%), 제조업(6.0%), 기타(22.9) 등임.

□ 또한 한국은 자영업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창업 중에서도 ‘생계형 창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에 속함.

-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5위, 일본의 2배 이상
- 그리스(35.4%), 터키(34.0%), 멕시코(32.1%), 브라질(31.2%), 한국(26.8%), 이태리(24.9%), 스페인(17.7%), 영국(14.4%), 일본(11.5%), 독일(11.0%), 호주(10.3%), 프랑스(10.2%), 캐나다(8.8%), 러시아(7.2%), 미국(6.5%) : OECD, Statista Charts (2014 또는 최근 연도 기준)
- 한국은 창업 유형 중 생계형 창업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에 해당
- 한국(63%), 중국(42%), 프랑스(27%), 미국(26%), 일본(22%) : OECD 2014 기업가정신 보고서

<그림 4-1> 자영업자 비율 국제 비교



주 : 전체 고용 대비 자영업자 비율(%), 2014년 또는 가장 최근 연도
 자료 : OECD, Statista Cha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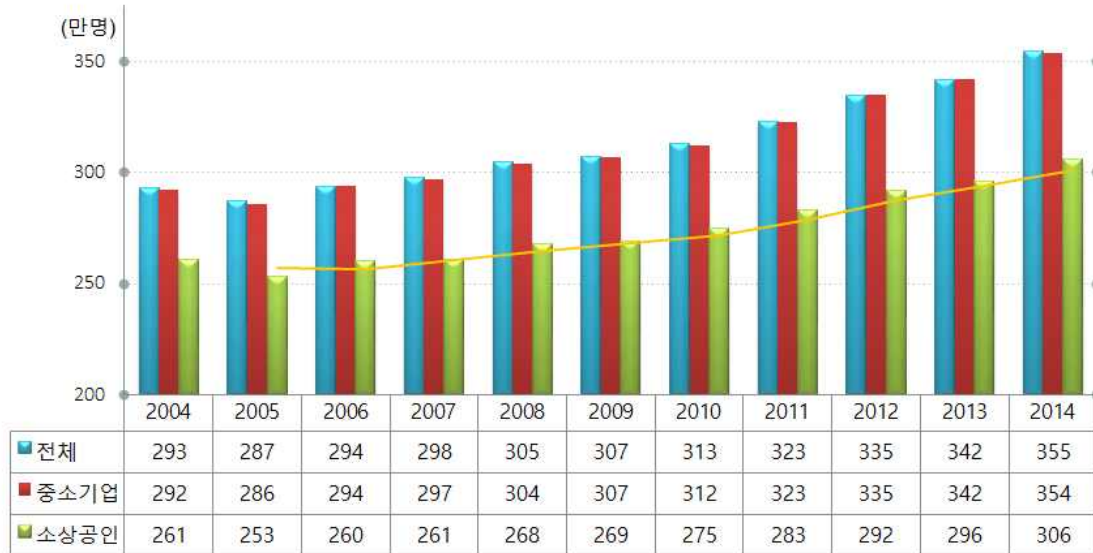
- 이미 시장에 진입한 소상공인은 경기침체, 경쟁 격화, 낮은 수입, 대기업 지배력 강화 등으로 경영난 가중에 직면
 - 대부분 소상공인의 이러한 경영악화가 소득감소, 폐업 등으로 이어져 결국 개인의 부채증가, 가계부문의 부채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 2014년 폐업한 자영업자의 수는 68만 604명으로, 폐업한 자영업자 중 외식업이 15만 6453명으로 23%를 차지하여 소매업(14만 366명) 폐업자보다 더 많았음(2015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2) 한국 소상공인 추이

-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일본의 경우와는 반대로 한국 소상공인 수는 지속 증가 추세
 - 지난 10년 동안 (2004~2014년) 한국의 소상공인은 2005년 일시적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계속 증가하여 약 45만 증가
 - 중소기업 수가 약 62만 증가하여 21.2% 증가한 것에 비하면 17.2%

증가하여 증가 폭이 다소 적은 편

<그림 4-2> 한국 소상공인 수 추이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2016)

-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같은 기간 동안 약 97만명 증가하였으며, 이는 19.1% 증가에 해당
- 중소기업 종사자 수가 약 382만 증가하여 37.4% 증가한 것에 비하면 증가폭이 위의 경우보다 더 적은 수준

<그림 4-3> 한국 소상공인 종사자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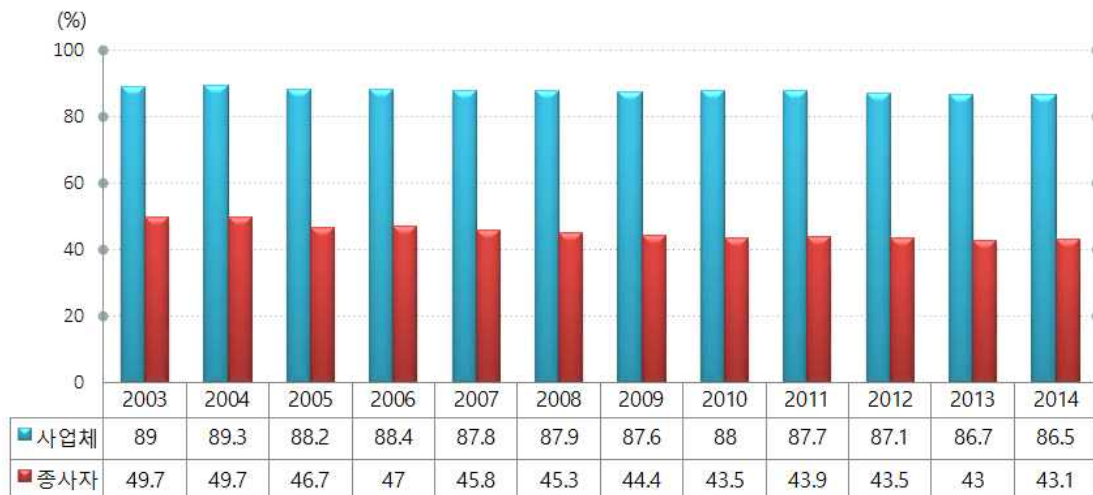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2016)

□ 한편, 전체 사업체 및 중소기업에서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수적 비중은 감소 추세가 뚜렷함.

- 지난 10년 간 전체 사업체 수 대비 및 중소기업 사업체 수 대비 소상공인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

<그림 4-4> 한국 소상공인 사업체 및 종사자 비중 추이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2016)

<표 4-1> 한국 소상공인 수 및 비중 (전체, 중소기업 대비) 추이

(단위 : 개, %)

년도	전 체	소상공인			중소기업
		수	비중(전체)	비중(중기)	
2014	3,545,473	3,063,001	86.4	86.5	3,542,350 (99.9)
2013	3,418,993	2,962,367	86.6	86.7	3,415,863 (99.9)
2012	3,354,320	2,918,595	87.0	87.1	3,351,404 (99.9)
2011	3,234,687	2,834,954	87.6	87.7	3,231,634 (99.9)
2010	3,125,457	2,748,808	87.9	88.0	3,122,332 (99.9)
2009	3,069,400	2,685,856	87.5	87.6	3,066,484 (99.9)
2008	3,046,958	2,675,270	87.8	87.9	3,044,169 (99.9)
2007	2,976,646	2,612,222	87.8	87.8	2,974,185 (99.9)
2006	2,940,345	2,596,901	88.3	88.4	2,936,114 (99.9)
2005	2,867,749	2,526,888	88.1	88.2	2,863,583 (99.9)
2004	2,927,436	2,609,041	89.1	89.3	2,922,533 (99.8)
2003	2,939,661	2,612,050	88.9	89.0	2,934,897 (99.8)

□ 지난 10년 간 소상공인 증가율이 등락을 거듭하다가 최근 들어 증가율은 다소 감소 추세였다가 2014년에는 높은 증가율 시현

- 3.13% ('11) -> 2.95% ('12) -> 1.50% ('13) -> 3.40% ('14)
- 최근 3년 동안 전체 사업체 및 중소기업 사업체 수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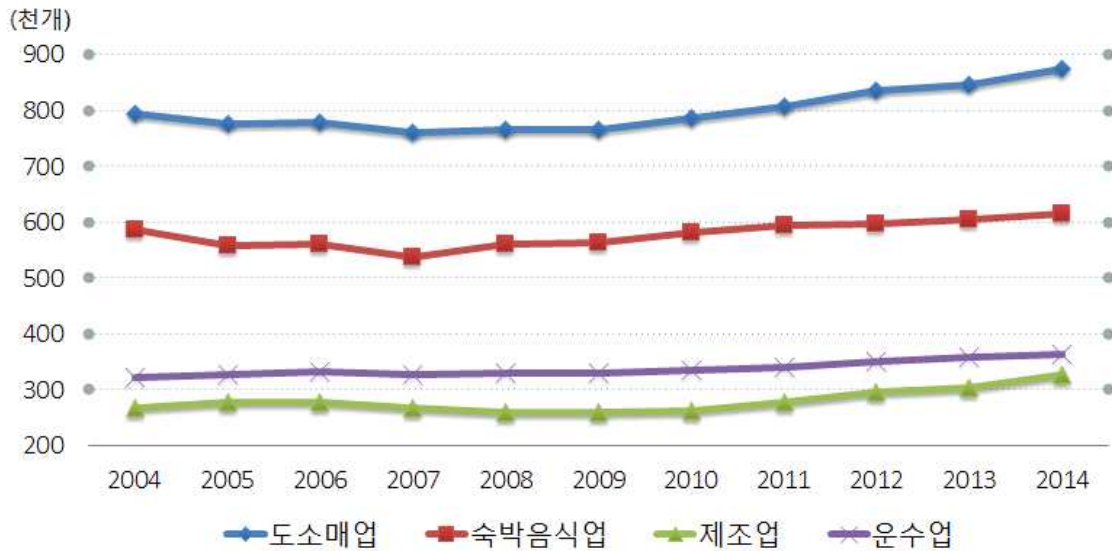
<표 4-2> 한국 소상공인 수 증감 추이

(단위 : 개)

년도	소상공인		
	수	증감	증감률(%)
2014	3,063,001	100,634	3.40
2013	2,962,367	43,772	1.50
2012	2,918,595	83,641	2.95
2011	2,834,954	86,146	3.13
2010	2,748,808	62,952	2.34
2009	2,685,856	10,586	0.40
2008	2,675,270	63,048	2.41
2007	2,612,222	15,321	0.59
2006	2,596,901	70,013	2.77
2005	2,526,888	-82,153	-3.14
2004	2,609,041	-3,009	-0.11
2003	2,612,050	79,598	3.14

- 한편 지난 10년 간 소상공인 부문을 주요 업종별로 그 추이를 보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비중은 다소 감소한 반면, ‘제조업’과 ‘운수업’의 비중은 다소 증가
- 소상공인 업종별 수적 비중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경우, 2004~2014 동안 각각 30.5%에서 28.6%, 22.5%에서 20.1%로 감소
 - 그러나 제조업’은 10.3%에서 10.6%로 다소 증가하였음.

<그림 4-5> 한국 소상공인 업종별 추이 (사업체수)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2016)

□ 소상공인 분야의 종사자 수는 지난 10년 간 증가하였으나, 전체 종사자 및 중소기업 종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 소상공인 부문 종사자 수는 지난 10년간 (2004~2014년) 약 97만명 증가하였음.
- 반면에 전체 종사자 및 중소기업 종사자 수 대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전체 종사자 및 중소기업 종사자 수 대비 비중이 각각 42.9%에서 37.9%, 49.7%에서 43.1%로 감소하였음,

<표 4-3> 한국 소상공인 종사자 수 비중(전체, 중소기업 대비) 추이
(단위 : 명, %)

년도	전 체	소상공인			중소기업
		종사자 수	비중(전체)	비중(중기)	
2014	15,962,745	6,046,357	37.9	43.1	14,027,636
2013	15,344,860	5,777,765	37.7	43.0	13,421,594
2012	14,891,162	5,677,013	38.1	43.5	13,059,372
2011	14,534,230	5,548,741	38.2	43.9	12,626,746
2010	14,135,234	5,333,561	37.7	43.5	12,262,535
2009	13,398,497	5,217,922	38.9	44.4	11,751,022
2008	13,070,424	5,194,991	39.7	45.3	11,467,713
2007	12,612,692	5,102,578	40.5	45.8	11,149,134
2006	12,234,160	5,018,884	41.0	47.0	10,677,789
2005	11,902,400	4,882,670	41.0	46.7	10,449,182
2004	11,824,074	5,076,763	42.9	49.7	10,210,629

□ 소상공인 부문 종사자 수 증감율을 보면, 2010년까지는 등락을 거듭해 왔으나, 그 이후 3년 동안은 감소하다가 2014년 큰 폭으로 상승

○ 4.03% ('11) -> 2.31% (' 12) -> 1.77% (' 13) -> 4.64% (' 14)

<표 4-4> 한국 소상공인 부문 종사자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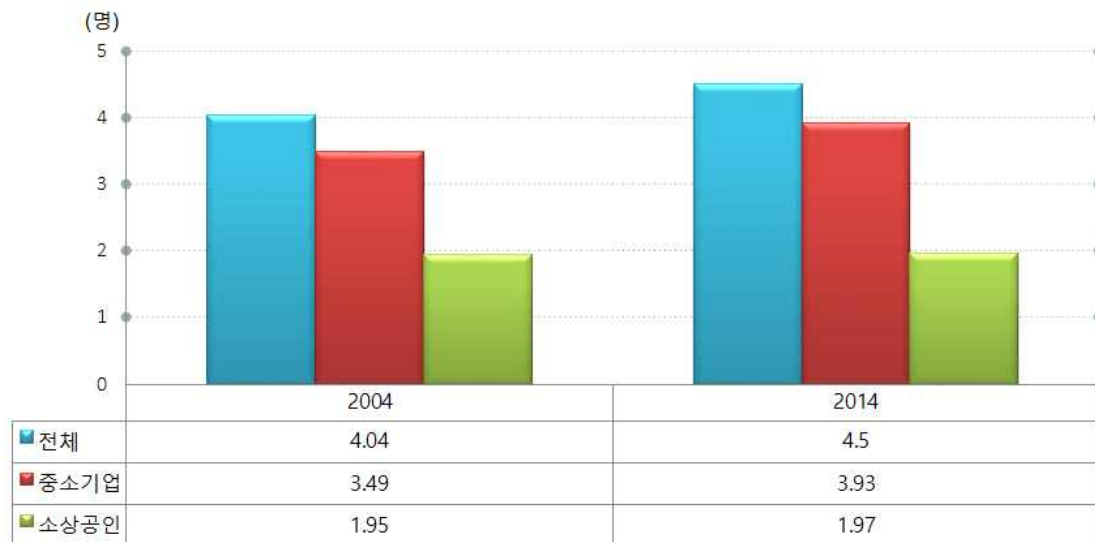
(단위 : 명, %)

년도	소상공인		
	종사자 수	증감	증감률
2014	6,046,357	268,592	4.64
2013	5,777,765	100,752	1.77
2012	5,677,013	128,272	2.31
2011	5,548,741	215,180	4.03
2010	5,333,561	115,639	2.22
2009	5,217,922	22,931	0.44
2008	5,194,991	92,413	1.81
2007	5,102,578	83,694	1.67
2006	5,018,884	136,214	2.79
2005	4,882,670	-194,093	-3.82
2004	5,076,763	-42,662	-0.83

□ 지난 10년 동안 중소기업 사업체 당 종사자 수 증가 폭에 비해 소상공인 사업체 당 종사자 수는 거의 변화가 없음.

-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업체당 3.49명에서 3.93명으로 12.6%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의 경우 1.95명에서 1.97명으로 1.0% 증가에 그침.

<그림 4-6> 한국 소상공인 사업체 당 종사자 수 추이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2016)

3) 한국 소상공인 정책 동향

□ 한국의 소상공인 정책은 IMF 외환위기 이후 실업해소 등을 위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

- IMF 외환위기 이전 「유통산업발전법」에 ‘시장’을 등록하는 규정만 존재하였으나, 2000년 이후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지원근거 마련

* 「소기업 지원 특별법」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으로 변경되었고(00.12),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법」을 제

정('02.1)

- ‘소상공인지원센터’ 최초 설치(14개) 및 시설현대화 지원을 시작(' 02)

□ 2004년 정부합동 정책을 마련하고, 2009년에는 ‘골목상권 보호’ 제도를 신설

- ‘소상공인·재래시장 혁신대책(‘04)’, ‘영세 자영업자 종합대책(‘ 05) ‘ 등을 수립 및 추진하고, 중소기업청에 전담조직 (소상공인 지원단)을 신설(' 05)
- 「재래시장 특별법」이 분리·제정(‘05)되어 법적 근거가 확충되고, 소상공인 교육·컨설팅(‘07), 온누리상품권(‘09) 등 시책을 신설
- 사업조정제도 대상에 유통업을 포함(‘09)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도입(‘10), (준)대규모점포 영업규제(‘12) 신설 등 골목상권 보호제도를 도입

□ 現 정부 들어 소상공인·전통시장 종합지원체계를 완비

- 「도시형소공인 지원법」 제정(‘14.5), 기존 법률에서 소기업을 분리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전면개정(‘14.12) 등 기반 구축
-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 특성에 맞춘 육성정책 추진을 위해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5.5)
- 「생애주기 단계별 자영업자 대책(‘ 14)」, 「전통시장 활력회복 대책(‘15)」 등을 마련하고 2조원 규모의 전용기금 신설(' 15)
-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행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과 민간 업계 중심의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 출범('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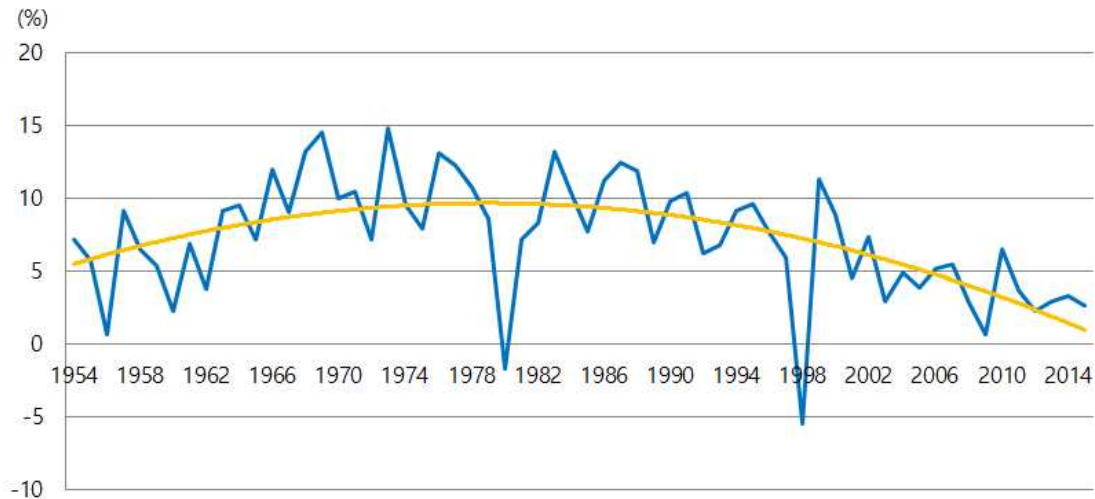
4) 한국 경제·사회 동향

(1) 저성장 기조의 고착

□ 한국의 경우, 5% 이상의 신흥개도국 고성장은 종료

- 3~4%대의 안정적 경제성장률을 확보하는 것이 이미 주요과제로 대두
 - 2011년부터 세계 경제성장률을 하회
- 2016년도 2%대 성장률 기록 전망 (2.7% IMF, 2.9% Bloomberg, 2.6% A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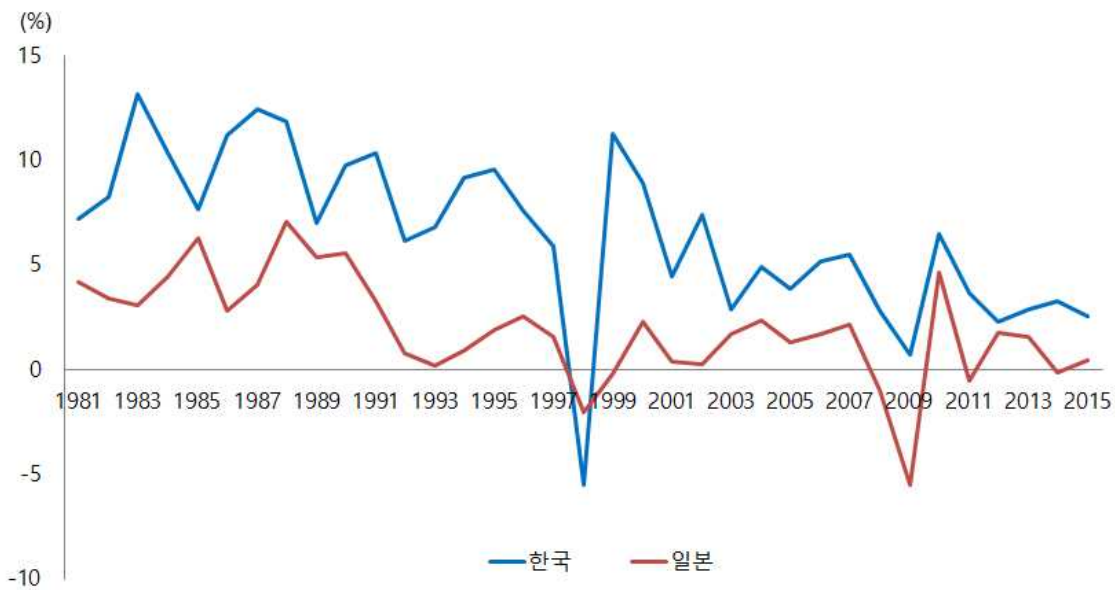
<그림 4-7> 한국 경제성장률 추이 (1954~2015)



자료 : 한국은행

- 경제성장 경로를 보면, 20년 시차를 두고 일본의 성장경로를 답습하는 모습
 - 2000년대 들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추이가 과거 일본의 198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 추이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림 4-8> 한국과 일본의 경제성장률 추이 비교



자료 : 한국은행, 일본 중앙은행

(2) 인구 감소와 고령화

□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 3,704만 명에서 2017년에는 3,702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⁹⁾

- 53.0% (1966) → 73.1% (2012) 정점 → 지속하락, 63.1% (2030)
→ 49.7% ('60) (통계청,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 반면에 고령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2.9% (1960) → 13.0% (2016) → 지속 증가, 24.3% (2030)
→ 40.1% (2060)
- 이에 따라 1960년 152위에 그쳤던 고령인구 비중이 2030년 15위로 급상승하여 2060년에는 카타르에 이어 2위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
- 2017년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를 넘기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 2060년에는 40%대로 급등할 것으로 예측

9) 대한상공회의소 (2016.5.15)

□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6년의 GDP가 2014년보다 7.95% 하락할 것” 이라고 예상¹⁰⁾

- 고령화율이 1%p 높아지면 GDP가 약 0.9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한국의 고령화율이 2014년 12.68%에서 2026년 20.83%로 8.15%p 상승하면 2026년 GDP는 7.9% 하락할 것으로 예상
- 2050년 한국의 고령화율이 35.1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여(UN), GDP는 2014년 대비 21.9%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
- * 초고령사회란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20%를 넘는 사회를 의미

□ 고령화에 따른 GDP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

- 2026년 고용률을 2014년(65.3%)보다 최소 7.8%포인트 높은 73.1%까지 끌어올려야 현재 수준의 GDP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이를 취업자 수로 환산하면 2026년에는 2014년보다 약 287만명의 취업자가 늘어나야 하는 셈으로,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파견법 개정,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정착, 대체근로 허용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 또한 취업 구조를 단순노동 중심에서 전문지식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3) 소비 및 소비심리 위축

□ 소비성향이 최근 3년 연속 일본보다 낮은 수준¹¹⁾

- 한국과 일본 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가처분소득 대비 지출 비율)을 분석한 결과¹²⁾, 한국의 소비성향은 2010년만 해도 75.2%

10) 한국경제연구원(2016.8)

11) 조선일보(2016.8.6.)

12) 평균 소비성향(가처분소득 대비 지출 비율)은 전체 소득 가운데 세금·공과금·국민연금·대

로 일본(72.7%)보다 높았음.

- 그러나 이후 한국은 소비성향이 계속 낮아지다가 2013년부터 일본에 역전 당했으며, 2016년에는 역대 최저치인 70.3% (일본은 72.6%)를 기록

□ 문제는 가처분소득이 매년 2~6%씩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비만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는 것임.

- 소득 자체가 증가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는 상황에서 소비가 줄어드는 일본의 경우와는 대비되는데, 한국은 개인들이 미래 불안으로 소비를 미리부터 줄여가는 바람에 불황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에 빠져들 우려가 있음.
- 고용, 주거, 노후 불안 등 3대 불안이 동시다발적으로 증폭되면서 최근 한국 사회가 급속하게 '소비절벽'에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

□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입장에서 소비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음.

- 자산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황을 맞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서 허리띠를 급속히 졸라매고 있는 상황
 - 2015년 말 기준 한국 국민이 보유한 순자산은 총 1경2359조원, 가구당 3억6000만원으로 일본의 가구당 순자산(46만1000달러)의 70% 수준이지만, 그 중에서 75%가 부동산 자산이라 대부분 필요할 때 지출하기 어려운 실정

□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국민들이 소비하지 않으면 경제 활력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임.

- 경제 불안→고용 불안→저축 증대→소비 위축→경기 위축이라는 악순환을 유발하는 고리 역할

출이자 등을 내고 남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소득(가처분소득)에서 생활비(식료품·통신·교육·의료비·월세 등)로 지출한 비중을 의미

- 일본이 20여년 전에 겪었던 ‘저축의 역설’이 한국 경제에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지 불투명하다는 것임.

- 수출과 소비, 기업들의 투자나 고용 등 경제상황이 당분간 개선되기 힘들어 보이기 때문
- 수출의 경우 1년째 감소하고 있으며, 수출 감소 → 투자 감소 → 수입 감소 → 무역수지 흑자 → 원화 강세 → 수출 감소의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
-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청년층의 취업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결국 앞으로 소비를 더욱 줄일 수 있는 상황

(4) 저물가

□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은 여타 지역에 비해 물가상승률이 매우 낮은 편인 것으로 파악됨.¹³⁾

- 특히 한국은 마이너스 GDP갭(실제GDP와 잠재GDP 간의 차이)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
- 마이너스 GDP갭이란 실제GDP가 잠재GDP를 밑돈다는 것으로, 한 경제가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수준 이하에서 조업하고 있다는 의미로서, 저물가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것임.

□ 중장기적으로 일본형 부채디플레이션과 제로금리정책(zero interest rate policy) 가능성을 배제하기 곤란하다고 진단¹⁴⁾

- 부채디플레이션(debt deflation)이란 물가 하락으로 실질금리(명목금리-물가상승률)가 상승하면 채무상환에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보유자산을 서둘러 매각하면서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경기침체가 장

13) BNP파리바

14) 노무라연구소

기화되는 현상

-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달 째 0%대에 그쳤으며, 7월에 전년 동월대비 0.7% 상승, 지난 5월 0.8%를 기록하며 3개월만에 0%대로 떨어진 이후 6월 0.8%를 거쳐 3개월 연속 1%를 하회, 상승폭 0.7%는 지난해 9월 0.6% 이후 최저 수준

2. 일본 소규모사업자 동향의 시사점

1) 일본 소규모사업자 감소

□ 20년 이상 지속된 장기 경기침체로 지역을 사업 활동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사업자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러한 일본의 장기불황은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 원인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점에서 그 영향의 범위가 넓고 크기도 크기 때문에 회복에도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

□ 일본의 장기불황은 엔고, 버블 붕괴, 정부의 대응 미흡, 제조업 경쟁력 약화, 소비심리 위축이 야기한 디플레이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엔고가 진행되면서 제조업 경쟁력을 상실한 결과, 제조업 공동화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의 이중고를 겪었음.
-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해외진출, 지역 제조업 공동화로 지역 서비스업의 쇠퇴 등으로 확산

□ 인구 고령화는 장기불황을 가중시키고, 사업승계 어려움의 원인으로 작용

-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각종 소비재 시장을 위축시키는 압력으로 작용

- 특히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경영자의 고령화가 심한 가운데 적절한 후계자를 찾기 못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폐업하는 경우가 급증

□ 이러한 경제사회 전반의 여건 작용의 결과로 소규모사업자 수가 지속 감소

- 내수 부진, 경쟁력 약화로 제조업의 공동화, 인구구조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퇴출
- 특히 경제상황에 상대적으로 더욱 민감한 소규모사업자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어 그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표 4-5> 일본 소규모사업자의 감소 개요

구 분	내 용
소규모사업자 수	□ 1986년 약477만을 피크로 지속 감소 □ 1986~2014년 27년간 약 152만 감소 □ 27년 동안 연간 평균 5.6만 감소 □ 2009~2014년 최근 5년 동안 연간 평균 10.5만 감소
소규모사업소 수	□ 1989년 약509만으로 피크 기록 이후 감소 □ 1989~2014년 24년 동안 약 108만 감소 □ 24년 동안 연간 평균 4.5만 감소 □ 24년 동안 전체 사업소 수 감소의 97.3%
소매업 (음식점 포함) 소규모사업소 수	□ 소규모사업소 중 가장 먼저 감소 시작 □ 1981~2014년 동안 절반 이상 감소(207만 -> 102만) □ 음식료품 소매업이 가장 먼저 감소, 가장 많이 감소 □ 음식점은 1980년 중반까지 급증하다가 이후 지속 감소

□ 인근 지역을 사업 활동의 기반으로 하는 대부분의 소규모사업자는 지역경제의 쇠퇴와 더불어 그 상황이 더욱 악화

- 제조업 공동화와 더불어 지역 제조업의 쇠락은 서비스업에도 타격을 주고, 근로자는 지역에 직장을 구하기 어렵고, 기업은 고령화로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대도시에서 집중

- 이처럼 지역경제의 쇠락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사업자의 기반 자체를 상실케 하는 결과를 초래

2) 시사점

□ 일본과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성장경로 또한 20년의 시차를 두고 유사하다는 점에서 일본의 사례는 한국에 중요

- 더욱 주목되는 점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초래하였던 경제 사회 현상들의 한국에서도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는 것
 - 일본 기업들이 과거 겪었던 주요 어려움인 낮은 성장률과 저출산·고령화 등은 한국 기업들이 이미 겪기 시작
 - 또한 최근 한국에서 낮은 물가로 디플레 우려가 커지고 또 소비심리도 계속 떨어지는 등 유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음.

□ 일본 소규모사업자의 지속 감소와 이를 초래한 과거 일본의 제반 여건들, 정부와 기업의 대응 등은 한국의 대응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 일본의 사례가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유사한 성장경로를 시차를 두고 밟아왔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중에 일본의 경우와 유사한 면들이 있다는 점에서 먼저 경험한 일본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임.

□ 일시적 경기부양책보다 근본적 성장역량 확충이 더욱 중요하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 만성적 공급과잉과 과소소비 등이 문제가 되는 경제구조 속에서는 정부나 기업 차원에서의 대응이 부진하면 경제가 장기간 침체하기 쉽다는 것을 일본의 사례가 보여 줌.
- 경기불황기 일본 정부의 대응책은 대체로 실패했으나, 그 중에서

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정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일본 정부는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각종 경기부양책을 해마다 실시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점차 근본적인 성장동력 확충 전략을 내놓기 시작

① 신경제 성장전략(2006.6) : 이노베이션을 강조, 성장력 가속화 정책(2007.4) : 생산성 향상, 인재 육성, 서비스 혁신, 규제완화 등을 강조, 경제성장전략(2008.6) : 인구 감소 사회 대응, 젊은 층 여성 고령자 참여, 의료산업 육성 등을 강조, 미래개척전략(2009.4) : 저탄소혁명, 건강 장수, 관광입국화 등을 강조, 신성장 전략(2009.9) : 환경, 건강, 관광 등을 중시

② 일본의 투자입국화 전략도 주목

③ 친환경·장수사회를 위한 기반 마련 정책도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

④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각종 서비스업의 성장에 기여 : 부동산 유통화 정책과 함께 2002년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도입해 주요 도시와 지방 중소도시의 개발을 촉진 하여 일본의 주거, 상업, 관광 시설의 고도화를 촉진

⑤ 각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강구 : 지방경제활성화에는 어려움이 많으나, 지방경제의 핵심인 토착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력, 특히 농업의 선진화에 힘을 기울임.

- 이러한 일본의 경험은 새로운 성장 동력과 내수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할 한국 경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으며, 특히 저출산, 인구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성장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 조정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임.

□ 한국 역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육성, 기존 제조업의 첨단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신성장전략과 내수 확대 정책의 포괄적인 추진이 중요함을 시사

- 이와 더불어 여가문화 수요 증가와 연계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정책이나, 건강의료 수요 확대를 위한 외국인 환자 유치 등 관광 수

요와 내수를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

□ 강점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

- 경기 침체기에는 소비 심리가 위축될 뿐만 아니라, 줄어든 수요를 차지하기 위한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됨.
- 따라서 기존 제품을 조금씩 개량한 제품들은 소비자의 주목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상식을 뛰어 넘는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이 중요
- 전문기업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인 것은 저성장기에는 강점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유효하기 때문

□ 시장을 보다 세분화하여 접근·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

- 일본의 장기침체기 중에 사람들의 소비 행태와 흐름이 뚜렷하게 변화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
 - 재화에 대한 소비보다 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더 높아지고,
 - 선택적 소비보다 필수적 소비가 더 빨리 증가하며,
 - 유행에 쉽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가치 있는 좋은 제품이나 브랜드를 꾸준히 지지하는 경향
- 즉 구매력뿐 아니라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 나아가 사회구조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한 방향의 소비 패턴이 주류를 형성하기 보다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다양한 소비 패턴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은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힘쓰는 동시에 소비 세그먼트를 한층 세분화시켜야 한다는 것임.

□ 수요가 서비스로 이동하면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소프트 가치가 체화된 제품이 더욱 중요해짐을 시사

- 일본의 경험에 의하면, 장기불황기에는 시장구조의 변화에 맞게 자사 기술의 강점을 진화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

- 서비스 가치를 제품에 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에서 강조하고 있는 ‘코토즈쿠리’에 주목할 필요
- 일본은 기존의 ‘모노즈쿠리’만을 강조해왔던 전략에서 모노즈쿠리 기반 위에 코토즈쿠리, 즉 새로운 체험을 강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기업 간 상호의존 관계가 약해지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자도 스스로 시장을 개척하여 수요를 개척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기존 대기업과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 의존 관계를 바탕으로 수탁가공 사업을 중심으로 해 온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는 대기업이 시장에서 획득해 온 수요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었음.
- 그러나 글로벌화의 진전 등을 배경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 사이의 상호 의존관계가 약화된다는 것임.

<표 4-6> 일본 사례가 주는 시사점

분 야	시 사 점
기업과 정부의 대응	□ 경기부양보다 근본적 성장역량 확충이 더욱 중요 □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부 대응
산업 고부가가치화	□ 기존 제조업의 첨단화 □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내수 확대	□ 신성장전략과 내수확대 정책의 포괄적 추진 - 여가문화 수요증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 건강의료 수요확대를 위한 외국인 환자 유치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전략	□ 강점 분야에 집중 □ 혁신적 신제품 개발 중요 □ 신규 고객 및 판매처 개척, 우수인재 확보 및 육성, 기술 개발 확대에 초점
시장전략	□ 시장 세분화 - 장기침체로 소비 행태와 흐름이 뚜렷하게 변화 □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소비 세그먼트 한층 세분화
소프트전략	□ 수요가 서비스로 이동 □ 소프트 가치가 체화된 제품이 더욱 중요 - ‘모노츠쿠리’ -> ‘코토즈쿠리’
기업 간 전략	□ 기업 간 상호 의존관계 약화 - 기업규모별 성장 패턴의 변화 □ 소규모기업자도 스스로 시장개척, 수요 획득

□ ‘신규 고객·판매처의 개척’ 과 더불어 ‘우수한 인재의 확보 및 인재 육성’, ‘기술개발 확대’ 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

- 대기업과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의 장기적인 성장 패턴을 보면 1980년대는 동반성장이 가능했으나, 1990년대에 변화가 생기며 2000년대 들어 같은 규모의 기업 간에도 수익성 차이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변화
- 같은 규모의 기업 간 수익성 차이는 추세적으로 확대되며, 특히 소규모기업 간 차이가 확대되고 있으며 저수익 기업의 수익력이 더욱 감소

3. 한국 소상공인 정책방향

□ 소상공인 부문에 대한 기존의 논의가 주로 경기침체 및 노동 시장 여건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과 단기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저성장 기조의 고착 또는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에 대한 소상공인 부문의 대응 논의는 미흡
- 특히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구조적 문제에 대비한 정책방향의 설정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

<표 4-7> 한국 소상공인 문제에 대한 논의의 쟁점

자영업 부문의 특징	자영업 현실
1. 양적 과다, 출혈 경쟁 2. 다생다사, 낮은 생존률 (3년 생존율 50% 이하) 3. 창업 준비 미흡 4. 40대 50대 중장년층 중심: 50대, 60대 비율 증가 5. 퇴직자들 생활밀접 업종에 집중 창업 6. 창업자금 감소 및 무등록 영세상인 증가 7. 낮은 월수입(150만원 이하), 운영비(월세 및 관리비 등) 부담 8. 높은 가계부채	1. 유행 업종으로 밀집하여 출혈경쟁 2. 강요된 창업 구조 3. 정부의 창업권장 정책 4. 대기업의 지배력 횡포, 골목상권 침투 5. 임차료와 권리금 부담 6. 비전 없는 미래
요인	기존에 제시된 대안
1. 경기침체, 내수부진 2. 불안정한 고용시장 3. 과도한 경쟁 4. 대기업의 골목시장 침투	1. 자영업자의 임금노동자 전환 2. 대기업의 약탈적 시장진입 제한 3. 정규직의 과도한 보호 지양 4. 최저임금 인상

□ 향후 소상공인 정책의 수립 시에는 이러한 돌이킬 수 없는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경영 환경을 전제로 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

- 일본의 사례에 의하면, 경기순환적인 일시적 경기침체보다는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인 요인에 의한 사업 환경 변화가 소규모사업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보다 큰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영향의 기간이 길다는 것임.

□ 만일 한국이 과거 일본사례를 답습하게 된다면, 일본보다 월등하게 열악한 여건에서 출발하게 되며, 따라서 일본 보다 큰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함.

- 1990년대 초 일본의 1인당 GDP는 한국의 2015년 수준을 이미 넘었으며, 해외자산을 포함한 자산부국이었던 점
- 내수시장 규모가 커서 해외여건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점
- 한국의 경우, 소규모사업자 및 자영업자의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
- 고령화에 대비한 재정 및 개인의 준비와 여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 등

□ 경제·사회의 지속성장과 안정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격차 해소는 중대한 의의를 가지며, 이러한 관점에서 소상공인 부문의 성장과 발전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필요

- 앞서 언급하였듯이 지역경제 성과의 총합이 국가경제 성과이며 소상공인은 지역사회의 기초인 동시에 기반이기 때문에, 경제·사회 지속성장과 안정에 대한 소상공인 부문의 역할과 중요성은 결코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될 것임.
-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될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포함한 지방 사이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임.
- 또한 대기업의 지배력 확대에 의한 폐해, 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사례 등도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음.

□ 소상공인 정책은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환경과 경제 및 산업 정책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

- 소상공인 정책은 중소기업 정책의 일부이며, 중소기업 정책은 산업 및 경제 정책의 일부로서 다루어지는 관계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은 종사자 수 또는 매출액 등 부문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만, 숫자가 300만이 넘기 때문에 정책 대상이 많고 다양한 업종과 특성을 가진 매우 이질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정책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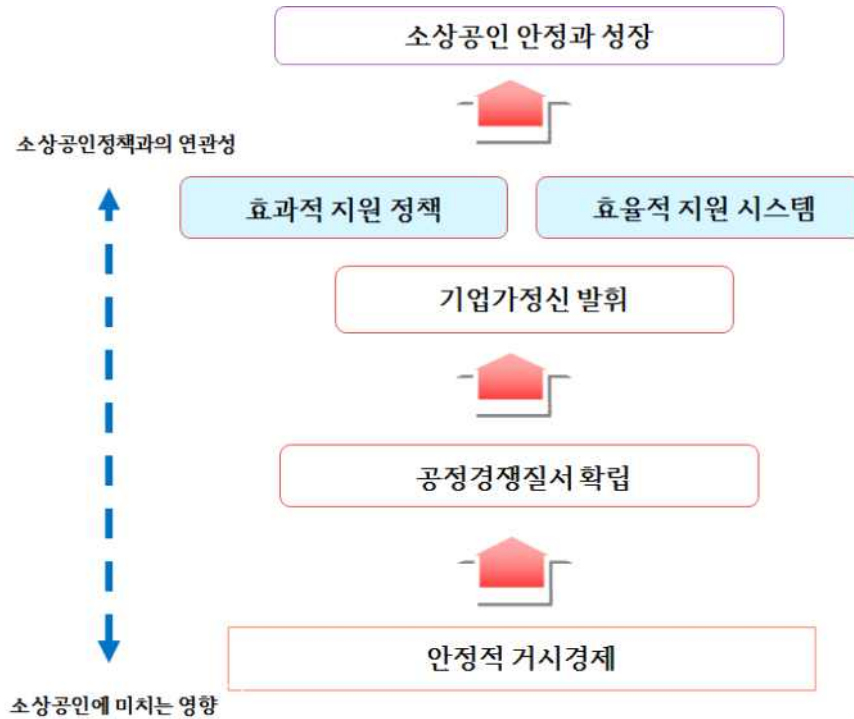
□ 먼저 소비, 투자 소득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경제 및 산업 정책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필수적

-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와 기업의 수익 향상, 이를 개인의 임금과 소득 향상에 연결해 소비가 확대되고, 그리고 소비의 확대가 다시 기업의 설비투자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을 실현해 나가야 함.
- 소상공인 부문의 안정과 성장은 지역경제의 향방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소상공인에 가장 폭넓게 또한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은 거시경제 상황임.

- 안정적 거시경제 기반, 공정한 경쟁질서 기반 위에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는 소상공인이 많이 배출되어야 기본적인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임.
-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일부가 지원정책의 대상이 되고, 그나마 효과적이고 지원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제한적임.

<그림 4-9> 소상공인 안정 성장과 지원정책



□ 소상공인 정책의 목적은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 및 대비한 소상공인 부문의 ‘안정’과 ‘성장’임.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 지역산업 육성
 - 생산성 향상
 - 시장 확보와 개척
 - 신진대사 촉진
 - 사회안전망 확보

<그림 4-10> 소상공인 정책 방향



- 지역산업 육성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부문의 안정·성장을 위해 기본적인 전략들을 포함
 - 농업 부문의 선진화를 포함한 지역의 토착산업 육성, 기존 지역 제조업의 첨단화, 고부가가치 지역 서비스업 육성, 지역별 창업 촉진, 지역기반 수요 창출(외지 관광객 유치 등), 신분야 진출 촉진, 기업 가치와 사회 가치 창조의 선순환 (CRSV), 지역 플랫폼 정비 (기관 간 네트워크 정비)
- 생산성 향상은 소상공인 부문의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의 일부로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전략들을 포함
 - 혁신, 고부가가치화, 원가절감, 교육 및 상담 질적 수준 제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컨설팅(경영상담), IT를 활용한 경영자원 확보와 과제 해결
- 시장 확보와 개척은 한정된 지역수요를 확대하고 새로운 시장과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것
 - 해외진출 촉진(민관 지원기관 네트워크, Web 플랫폼 활용), 다양해

지는 소비자 행태 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한 소비 세그먼트 세분화, 소프트 가치 체화된 제품과 서비스 개발로 새로운 수요창출

□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겪는 가장 큰 문제가 인재 확보이며, 고령화시대에 인력 및 사업 활동의 신진대사 촉진은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에 중요

○ 인재 확보와 육성, 가족을 중심으로 한 후계자 육성, 폐업 원활화를 통한 사업 활동의 신진대사 촉진

□ 경제·사회구조 변화와 불안정성에 대비하기 위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확보

-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 공제제도 구축, 정보 및 교육 제공의 내실화

V. 요약 및 결론

- 20년 이상 지속된 일본의 장기불황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 때문이며, 이 과정에서 지역경제가 피해를 입고 소규모사업자는 30년 동안 계속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함.
- 한국이 장기불황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겪을 가능성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일본 사례를 재조명하였음.
- 구조적이고 중장기적 도전의 특징은 영향의 크기가 예상보다 크고 기간도 길다는 것이며,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대응도 월등하게 높은 강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공유해야 할 것임.
- 소상공인 부문은 지역경제의 근간이며, 지역경제 성과의 총합이 국가 경제의 성과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가 소상공인 문제를 다루어야 함.
- 향후 한국과 일본의 경제, 산업, 기업 등 각 부문의 동향과 대응에 보다 높은 관심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다각적인 조사와 종합적인 분석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1. 요약

- ☐ 20년 시차를 두고 일본의 경제발전 경로를 쫓아가고 있는 한국은 30년 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는 일본의 소규모사업자 동향이 주는 의미에 주목할 필요
 - 일본 소규모사업자의 지속적 감소는 경기변동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경제사회 변화 때문
- ☐ 한국은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인 경제사회 변화가 소상공인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과 대응 노력이 매우 부족
 - 일본 소규모사업자의 동향 파악, 원인 분석, 한국 소상공인 부문에 주는 시사점 도출, 향후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였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음.

- 일본의 소규모사업자는 상시 종사자 수에 의해 정의되며, 한국 소상공인보다 범위가 넓고, 따라서 업체 당 평균 종사자 수가 한국보다 많음.
 - 한국 소상공인보다 법인업체 비중과 상시 종사자를 보유한 비중이 높음.
 - 일본 소규모사업자는 한국 소상공인과 같이 업체 수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종사자 수 비중은 낮고, 매출액 비중은 더욱 낮음.

- 일본의 소규모사업자는 198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4년까지 약 152만 감소하여 연간 평균 5.6만 감소한 셈
 - 소규모사업소 수는 198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4년까지 연 평균 4.5만, 총 108만 감소
 - 1989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소 감소의 거의 대부분을 소규모사업소가 차지

- 소매업(음식점 포함)이 가장 먼저 감소 시작하고 또한 가장 많이 감소하여 절반 이상 감소
 - 소매업 중에는 음식점과 음식료품 소매업이 가장 많이 감소

- 일본 소규모사업자 매출액의 약 60%가 지역상권 내에서 발생되며, 최대 애로사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임.
 - 60세 이상의 소규모사업자 비중이 대폭 증가한 반면, 30세 미만의 비중은 대폭 감소

- 일본 소규모사업자의 지속 감소 원인은 장기불황,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과소화 및 대도시 집중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쇄, 대기업의 국내거점 폐쇄·재편 및 해외진출 확대 등 때문임.
 - 1990년대 초 버블 붕괴가 장기불황의 직접적인 계기였으나, 정부

의 초기 금융정책 실패, 구조혁신 지연 등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극도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디플레이션에 빠진 것이 가중

□ 경기침체 장기화, 디플레이션, 엔고의 악순환이 진행되면서 수출 및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난 가중이 특히 지방 중소도시 중소서비스업에 심한 타격

- 유통대기업의 시장지배력 증대와 소비행태 변화와 대응부족, 창업률보다 높은 폐업률, 실질임금 하락 등도 소규모사업자 감소에 영향
- 저출산·고령화로 2000년대 이후 지방의 명목 경제성장률이 대부분 (-)를 기록하였고, 특히 자영업비율이 대폭 낮아짐.

□ 일본은 장기적 경제부흥을 위해 감소추세를 극복하고 경기활성화로 연결해야 한다고 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규모기업의 도전 지원에 초점

- 일본은 「중소기업기본법」을 비롯한 다수의 법률이 개정·제정하였으며, 2014년 제정된 「중소기업진흥기본법」에는 소규모기업진흥을 위한 4대 목표와 10개 중점시책을 설정하고 추진
- 또한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으로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창업률 제고, 후계자 육성, 폐업대책, 해외진출 확대, IT활용을 통한 외부자원 활용 등도 강조되고 있음.

□ 지난 10년간 한국 소상공인과 종사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비중은 감소하고 평균 종사자 수는 거의 변화가 없는 특징을 보임.

- 가장 수가 많은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업 비중도 같은 기간 중 감소

□ 장기불황을 초래했던 일본의 경제사회 현상들이 일부가 한국에도 상당부분 나타나고 있지만, 현 한국 여건이 당시 일본보

다 열악하다는 점이 문제

- 20년 이상의 장기 경기침체를 겪어 온 일본의 소규모사업자는 이미 30년 전부터 감소해 지역경제 파폐, 기업 및 지역 간 양극화 심화

□ 일본사례의 원인과 정부·기업의 대응은 경제발전 경로 및 산업구조가 유사한 한국의 소상공인 부문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 일시적 경기부양책보다 근본적 성장역량 확충을 위한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지역경제 활성화, 내수확대,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기존 제조업의 첨단화 등의 경제·산업정책을 포괄적으로 추진해야 함.
- 소규모기업은 강점 분야에 집중,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 판로개척, 인재 확보·육성, 시장 세분화 등의 전략이 필요
- 특히 기존의 기업 간 상호의존 관계가 약화됨에 따라 자체적 경영 활동 강화에 주력해야 함.

□ 한국의 상황과 일본 사례에 비추어 향후 소상공인 정책방향은 다음의 내용을 주목하여 설정되어야 할 것임.

- ① 지역, ② 생산성, ③ 수요개척, ④ 인재 및 신진대사, ⑤ 사회안전망 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임

2. 결론 및 향후과제

1) 결론

□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일본 경제가 20년의 장기불황에서 아직 뚜렷한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엔고, 정부대응 실패 -> 정부 대응 실패, 버블붕괴 -> 신흥국 기업의 추격, 제조업 경쟁력 약화 -> 제조업 해외이전, 제조업 공동화 -> 지역경제 위축
- 중소기업의 경영악화 -> 각 지방 중소도시의 어려움 가중 -> 지역 서비스업에 타격 -> 지방도시 중심가의 상점가 폐허화
 - 거점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쇼핑하는 소비행태 -> 소도시와 농촌 지역 상권 몰락 가속
- 저물가 속에서 소비심리 극도로 위축 -> 장기불황 돌입 -> 소규모 사업자 경영악화
- 저출산, 인구 고령화 -> 지방권이 더욱 심각 -> 도농 간 양극화 -> 지방권 GDP 감소, 시장 위축 -> 특히 고령 경영자의 폐업 증가

□ 이 과정에서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영이 악화되고 30년 가까이 계속 수가 감소

- 최근까지도 일본의 소규모기업의 체감 상황은 버블 붕괴이후 크게 개선되지 않음.
- 일본에서는 중장기적인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로 중소기업과 소규모사업자의 경영 환경은 더욱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소규모사업자 수가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경영자의 고령화 진행에 따른 원활한 사업승계나 기업·창업 등의 변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감소하는 중소기업 및 소규모사업자와 지역경제의 쇠퇴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에 우려를 하고 있음.

□ 장기불황을 직접 겪은 일본의 사례를 토대로 한국 경제가 장기침체에 진입했을 때 닥쳐올 혼란에 대비하여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

- 과거 일본과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은 차이가 있고, 일본의 경험을 우리에게 직접 대입할 수는 없으나, 일본의 장기불황 사례를 토대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

□ 구조적인 요인 및 변화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기업과 정부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일본의 사례를 재조명

- 특히 소규모사업자와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준다는 것이 일본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으며, 경기순환적인 경기침체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에 의한 영향이 보다 크고 동시에 파급기간이 길어서 회복도 어렵다는 것

□ 중장기적 문제의 특징은 도전의 크기가 훨씬 커졌다는 점이며, 따라서 그에 대한 대응 역시 훨씬 더 강도가 높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낮아진 상황에서 자산 버블 붕괴가 일본의 경기침체를 촉발시켰다면, 경제가 다시 반등하는 것을 어렵게 하여 부진을 장기화시켰던 요인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1990년대 후반부터 발생한 디플레이션으로 물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경제 주체들의 혼란이 커진 점
 - 경기침체 지속 → 소비심리 위축 → 성장 저하 → 소비심리 위축 악순환
 - 경기침체 리스크를 낙관 → 일본 정부의 미숙한 정책 대응 → 경기 부진 장기화, 부작용 심화
- 최근 한국에서도 낮은 물가로 디플레 우려가 커지고 또 소비심리가 계속 떨어지는 등 유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임.

□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지역경제의 총합이 국가경제라는 인식으로 소상공인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임.

- 소상공인 부문에 대한 논의가 주로 경영의 어려움과 단기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관계로, 저성장 기조의 고착 또는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에 대한 소상공인 부문의 대응 논의는 미흡
- 소상공인 문제는 이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경영 환경을 전제로 하여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

2) 향후 과제

□ 단기적 현안과 중장기적 과제를 포함한 소상공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할 필요

- 한국이 처한 경제사회적 상황, 향후 변화, 소상공인 부문에 대한 영향, 일본의 사례 등을 근거로 소상공인 문제를 재조명해야 한다는 공감대와 인식의 확산이 필요

□ 다양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분야별로 확대해야 함.

- 주로 현안을 다루기 위한 기본적인 정기적인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 그룹, 과제 등의 소상공인과 이슈에 대한 실태조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과 일본의 경제, 산업, 기업 등 각 부문의 동향에 대한 보다 높은 관심이 필요하며, 면밀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양국의 보다 세밀한 분야별 분석, 각 부문별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그 차이와 원인과 배경 등을 파악할 필요